

예산춘추

BUDGET & POLICY

2026 | 세 번째(8월) | VOL. 83

특집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 방향
2025회계연도 결산 주요 분석 내용

현안 진단

지방선거 이후 대한민국의 미래
방한 인바운드 관광의 성장과 지역관광 활성화 전략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한국 경제

WORK & REPORT

예산정책자문위원 기고
NABOSTATS의 주요 통계 소개
NABO 발간보고서 소개
예산정책연구 논문 소개

FISCAL STORY

현실 세계로 나온 AI, '피지컬 AI' 시대가 온다
러다이트 운동의 재조명
K-오리지널 IP의 생애 주기와 플랫폼 경제



contents

2026 Vol. 83

「예산춘추」에 수록된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친환경 국회 실천을 위해 친환경 종이와 공기를 잉크를 사용했으며,
재활용이 쉽도록 표지 코팅과 후가공은 하지 않았습니다.

특집

국회 결산심사의 의의와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 방향 06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 방향:
규모가 아니라 전략이다 12
대한민국 재정, 이제는 'Strategy First'로
전환해야 한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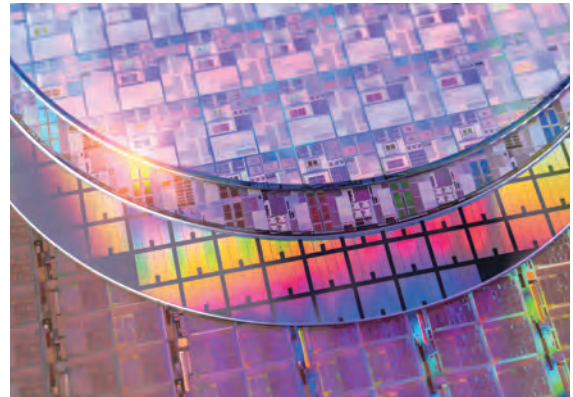
2025회계연도 결산 주요 분석 내용 18
임명현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

현안 진단

지방선거 이후 대한민국의 미래:
자치분권과 균형성장의 길 26
소순창 건국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방한 인바운드 관광의 성장과 지역관광 활성화 전략 32
안희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정책연구실장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한국 경제:
지붕은 해가 떠 있을 때 고쳐야 한다 40
김동영 KDI 전문연구원 중앙대학교 겸임교수



발행일 2026년 8월 14일(통권 83호)

편집위원회 위원장 정석배 기획관리관
위 원 박애린 정책총괄담당관
박연서 세제분석1과장
유민호 예산분석관
간 사 김형진 기획예산담당관
편 집 황록연 주무관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 02-6788-4619 ☎ 02-6788-4686 ● www.nabo.go.kr ● www.instagram.com/nabokorea

발행인 지동하 국회예산정책처장

서재만 예산분석총괄과장
박미정 경제분석총괄과장
장설희 추계세제분석관
변재연 경제산업사업평가과장
허가형 인구전략분석과장
황진술 경제분석관

김신애 추계세제총괄과장
위진수 홍보·공보담당

WORK & REPORT

예산정책자문위원 기고: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권순만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48
NABOSTATS의 주요 통계 소개: 지방자치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는 지방재정통계 노현정 정책총괄담당관실 정책분석관	52
NABO 발간보고서 소개	56
예산정책연구 논문 소개	81
NABO 소식	85
NABO 직원 이야기 김성훈 사회행정사업평가과 자료분석연구원	86

FISCAL STORY

만화로 보는 알기 쉬운 경제 용어 사전: 지방교부세	90
풀어쓰는 최신 트렌드 경제: 현실 세계로 나온 AI, '피지컬 AI' 시대가 온다 양재찬 더스쿠프 편집인·언론학(경제저널리즘) 박사	92
세계 경제를 바꾼 역사적 사건: 러다이트 운동의 재조명 임성택 매일경제 경제경영연구소 연구원	96
대중문화 속 재정·경제 이야기: 끝난 드라마가 계속 돈을 버는 이유 K-오리지널 IP의 생애 주기와 플랫폼 경제 김치호 한양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100





특집

국회 결산심사의 의의와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 방향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06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 방향:
규모가 아니라 전략이다
대한민국 재정, 이제는 'Strategy First'로 전환해야 한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12

2025회계연도 결산 주요 분석 내용

임명현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

18

국회 결산심사의 의의와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 방향



국회 결산심사는 언론 등에서 그 과정이나 성과를 찾아보기 어려우나 한 회계연도 동안의 정부의 재정운용에 대해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이다. 국회는 맡은 바 책무를 다하여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 임할 것이며, 이번 국회 결산심사에서는 과거의 지출 점검에서 나아가 예산집행의 성과 평가와 함께 정책 개선 방향 또한 제시되어, 결산심사의 새로운 이정표가 마련되기를 바란다.



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들어가며

국회 결산심사의 의미

국회 결산심사는 입법부가 행정부의 예산집행을 감시하는 중요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언론 등에서 국회 결산심사 결과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이에 국민들이 그 중요성이나 결과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 결산심사의 의미와 결과가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 방향을 다루고자 한다.

결산은 중앙정부가 국회에서 확정된 한 회계연도 동안의 예산에 대해서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국회에서 승인받기 위한 의안으로, 국회는 국회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결산심사를 진행한다.

국회는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나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삼권분립에 입각하여 국회가 정부의 재정운용을 감시하고 위법한 지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의미가 있다.

국회 결산심사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진행된다. 결산심사 결과 위법이나 부당의 정도에 따라 각 사업별 또는 해당하는 지출행위 각각에 대해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사항이 결정되며, 필요한 경우 감사원 감사요구 또한 채택되기도 한다. 최근 5년간 국회 결산심사 결과 채택한 시정요구사항 건수는 2021회계연도 결산을 제외하면 1,800~2,200건으로 나타난다.

표 1 최근 5년간 회계연도별 국회 결산심사 시정요구사항 채택 결과

(단위: 건)

결산 회계연도	구분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합계 (중복 제외 ¹⁾)
2020	결산	-	2	220	521	1,175	1,846
	예비비	-	-	-	13	22	35
2021	결산	-	-	77	448	931	1,394
	예비비	-	-	2	9	13	22
2022	결산	-	2	213	594	1,186	1,889
	예비비	-	-	-	18	12	27
2023	결산	-	1	244	793	1,323	2,293
	예비비	-	-	4	15	7	26
2024	결산	-	-	147	432	1,479	1,967
	예비비	-	-	1	5	14	20

주 1) 동일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중복 적용한 경우가 있어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정보위원회 심사 결과 시정요구 제외)

국회의 결산심사보고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국회 의안 정보시스템에 공개되어 있다. 최근 국회 심사 결과인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보고서」를 보면 각 사업별로 시정요구 유형과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법무부의 「교정시설장비운용 및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으로 하여 ‘법무부는 교정시설 과밀화 문제 해결을 위하여 8년간 약 200억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나 해당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는바, 향후에는 관련 예산 집행을 통하여 교정시설 과밀화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청년 고용지원인프라 운영’ 사업에 대해 ‘제도개선’이라는 시정요구 유형으로 ‘고용노동부는 고교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의 사후관리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할 것’이라고 되어 있다. 정부의 재정집행에 대해 국민을 위한 세금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정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c나라도움)과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의 데이터 연계, 공유 등을 통해 보조금 미반납 현황을 파악하고 체계적인 반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효적인 제재 방안, 제도 및 시스템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시정요구 내용이 채택되어 있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보조금을 중앙정부로 반납하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 이를 반납하지 않은 일부 지방정부가 있어 국고 손실이 초래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채택된 사항이다. 국회는 정부의 재정운용 과정에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결산 과정에서 살펴보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국회 결산심사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검토보고서와 국회예산정책처의 결산 분석 등의 뒷받침이 있으며, 이를 토대로



2025회계연도 결산 주요 내용과 심사 방향

국회의원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통한 결산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수많은 노력과 성과에 비해 국회 결산심사 결과가 언론 등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행정부의 재정집행을 감시하는 결산심사는 국회 의정활동에서 매우 중요하다.

전술한 결산심사의 의미와 중요성을 상기하면서 2025회계연도 결산에서 두드러지는 부분과 함께 이번 결산심사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025년은 내란정국에서 탄핵에 이르는 정치 불안이 경기침체와 가계경제의 어려움으로 이어졌다. 그해 3월 의성 등에서 산불이 역대 최대 규모로 발생하여 피해지역 주민이 하루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지원과 피해 복구,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도 필요하였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등으로 대외 불안 요인도 심각한 상황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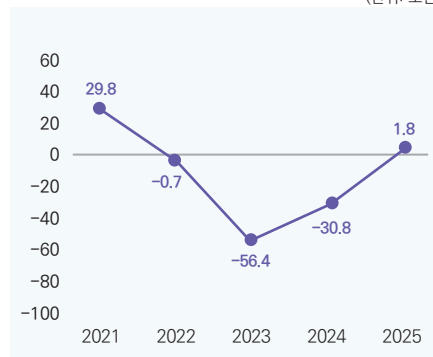
이에 대응하고자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2025년 본예산(총지출 673조원)에 이어 4월에 1차 추경(국회 통과 13.8조원 규모), 이재명 정부 출범 후 6월에 2차 추경(국회 통과 31.8조원 규모)을 편성하였다.

이러한 재정운용 노력에 힘입어 재정지표상으로 보았을 때 2025년 결산은 2023년과 2024년의 대규모 세수 결손 및 재정수지 악화에서 벗어나 재정운용이 정상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3년 56.4조원, 2024년 30.8조원에 이르는 세수결손이 발생한 반면 2025년에는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1.8조원 증가하였다. 지난해 2차 추경에서 10.3조원 규모의 세입을 하향 조정하는 한편 경기회복세가 반영되어 나타난 성과로 해석된다. 또한 초과세수(1.8조원)와 2025년 2차 추경에서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을 세출조정하여 재정적자(관리재정수지) 규모가 예산 △111.6조원보다 7.4조원 개선된 △104.2조원으로 집계

그림 1 세수오차 추이(2021~202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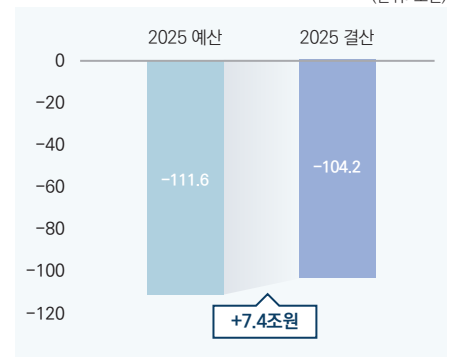
(단위: 조원)



주 추경 기준

그림 2 2025년 관리재정수지 비교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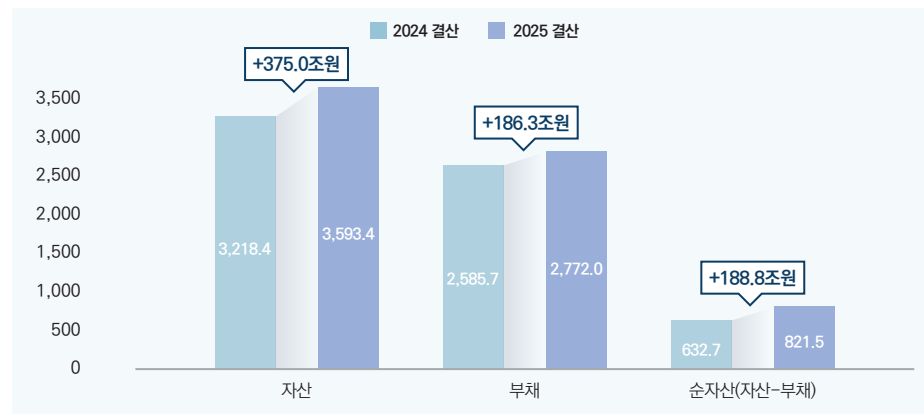
주 추경 기준

되는 유의미한 부분도 확인된다.

한편 국가 재무제표를 보면 자산은 국민연금기금 운용 수익 증가 등에 힘입어 전년보다 375.0조원 증가한 3,593.4조원이 되었다. 국가 부채는 전년보다 186.3조원 증가한 2,772.0조원으로, 자산 증가폭이 부채 증가폭을 훨씬 상회하여 순자산이 전년 대비 188.8조원 증가한 821.5조원으로 집계되었다. 국가의 재무상태가 크게 개선된 것이다.

그림 3 국가자산·부채·순자산 비교

(단위: 조원)



이처럼 2025회계연도 결산 재정지표에서 나타나는 유의미한 성과는 높이 평가하고 인지할 필요가 있다. 이와 병행하여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았을 때 재정지출에 있어 문제점은 없었는지, 향후 개선될 부분은 없는지 심도 있는 심사 또한 필요하다. 예를 들어 산불로 인한 피해 복구 예산집행이 피해 주민이 하루속히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효과적으로 기여하였는지 살펴보고, 차제에 마련된 산불예방 예산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집행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대로 집행되었는지 살피는 지출 점검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정책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결산심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청년일자리 사업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대로 차질 없이 집행되었는지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청년들이 체감할 정도로 일자리 증가에 기여했는지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인지 결산심사에서 다뤄볼 수 있을 것이다.

마치며

앞에서 이야기하였듯이 국회 결산심사는 정부의 1년간 재정운용에서 부당하거나 위법한 사항에 대해 시정요구하고, 정부는 이를 즉시 조치하여 국민을 위한 재정으로 거듭나기 위한 중요한 의정활동이다.

국회는 말은 바 책무를 다하여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다. 이번 국회 결산심사에서는 과거의 지출 점검에서 나아가 예산집행의 성과 평가와 함께 정책개선 방향 또한 제시되어, 결산심사의 새로운 이정표가 마련되기를 바란다.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 방향 규모가 아니라 전략이다 대한민국 재정, 이제는 'Strategy First'로 전환해야 한다



미래를 위한 국가투자는 규모보다 전략이 중요하다. 재정을 얼마나 썼는지가 아니라 어디에, 왜 투자했고 그 결과 국가경쟁력과 국민의 삶이 얼마나 개선됐는지를 평가하고, 그 성과를 다음 정책과 예산에 지속적으로 환류시키는 것이 책임 있는 재정운용의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를 단순한 회계점검이 아니라 국가전략을 검증하는 과정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이번 결산심사를 계기로 대한민국 재정이 개별 사업 중심에서 벗어나 국가전략을 중심으로 예산과 성과가 선순환하는 새로운 재정운용체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글.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규모보다 전략이 먼저다

정부는 최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첨단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 인공지능 경쟁력 확보를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제시했다. 물론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국가 차원의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방향 자체는 필요하다. 그러나 국가의 미래는 프로젝트의 규모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명확한 국가전략이 뒷받침되지 않는 대규모 프로젝트는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고도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는 ‘하얀 코끼리(White Elephant)¹⁾’ 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

정부는 사업 규모와 착공 시점을 발표하기에 앞서 왜 지금 이 사업이 필요한지, 어떠한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려는지, 어느 지역에 어떤 방식으로 투자할 것인지부터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전력·용수·교통 등 기반시설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기존 산업과 어떤 방식으로 연계할 것인지, 정부와 민간은 각각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도 분명히 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대형 프로젝트 추진 과정을 보면 국가전략보다는 규모 확대와 속도전이 먼저 부각되고 있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만 하더라도 수백조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전제로 하는 국가 핵심사업임에도 입지 선정의 정책적 근거, 국가 산업전략과의 연계성, 전력·용수 확보 방안, 정부의 재정지원 원칙이 충분히 제시됐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는 반도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인공지능, 국가산업단지, 각종 특구와 지역개발사업에서도 프로젝트는 빠르게 늘어나지만, 국가 차원의 우선순위와 사업 간 연계, 성과평가와 예산 환류체계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결산은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됐는지를 확인하는 회계절차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국가가 설정한 전략목표가 타당했는지, 그 전략에 따라 사업이 설계·집행됐는지, 국민의 삶과 국가경쟁력 향상이라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졌는지를 검증해야 한다.

대한민국 재정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프로젝트가 아니라 명확한 국가전략에 기반한 책임 있는 재정운용이다.²⁾

영국은 왜 국가전략을 먼저 점검하는가?

오늘날 국가재정은 과거의 점증주의적 예산편성만으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인공지능, 반도체, 에너지 안보, 공급망 재편 등 정책환경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채무와 잠재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우선 배분할 것인지는

1) 비용을 많이 들였지만, 처치 곤란한 애물단지로 전락한 예산 사업들을 일컫는 용어다.

2) 이러한 문제 인식은 포스트신공공관리론(Post New Public Management)에서 말하는 전략적 재정운용과 통합적 재정운용을 중시하는 시각에 입각한 것이다.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됐다.

영국은 새로운 재정지출을 논의하기 전에 국가의 전략적 우선순위를 점검하는 '지출검토(Spending Review)'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향후 수년간 국가가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부처별 재원 배분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다.

국가목표가 설정되면 각 부처는 '그린북(Green Book)'에 따라 정책의 필요성과 경제성, 대안별 비용과 편익을 검토한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평가전략을 수립하고, '마젠타북(Magenta Book)'을 기준으로 정책이 실제 국민에게 가져온 효과를 분석한다. 영국 감사원은 경제성·효율성·효과성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재정가치(Value for Money)' 감사를 실시한다. 평가 결과는 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지출검토와 예산편성에 다시 반영된다. 중요한 것은 개별 제도의 명칭이 아니라 전략에서 시작해 계획, 사업, 성과평가, 환류로 이어지는 체계다.

반면 우리나라 재정운용은 여전히 개별 사업의 신설과 확대에 집중돼 있다. 부처별 사업은 점증적으로 증가하지만 국가 차원의 중장기 전략과 우선순위에 따라 기존 사업을 재조정하거나 종료하는 기능은 취약하다. 결산에서 문제점이 확인돼도 다음 예산편성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명확한 전략과 성과평가가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지역별·부처별·분야별로 나누는 방식이 계속된다면 재정지출을 늘려도 국가 전체의 생산성과 경쟁력은 높아지기 어렵다.



9,753개 사업과 82%의 성과달성률이 말하지 않는 것

우리나라 재정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기존 사업의 예산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그 결과 세부사업은 9,753개에 이르는 방대한 구조로 늘어났다. 하지만 국가의 전략적 목표와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통합하거나 구조조정한 사례는 많지 않다.

최근 인공지능 정책이 대표적이다. 전 부처 인공지능 관련 예산은 2025년 본예산 3조 3천억원에서 2026년 10조 1천억원 규모로 크게 증가했고, 관련 사업은 42개 부처 719개에 달한다.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역시 25개 부처 229개 사업으로 분산돼 있다.

문제는 사업의 숫자나 규모 자체가 아니다. 수백 개의 사업이 하나의 국가전략 아래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는지, 부처별 역할은 명확한지, 중복투자는 없는지, 정책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정부는 2025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서 프로그램 단위 성과목표 달성률이 약 82%라고 제시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상당수 재정사업이 목표를 달성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결산심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성과지표를 달성했는가”가 아니라 “그 예산으로 대한민국이 얼마나 달라졌는가”이다.

현재 성과보고서는 프로그램 전체의 정책효과보다 개별 사업의 집행실적이나 대표적 성과사례를 제시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다. 검사 건수, 지원 인원, 만족도, 국내 여행 일수와 같은 지표는 사업의 진행 상황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국가 차원의 정책목표가 얼마나 달성됐는지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사업별 지표의 달성률이 높다고 해서 국가의 생산성과 성장잠재력, 산업경쟁력, 국민 삶의 질이 자동으로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 개별 사업의 실적을 합산하는 것과 국가전략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따라서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는 단순히 불용액과 이월액, 집행률과 성과지표 달성률을 확인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해당 사업이 어떤 국가전략에서 출발했는지, 다른 사업들과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투입된 예산이 실질적인 정책효과로 이어졌는지를 검증해야 한다.

표 1 정부 성과관리와 결산이 지향해야 할 방향

현재 정부의 성과관리	국회 결산이 지향해야 할 방향
대표사업 중심 성과사례	프로그램 전체의 정책효과
성과지표(Indicator) 달성	국가성과(Outcome) 달성
사업(Project) 중심	국가전략(National Outcome) 중심
집행실적(만족도·실적·건수)	생산성·성장잠재력·국가경쟁력

전략 없는 투자는 낭비로 끝난다

미래를 위한 국가투자는 반드시 필요하다. 인공지능, 반도체, 첨단제조업, 에너지 전환과 같은 분야에 선제적으로 투자하지 않는 국가는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하지만 투자의 필요성과 투자 방식의 적절성, 투자 결과의 효과성은 별개의 문제다. 재원은 한정돼 있고 모든 정책에는 우선순위가 필요하다. 무엇에 먼저 투자할지뿐만 아니라 무엇을 줄이고 중단할지도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선택의 기준과 이유를 국민에게 설명하는 것이 국가전략이다.

잠재성장률 둔화와 생산성 정체, 청년고용과 산업경쟁력 약화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미래투자는 더욱 정교하고 전략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규모를 먼저 정한 뒤 사업을 끼워 맞추는 방식으로는 막대한 재정이 국가의 성장잠재력으로 연결되기 어렵다.

영국 하원 기업무역위원장 리암 번 의원은 “전략 없는 투자는 낭비될 뿐이다 (Investment without strategy is squandered)”라고 지적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돈을 쓰느냐가 아니라 어떤 전략 아래 투자하고, 그 결과를 어떻게 검증하느냐는 의미다.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도 미래대응기금과 첨단산업 투자 등 주요 미래사업의 규모만 볼 것이 아니라 국가전략과 정책 우선순위, 민간투자와의 역할 분담, 성과평가 및 환류체계가 제대로 마련돼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제안하는 새로운 2025회계연도 결산 패러다임

우리나라의 결산심사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기존의 점증주의적 예산사업의 1년간 집행실적을 확인하는 결산에서 벗어나, 명확한 국가전략을 중심으로 정책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재조정하는 새로운 포스트신공공관리(Post New Public Management) 관점의 결산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 재정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사업이나 더 큰 예산이 아니다. 국가전략을 중심으로 예산-집행-성과-결산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새로운 재정운용체계이다. 국민의힘은 결산을 단순히 과거를 평가하는 절차가 아니라, 국가전략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검증하고 미래 국가전략을 설계하는 출발점으로 바라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민의힘은 다음과 같은 새로운 결산 패러다임을 제안한다.

첫째, ‘Strategy First: 국가전략을 먼저 확인하는 결산’이다. 모든 재정사업은 국가전략에서 출발해야 한다. 국가가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를 먼저 설정하고, 그에 따라 예산과 사업을 설계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결산심사 역시 개별 사업의 집행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이 국가전략에 부합하는지부터 검증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둘째, ‘Programme: 목표를 평가하는 결산’이다. 개별 사업 중심의 재정운용을 넘어

프로그램 단위의 정책목표를 중심으로 예산집행 결과를 평가해야 한다.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개별 사업들이 각각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어떠한 역할을 수행했는지, 그리고 프로그램 전체가 국가전략 달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결산심사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Outcome: 성과를 검증하는 결산’이다. 성과지표 달성이나 집행실적 점검에서 벗어나 국가의 생산성 향상, 성장잠재력 확충, 산업경쟁력 강화, 국민 삶의 질 개선과 같은 국가 차원의 전략목표 대비 성과(Outcome)를 평가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사업이 얼마나 집행되었는가가 아니라, 국가가 전략목표에 맞추어 얼마나 변화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넷째, ‘Feedback: 논의를 위한 결산’이다. 결산은 끝이 아니라 다음 예산의 출발점이어야 한다. 결산을 통해 확인된 정책효과와 평가 결과가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영국의 Spending Review에 해당하는 국가전략 논의로 환류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과감히 재설계하거나 종료하고, 성과가 검증된 정책은 국가전략 속에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다섯째, ‘Future: 미래를 준비하는 결산’이다. 재정은 현재 세대만을 위한 지출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여야 한다. 새로운 기금을 만드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미래를 위한 명확한 국가전략을 먼저 수립하는 것이다. 단기적인 정치적 성과보다 장기적인 생산성 향상과 국가경쟁력 강화, 그리고 미래세대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우선하는 재정운용으로 전환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지금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첨단산업, 저출생과 고령화, 기후변화,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 복합적인 도전이 중첩되는 격변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는 더 많은 사업을 확대하고 나열하는 점증주의적 재정운용에서 벗어나, 명확한 국가전략을 중심으로 한정된 재원을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투자하고 그 성과를 철저히 검증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대한민국 재정운용은 이제 ‘Project First’가 아니라 ‘Strategy First’로 전환해야 한다. 🌐

표 2 Project 중심과 Strategy 중심 재정의 차이

Project 중심(현행)	Strategy 중심
어떤 사업을 추가할 것인가	무엇을 우선 투자할 것인가
부처 사업은 무엇인가	국가가 달성하려는 성과는 무엇인가
무엇을 신설할 것인가	무엇을 중단할 것인가
사업실적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국가전략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2025회계연도 결산 주요 분석 내용



2025년은 2024년 말 이후 이어진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시작되어, 회계연도 중 새 정부가 출범하는 등 재정운용 여건의 변화가 있었고, 연초 발생한 영남지역 대형산불과 미국의 관세정책 등 예기치 못한 재난과 통상환경의 변화도 동반되었다. 이에 연중 2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었으며, 2025회계연도 국회의 결산 심사에 있어 이와 같은 정부의 재정운용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글. 임명현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

들어가며

국회는 「국회법」 제84조, 「국가재정법」 제59조 등에 따라 정부가 제출한 국가결산 보고서와 부속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이 합법적·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국회가 심의·확정한 취지에 따라 집행되었는지 등을 심사하고, 심사 결과 위법 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정부에 시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회의 결산심사는 재정 집행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다음 연도 예산안 편성 및 심의방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 2025회계연도 결산 심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총 22권의 결산 분석 시리즈를 발간하였다. 이번 결산 분석 시리즈는 「결산 재정총량 분석」(1권), 「결산 분야별 재원배분 분석」(1권), 「결산 총괄 분석」(4권), 「위원회별 분석」(12권),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분석」(1권), 「성인지 결산서 분석」(1권), 「국가재무제표 분석」(1권),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1권)으로 구성되었다.

2025회계연도 결산 개요

2025회계연도 정부 결산 결과 총수입은 637.4조원이 수납되었으며, 이는 추경 642.4조원 대비 5.0조원이 과소 수납되었다. 2025년 제2회 추경을 통해 세입감액경정을 실시함에 따라 2023~2024년도와 같은 대규모 국세수입 결손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세외수입과 기금에서 과소 수납이 발생하여 총수입 결손이 발생하였다.

총지출은 추경 대비 19.1조원 감소한 684.1조원이 집행되었으며, 통합재정수지는 추경 대비 14.2조원이 개선된 46.7조원의 적자를 기록하였고, 관리재정수지는 추경 대비 7.4조원이 개선된 104.2조원의 적자를 보였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추경 기준 4.2% 대비 0.3%p 개선된 3.9%를 기록하였다. 한편 국가채무(D1) 잠정치는 전년 대비 129.4조원이 증가한 1,304.5조원이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9.0% 수준이다.

표 1

2025회계연도 재정 총량

(단위: 조원, %, %p)

구 분	2024	2025			전년대비 (C-A)
	결산 (A)	추경 (B)	결산 (C)	추경대비 (C-B)	
총수입	594.5	642.4	637.4	△5.0	43.0
국세수입	336.5	372.1	373.9	1.8	37.4
총지출	638.0	703.3	684.1	△19.1	46.1
통합재정수지	△43.5	△60.8	△46.7	14.2	△3.2
관리재정수지	△104.8	△111.6	△104.2	7.4	0.5
(GDP 대비 비율)	(△4.1)	(△4.2)	(△3.9)	(0.3)	(0.2)
국가채무(D1)	1,175.0	1,301.9	1,304.5	2.6	129.4
(GDP 대비 비율)	(46.0)	(49.1)	(49.0)	(△0.1)	(3.0)

자료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12대 분야별로 살펴보면, 보건·복지·고용 분야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3.4조 원 감소한 238.3조원으로 가장 많은 재원을 차지하고 있고, 교육 분야가 제2회 추가 경정예산 대비 0.5조원 증가하여 96.8조원의 지출 규모를 나타냈다. 예산 대비 집행 률이 가장 낮은 분야는 외교·통일 분야로 계획액 7.3조원 중 6.5조원이 집행되었다.

표 2

2025년도 결산 12대 분야별 재원 배분

(단위: 조원, %)

구 분	2025		2025 결산(B)	추경 대비 (B-A)	(B-A)/A
	본예산	추경 ¹⁾ (A)			
정부 총지출	656.6	703.3	684.1	△19.1	△2.7
1. 보건·복지·고용	242.9	251.7	238.3	△13.4	△5.3
2. 교육	89.8	96.2	96.8	0.5	0.6
3. 문화·체육·관광	8.7	8.9	8.8	△0.1	△0.9
4. 환경	12.5	12.9	12.1	△0.8	△6.4
5. R&D	26.5	29.7	29.4	△0.3	△0.9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8.0	35.3	35.0	△0.3	△0.9
7. SOC	26.4	26.0	25.3	△0.7	△2.7
8. 농림·수산·식품	25.4	27.0	27.2	0.3	1.0
9. 국방	59.4	61.3	59.4	△1.9	△3.0
10. 외교·통일	7.5	7.3	6.5	△0.8	△10.7
11. 공공질서·안전	24.4	25.8	26.0	0.1	0.6
12. 일반·지방행정	110.5	127.2	127.8	0.6	0.5

주 12대 분야 지출 합계와 총지출 값은 상이한데 이는 국방·R&D 분야 집계방식의 차이, 12대 분야에서 통신 분야의 비R&D 부분, 예비비 분야가 제외된 점 등에 기인함

1)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재정경제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재작성



2025회계연도 결산 주요 정책·사업 분석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의 2025회계연도 주요 정책·사업의 집행 및 성과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국회의 내실 있는 결산 심사를 지원하고자 하였으며, 그중 일부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산불 피해 복구 및 대응력 강화 사업 분석

2025년 3월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대형산불로 인해 막대한 재산·인명 피해가 발생하였다. 2025년 제1회 추경을 통해 이러한 피해에 대응하여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 재원을 확보하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총 1조 4,50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다.

이 중 피해 복구 및 이재민 지원과 관련하여, 산불피해지역 장기 주거지원 대책으로 추진된 다가구임대주택 사업은, 이재민의 거주 선호와 이주 의사를 과거 재난 사례와 산불 직후 실시된 수요 조사를 통해 사전에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정책 설계에 반영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예산이 전액 미집행되거나 과다하게 불용되었으며, 2026년 5월 말 기준 약 3,710명의 이재민이 여전히 임시조립주택·선비문화원 등에 거주하는 등 주거 안정 지원이라는 정책 목적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였다.

아울러 단순 시설복구를 넘어 마을 재건을 목표로 도시재생 및 마을단위 복구·재생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2026년 6월 현재 사업은 설계 단계에 머물러 있고 이재민의 거주지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여건에서 어울림플랫폼·경제활성화거점 조성 등 미래형 정주기반 구축이 실질적인 공동체 회복으로 이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재민 거주지 확정 및 주거 기반 조성을 우선하여 사업계획을 재정비하고, 이에 맞추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표 3 영남지역 대형산불 피해지역 임시주거시설 입주세대 현황

(단위: 호, 명)

피해주민(2025.3.)		초기입주		타 지역 이주		잔류 세대(2026.5.)	
세대	인원	세대	인원	세대	인원	세대	인원
3,358	5,546	2,661	4,587	17	28	2,180	3,710

주 1. 임시주거시설은 임시조립주택, 선비문화원 등 포함
2. 거주지역 복귀 인원은 849명으로 확인됨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 자료에 근거하여 재작성

AI 지원 사업 분석

정부 AI 지원사업은 2024년까지는 대규모 데이터셋 구축·개방, AI 솔루션 바우처 지원 등에 한정되었으나, 2025년은 두 차례의 대규모 추경이 편성되면서 국가 AI 컴퓨팅 인프라(GPU 등)가 확대되는 등 본격적인 정부의 AI 투자가 시작된 시기이다.

표 4 부문별 AI 지원사업 예산 규모

(단위: 조원)

구분		기술개발	인프라·연구 기반조성	AX: 산업· 생활·공공	인재 양성	생태계 조성	합계
2025	본예산	1.7	0.3	0.6	0.7	0.1	3.3
	추경	1.7	1.9	0.9	0.8	0.4	5.7
2026 예산		2.9	2.5	2.4	1.4	0.6	9.9

주 AX(인공지능 전환, AI Transformation)은 산업·생활·공공부분에 전면적 AI 도입·혁신을 지원하는 부문
자료 기획예산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정부는 범국가적 AI 정책·사업 컨트롤타워로서 ‘국가AI전략위원회’를 출범(2025.9.)시키고, 범부처 과학기술,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회의체인 과학기술관계장관 회의를 신설(2025.11.)하는 등 글로벌 AI 3대 강국 진입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AI 지원 재정사업에 투입되는 예산 규모와 중요성에 비해 AI 지원 사업 기준 마련, 집행실적 점검, 성과평가에 대한 역할 체계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글로벌 3대 강국이라는 목표를 위해서는 AI 재정사업에 대해 타 사업과 차별화된 선정기준 마련, 성과평가 등이 필수적이지만, 기획예산처가 여전히 세부사업 단위에서 AI 지원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성과평가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5년 중점사업이었던 정부 GPU 확충 사업의 경우, GPU 확보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된 상황에서 2025년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GPU 확보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다만 2026년 상반기부터 GPU 구축·운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2030년까지 운용되어야 하고, 민관이 함께 2030년까지 26만장의 GPU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정부는 정부활용분 1만장의 30%까지는 산업계에 배분한다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산업계 지원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 GPU 시장 가격을 고려한 산업계의 합리적인 자부담금 설정, 산업계와 학·연을 별도 트랙으로 세분화하여 운영하는 등의 보완 방안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단기적으로 정부 소유 AI데이터 센터가 부재한 상황에서 GPU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매입 GPU를 민간사업자 소유 AI 데이터센터에 구축하는 방식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민간사업자 운영비를 투명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산정하여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마치며

2025년은 2024년 말 이후 이어진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시작되어, 회계연도 중 새 정부가 출범하는 등 재정운용 여건의 변화가 있었고, 연초 발생한 영남지역 대형 산불과 미국의 관세정책 등 예기치 못한 재난과 통상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재정의 역할도 요구된 한 해였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회계연도 결산 분석보고서를 통해 국회의 거시적·정책적 측면의 결산심사를 지원하고 국회의 재정적 규율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부의 재정운용과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총괄 분석을 강화하였다. 이번 결산 분석보고서가 국회의 결산심사뿐만 아니라 국정감사, 다음 연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되어 국가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현안진단

지방선거 이후 대한민국의 미래:

자치분권과 균형성장의 길

소순창 건국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26

방한 인바운드 관광의 성장과

지역관광 활성화 전략

안희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정책연구실장

32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한국 경제:

지붕은 해가 떠 있을 때 고쳐야 한다

김동영 KDI 전문연구원 중앙대학교 겸임교수

40

지방선거 이후 대한민국의 미래: 자치분권과 균형성장의 길



글. 소순창
건국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이 글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치분권과 균형성장을 국가 운영의 핵심원리로 제시한다. 이를 위해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전략을 중심으로 권역별 성장거점과 AI·첨단산업 육성, 재정과 인프라의 집중지원을 강조한다. 또한 중앙정부 중심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부정목록 방식,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국세·지방세 비율의 60:40 개편, 포괄보조금 확대 등 재정분권을 제안한다. 아울러 공천제도 개선과 지역정당 활성화, 분권형 개헌을 통해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궁극적으로 주민이 정책의 공동 설계자로 참여하는 기본사회와 생활민주주의를 실현하여, 강한 지방이 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새로운 국가발전모델을 제시한다.

지방정부의 현황과 시대적 과제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는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 이후 30년이 넘는 역사를 쌓아왔으나, 본래의 취지인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여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사람과 자본, 정보가 모두 수도권으로만 흡수되는 ‘서울공화국’ 현상은 해가 갈수록 공고해져 이제는 ‘수도권공화국’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미 2019년 12월을 기점으로 수도권 인구가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50%를 돌파하는 기형적인 일극체제가 굳어졌으며, 경제의 모태가 되는 국내 1,000대 기업의 70% 이상이 수도권에 둥지를 틀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은 비수도권 지역에 치명적인 연쇄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와 인프라를 찾아 청년인구가 대거 이탈하면서 비수도권은 성장동력을 잃었고, 산업기반마저 급격히 약화되었다. 이는 단순한 침체를 넘어 ‘지역소멸’이라는 실존적 이고도 구조적인 위기로 이어졌다. 실제로 전국 89개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되어 생존을 위협받는 현실은 수도권 집중화가 낳은 참담한 결과물이다.

결국 지금의 위기는 지자체 차원의 단편적인 행정적 노력이나 일시적인 재정지원 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자원의 균형배분을 강제하는 등 국가운영 패러다임 전반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단행해야 할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자치분권 핵심 전략: ‘5극 3특’

이재명 정부는 기존의 파편화되고 단절되었던 지역발전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이정표인 ‘5극 3특’ 전략을 국정 핵심과제로 전면내세웠다. 이 전략은 대한민국 전역을 수도권, 부울경, 대구·경북, 대전·세종·충청, 광주·전남의 ‘5대 초광역권’과 제주, 강원, 전북의 ‘3개 특별자치도’로 체계적으로 재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단순히 행정구역을 묶는 수준을 넘어, 비수도권 지역의 독자적인 생존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고착화된 수도권 일극체제를 다극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제는 권역별 성장엔진을 구축하는 것이다. 각 권역이 가진 고유의 지리적·문화적 특성과 자원을 활용한 특화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장기적으로 지역내총생산(GRDP)을 기존 대비 50% 이상 성장시키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웠다. 비수도권의 경제구조를 근본적으로 체질 개선함으로써 수도권과의 자본 및 경제력 격차를 실질적으로 완화하겠다는 포석이다.

특히 과학기술과 미래 산업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산업 대전환과 AI 거점화’ 전략을 동시에 추진한다. 비수도권 4개 권역에 제조업 AI 전환(MAX) 연

구·실증 거점을 구축하여 침체된 지역 제조업에 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이식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 대학, 연구소, 기업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산학연 연계 ‘테크허브’를 조성함으로써 인재가 지역에 정착하고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이 자생할 수 있는 생태계를 다진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대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유례없는 파격적인 재정 및 인프라 지원책을 시행한다. 국민성장펀드를 비롯한 주요 국가 재원과 예산의 40% 이상을 비수도권 지역에 우선적으로 배분하여 재정적 마중물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비수도권 지역에 반도체 등 첨단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초기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추기 위해 전력·용수 등 필수 인프라 구축 비용을 최대 100%까지 감면하는 전폭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여 기업의 지방 이전을 강력하게 유도하고 있다.

지방행정의 자율성 확보 및 체제 개편

‘부정목록(Negative List)’ 방식의 권한 이양

그동안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는 중앙정부가 허용하는 사무만을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긍정목록(Positive List)’ 방식을 취해왔다. 그러나 진정한 지방분권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률로 금지된 명백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무를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부정목록’ 방식으로 체계를 전환해야 한다. 이러한 전향적인 권한 이양은 지방자치단체를 중앙정부의 단순한 하부 집행기관이 아니라, 지역의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독립적인 정책 주체로 변모시키는 핵심 기제가 될 것이다.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및 종합행정 실현

현재 지역에는 노동, 환경, 중소기업 등 다양한 중앙부처 소속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이 분산되어 있어 지방정부의 고유사무와 기능이 중복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 기관의 사무와 인력, 예산을 지방정부로 과감하게 이양하는 정비작업이 필요하다. 행정의 중복성과 자원낭비를 제거함으로써 주민들은 한 곳에서 일괄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지방정부는 지역 특성에 딱 맞는 통합적이고 완결성 높은 종합행정을 실현할 수 있다.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한 견제와 균형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비대해지는 만큼 이를 견제할 지방의회의 역할도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방의회의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이 단체장에게 종속되어 있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독자적인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을 완전하게 보장하는 독립

된 ‘지방의회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비약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지방행정을 엄격히 감시하고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진정한 의미의 권력분립과 견제 제도를 확립할 수 있다.

지방재정의 자주성 확보를 위한 혁신

세입 구조의 획기적 개선

지방행정의 자율성은 탄탄한 재정적 독립 없이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현재 77 대 23 수준에 머물러 있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대칭적 비율을 단계적으로 60 대 40까지 상향 조정하여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자립 기반을 다져야 한다. 이와 더불어 지방 자치단체가 지역의 경제 여건에 맞추어 조세 세율을 스스로 조정할 수 있는 ‘과세자 주권’을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중앙정부의 재정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공간을 채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제도 개편

단순히 인구 규모에 비례하여 교부세를 나누어 주던 기존의 방식은 인구 감소 지역의 재정난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았다. 따라서 인구수라는 단편적 기준에서 탈피하여, 지역 내 최소한의 공공서비스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고정비용과 행정 서비스 비용을 현실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인구 급감 지역의 실제 재정수요를 정밀하게 추계하고 공백 없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용도와 목적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묶여 있는 기존의 국고보조금 제도는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예산의 경직성을 초래했다. 지자체가 지역의 실정과 긴급한 현안에 맞게 예산을 자율적으로 설계하고 전용할 수 있도록 총액으로 교부하는 포괄 보조금 제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부동산교부세의 배분기준을 개편하여 지역 간 자생력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 배분 지표에서 각 지자체의 재정여건과 낙후도 비중을 대폭 높임으로써, 세수가 부족하고 인프라가 취약한 낙후지역에 더 많은 재원이 집중되도록 조정하여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의 재원으로 기능하게 만들어야 한다.

지방정치·행정의 독립성 확보: 정당공천제 개선

공천 제도의 민주화와 투명성 강화

그동안 지방선거는 지역주민의 의사보다 중앙당 권력자들의 이해관계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중앙당 중심의 일방적인 ‘낙하산 공천’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당원이 중심이 되는 상향식 시민참여 공천제와 같은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에 더해 공천 과정의 불공정 시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의무적으로 남기고, 후보자 평가 기준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공천 제도의 민주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지역정당(Local Party) 설립 완화

현재의 정당법은 국회의원 선거 중심의 거대 중앙정당에게 유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의 논리에 예속되는 구조적 원인이 되고 있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 정당법을 전향적으로 개정하여 특정 지역의 현안과 고유한 의제만을 전문적으로 대변하는 ‘지역정당’ 설립의 유연한 법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지역정당이 활성화되면 거대 양당이 주목하지 않는 생활 밀착형 정책경쟁이 가능해져 지방자치의 다양성이 한층 풍부해질 것이다.

지방분권 개혁의 추진 방향: 분권형 개헌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직면한 행정·재정·정치적 한계를 완전히 극복하고 실질적인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 수준을 넘어선 ‘분권형 개헌’이 필연적이다. 헌법 제 1조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형국가’임을 엄숙히 명시함으로써 국가의 정체성 자체를 재정립해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의 하부 집행기관 같은 인상을 주는 ‘지방자치단체’라는 낡은 명칭을 중앙정부와 대등한 법적 지위를 갖는 ‘지방정부’로 변경하여 실질적인 파트너십을 확립해야 한다.

더불어 새로운 개헌안에는 단순한 행정위임을 넘어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는 법령을 스스로 제정할 수 있는 ‘포괄적 자치입법권’과, 중앙정부의 통제 없이 독자적

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자치재정권’이 헌법적 권리로 강력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분권형 개헌이야말로 하향식 국가 운영의 패러다임을 상향식 다극체제로 전환하는 자치분권 개혁의 최후 보루이자 완성점이다.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자치분권 국가의 방향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기본사회’ 가치는 주민의 삶과 가장 맞닿아 있는 지방 정부의 현장에서 비로소 완성된다. 기본사회는 소득, 주거, 의료, 교육 등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핵심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시혜하는 중앙정부식 복지모델이 아니다. 오히려 각 지역의 독자적인 여건과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지방정부가 주체적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공동 결정하는 새로운 차원의 사회 현정 질서로 정착되어야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주민을 단순한 정책의 수혜자나 객체로 바라보던 기존의 관점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시민을 예산편성과 정책 수립의 모든 과정에 참여하는 ‘정책 공동 설계자’로 격상시켜야 한다. 일상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토론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생활민주주의가 실천될 때, 기본사회는 지속 가능한 제도로 뿌리내릴 수 있다.

결론: 선거 없는 2년, 구조개혁의 골든타임

2026년 6·3 지방선거가 막을 내린 지금, 대한민국은 차기 전국 단위 선거가 치러지는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 전까지 ‘선거 없는 2년’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다. 선거마다 반복되던 정치적 대립과 선심성 공약 남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 시기는 지체되었던 국가시스템의 대전환을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구조개혁의 골든타임이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5극 3특’ 전략의 내실을 다지는 한편, 오랜 숙제였던 행정 및 재정 분권을 확실하게 이뤄내는 것은 소멸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결정짓는 중차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강한 지방이 결국 강한 대한민국을 만든다’는 확고한 신념 아래, 이제는 여야 정치권이 정쟁을 멈추고 민생협치를 통해 ‘자치분권국가’로의 대전환에 힘을 모아야 한다. 중앙의 통제에서 벗어나 지역 공동체가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살아있는 민주주의’의 실현이야말로, 지방자치 30년을 지나온 대한민국이 도달해야 할 궁극적인 미래이자 시대적 소명이다. 🌐

방한 인바운드 관광의 성장과 지역관광 활성화 전략



글. 안희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정책연구실장

인바운드 관광은 인구 감소와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역의 기회임이 분명하다. 관광이 지역문제의 해법이 되기 위해서는 방문자경제 실현과 지속가능한 관광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네 가지 전략을 제시하였다. 첫째, 지역 인바운드 유치를 위한 관광인프라 및 수용태세 구축이다. 둘째, 지역 특색을 담은 고부가 체험형 로컬 관광 콘텐츠 발굴이다. 셋째, 현장의 핵심 경쟁력이 될 전문적인 관광 인력 육성이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관광의 시대 서비스 품질 고도화를 위한 지역관광 비즈니스 기반 관광산업 발전 모델 육성이다. 방한 외래객의 성공적인 지방 분산과 지역관광 생태계의 혁신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관광강국으로 도약하는 성장의 토대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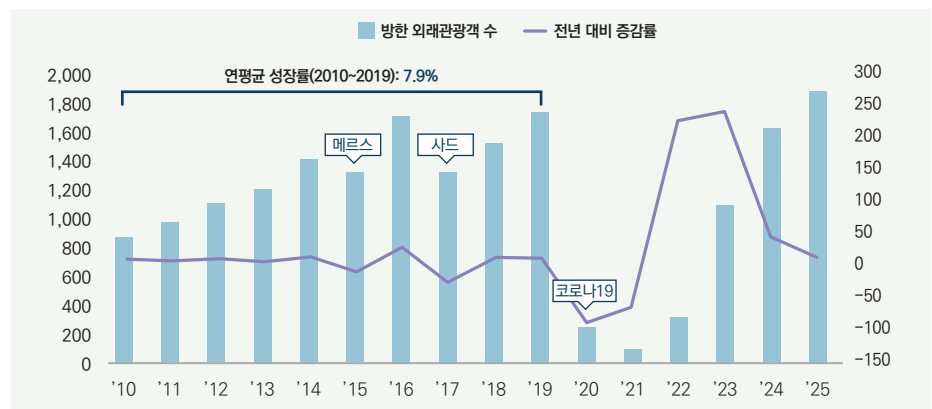
방한 인바운드 관광의 양적 성장

올해 들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급증하고 있다. 2026년 5월까지 누적 방한 외래관광객은 872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26.6.24.). 지난 제11차 확대국가관광전략 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정책목표는 2,300만명이다. 최근 원화 약세에 따른 가격 경쟁력 상승, K-컬처의 글로벌 파급력 확대와 정부의 공격적인 인바운드 유치 전략 등을 고려할 때 올해 인바운드 시장 전망은 긍정적이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6).

2025년 우리나라 관광수출액은 38.7조원(272.4억불)으로 서비스산업 수출의 18.1%를 차지하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산업 기준 8위권에 해당하는 규모이다(관계부처 합동, 2026.2.25.). 한국은행 국제수지에 따르면, 2026년 3월 중동사태 이후 관광수지 흑자가 3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그림 1 연도별 방한 외래관광객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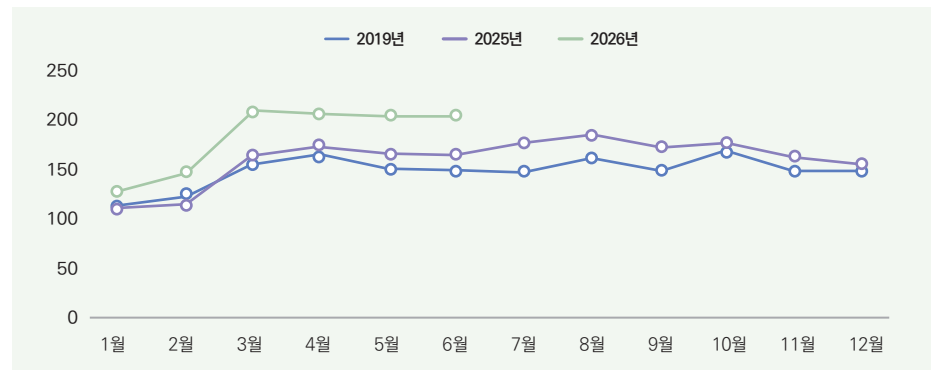
(단위: 만명, %)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6년 하반기 국제관광시장 전망」, 2026.6.

그림 2 월별 방한 외래관광객수 추이

(단위: 만명)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6년 하반기 국제관광시장 전망」, 2026.6. / 한국관광데이터랩, 방한 외래관광객 통계

외래관광객 유치는 수출효과와 더불어 국내 연관 산업에서 생산활동을 촉진하며 부가가치 및 고용 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온다. 외래객 12명 유치는 자동차 1대 수출을 상회하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4). 방한 인바운드 시장의 양적 성장 속에서 외래객의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체류와 소비 증대 중심의 지속 가능한 지역관광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이다.

외래관광객의 지방 분산과 지속 가능한 관광

인바운드 시장의 성장과 함께 대두되는 과제는 지방 분산이다. 수도권 중심의 관광 수요 집중으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되며, 이미 북촌 한옥마을, 부산의 감천문화마을 등에서 오버투어리즘에 대응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현재 우리나라 지방도시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위기는 인구 감소다. 외래관광객 유치는 정주민구를 늘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안이 되는 생활인구(체류인구) 증가의 핵심이다. 주중이나 비수기에 외래객의 방문은 유동인구를 확보하여 대중교통, 음식점, 문화시설 등 도시인프라를 유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방도시의 ‘방문자경제 실현’¹⁾은 지역 활력 제고 및 생활 인구 확대 등 지방소멸의 실질적 해법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인구감소로 지방도시의 생존이 위협받는 시점에서 외래관광객 유치, 즉 방문자경제 실현은 정책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미 영국, 호주 등은 방문자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계획을 발표하였다. 영국은 관광을 ‘방문자경제’로 정의하고, 민관 협력 강화를 위한 ‘방문자경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영국의 방문자경제 전략은 “런던을 넘어 다른 도시와 지역의 관광산업을 성장시키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다.

2025년 방일 외래객 4,468만명을 달성한 일본은 관광산업을 자동차 산업에 이은 제2의 수출산업이자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전략산업으로 인식하고 있다. 2016년 관광을 일본 경제의 성장엔진으로 규정하고, 2030년까지 외래객 6,000만명, 외국인 여행소비액 15조엔 달성 목표를 담은 ‘내일의 일본을 지탱하는 관광비전’을 수립하였다. 일본은 ‘지속 가능한 관광’, ‘소비액 확대’, ‘지방 유치 촉진’을 키워드로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이러한 기조는 지난 3월 일본관광청이 발표한 「제5차 관광입국추진기본계획」에서 더욱 강화되었다. 인바운드의 급증, 지역으로의 관광객 분산, 지방재정 확충으로 이어지는 변화(숙박세 도입, 오버투어리즘 대응, 국제여객세 증액 등)를 통

1) 인구감소지역에서 국내 관광객 62명은 정주 인구 1명의 소비를 대체하는 것으로 나타남(강지수·최경은, 2022)



해 ‘일본의 매력·활력을 다음세대까지 지속 계승·발전시켜 가는 지속 가능한 관광’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그림 3 일본의 제5차 관광입국추진기본계획



자료: 日本観光庁, 「観光立国推進基本計画(第5次) 概要」, 2026.3.27.

우리 정부는 국정과제로 ‘2030년 방한 외래객 3천만명 달성’을 제시하였다. 방한시장의 양적인 성장이 지역 경제의 실질적 체감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외래객의 지방 분산이 필수적이다. 지방 분산은 단순히 ‘지방에 관광객을 보낸다’는 차원을 넘어 지역 관광산업의 체질 개선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성장 전략, 관광을 통한 지역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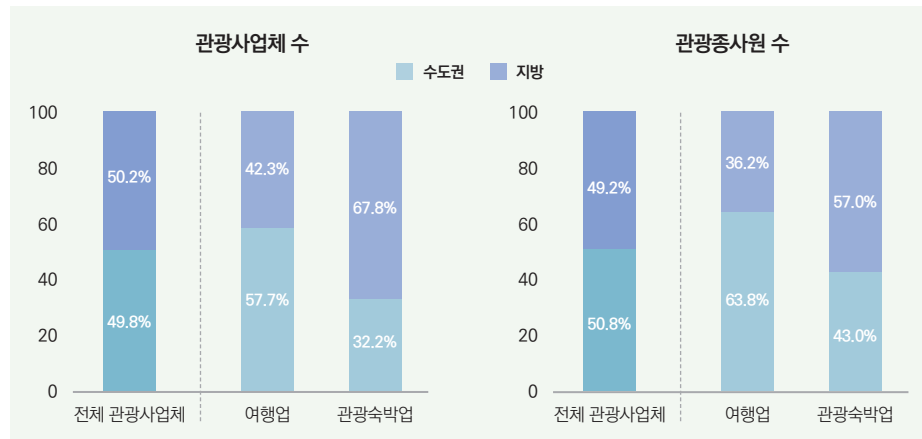
활성화를 고려할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인바운드의 양적 성장 전략과 더불어 방문자 경제 구현 관점에서 관광객의 체류를 확대하고, 지역 소비 증대를 통해 관광객 유치의 효과가 지역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역관광 혁신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방한 외래객 3천만명 시대에 대비한 지역관광 활성화 전략

지역관광 활성화는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의 토대 위에 가능하다. 수도권에 집중된 관광지형을 개편하고 외래객의 지방 방문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관광산업 생태계 강화가 선결되어야 한다. 2025년 외래관광객조사에 따르면, 외래관광객의 지방 방문율은 32.7%이다. 관광인프라의 수도권 집중도 역시 전체 관광사업체의 49.8%, 관광종사원의 50.8%(2024년 기준)로 나타난다. 현재 우리나라 지역관광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관광트렌드, 수요의 양적 증가, 관광상품 및 주체의 다양화, 관광산업의 디지털화(DX, AX), 지역 간 경쟁 심화 등 다방면에서 과거와 다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방한관광 수요의 지방방문 확대를 위한 외래관광객 수용 기반 및 관광인프라 확충, 고부가 관광콘텐츠 발굴 및 상품화, 관광인력 육성, 서비스 품질 개선이 필요하다. 지역관광 혁신으로 방한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특색을 살린 관광목적지 조성으로 관광의 균형 성장을 추진해야 한다.

첫째, 지역 인바운드 유치를 위한 관광인프라 및 수용태세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지역관광의 인프라 구축은 국민의 국내관광에 집중되어 왔다.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인프라는 수도권에 비해 부족한 숙박시설 확충과 관광객의 이동 동선을 고려한 교통 연결성 개선이 필요하다. 외래관광객 관점에서 이용 가능한 숙박시설 확

그림 4 관광사업체 및 종사원 수 비교(수도권-지방)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관광산업조사」,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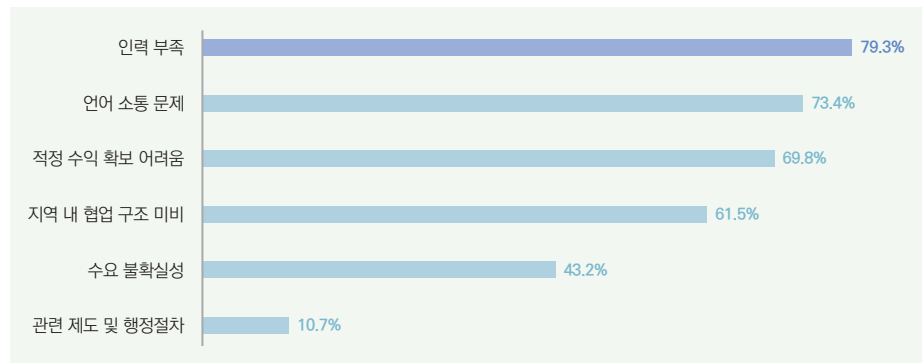
충과 현지 교통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 특히, 숙박시설은 단기간 공급량을 늘리기 어렵기 때문에 기존 숙박시설의 활용성을 높이고, 지방도시의 숙박서비스 품질 향상을 유도해야 한다. 지난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정부는 관광숙박업과 일반숙박업을 포괄하는 통합 숙박업 진흥체계를 마련하고, ‘(가칭)숙박업법’ 제정을 발표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26.2.25.). 인바운드 유치 전략에서 외래객 입국이 가능한 관문도시로의 접근성 강화도 중요한 영역이다. 지방공항과 주요국 핵심도시를 연결하는 직항노선 신설·증편, 지방공항 연계 프로모션을 통해 외래관광객의 지방 방문을 촉진하고, 관광객의 이동 동선을 고려한 지역관광 교통 지원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대중교통으로 관광객의 지역 내 이동 불편을 줄이도록 지역의 교통환경과 관광지 여건에 맞는 관광교통 지원모델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 지역의 고부가 관광콘텐츠 발굴 및 상품화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 K-컬처의 확산과 체험 중심 관광트렌드, 콘텐츠 융합을 통해 지역관광 상품의 고부가화를 유도해야 한다. 예컨대 일본은 국립공원 이용 거점의 전면적인 매력 향상을 비롯하여,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감동 체험을 중심으로 체류형 고부가가치 관광을 추진하고 있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6). 로컬의 일상은 체험형 관광콘텐츠화하여 체류기간과 지출액 확대를 유도하고, 지역 소상공인 등 동반 성장을 지원한다. 방한 외래객은 한류 콘텐츠를 접하고(40.1%), 한국의 전통문화를 접하고(32.1%)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것으로 나타난다(2025년 외래관광객조사). 방한 관광객이 대한민국

전역에서 다양한 현지의 문화를 체험 및 체감할 수 있도록 문화자원의 발굴, 매력 강화, 홍보마케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관광목적지의 다양화 및 분산화, 체류기간 연장 및 재방문 확대를 통해 지역의 활력 제고를 위한 지역의 관광콘텐츠 기획과 생활 인구 유입 및 체류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 지역관광은 체류인구 증대와 지역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진흥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방관광 인력 육성 정책이다. 지역 인바운드는 외국인 관광객 대상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전문 인력 확보가 핵심 과제이다. 지역 여행업계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인바운드 여행상품 운영상 어려움으로 인력 부족(79.3%)을 꼽았다. 현재의 수도권 집중 외래관광객을 지방도시로 분산하기 위해서는 관광전문인력 육성을 통한 지역관광 품질 향상과 이를 유도하는 지역관광 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체험상품의 핵심 경쟁력은 체험상품을 기획하고 실제 현장에서 이를 서비스하는 훈련된 인력의 역할에 의해 관광 경험이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현장 인력 육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안희자·이성빈, 2025).

그림 5 지역 인바운드 여행업계의 애로사항



자료 안희자·이성빈, 「인바운드 관광활성화를 위한 지역특화 여행산업 육성 방안」, 2025.

마지막으로, 관광서비스 품질의 고도화이다. 바야흐로 디지털 여행의 시대이다. 초개 인화된 여행수요에 대응하고, 모바일 하나로 여행의 전 과정이 이루어지는 최근의 여행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지역, 로컬의 공간에서 관광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이 요구된다. 지역 특화 관광콘텐츠를 활용한 차별화된 관광상품 기획과 운영, 로컬관광 브랜드 구축 등 지역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고 상품화산업화로 연결될 수 있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지역관광 비즈니스에 기반을 둔 관광산업 발전 모델을 지속 개발·육성해야 한다. 지역 기반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지역 현안을 발굴하고 해결을 주도 하는 지역관광추진조직(DMO, Destination Marketing&Management Organization) 등 주체를 양성하여 지역관광 마케팅 및 관광산업 육성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맺음말

최근 인바운드 관광시장의 변화는 성장과 집중, 과잉과 불균형 등 새로운 이슈를 제기하고 있다. 지역관광도 혁신적 의제 설정이 요구된다. 고령화와 인구감소, 기후위기 대응, AI 등 디지털 기술 대응, 산업 간 융합 등 정책 환경 변화를 고려한 관광정책의 역할 설정과 유연한 정책의제 설정이 요구되는 때이다. 관광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관광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관광산업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 특히, 시대적 과제인 지방소멸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 관광산업 성장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지역의 인바운드 관광 활성화는 단순히 관광목적지의 공간적 변화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지역관광으로의 체질 전환이며, 지역관광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통한 관광강국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다. 🌐

참고자료

- 감지수·최경은, 「인구감소지역 관광객 유입의 경제효과 분석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수시연구, 2022.
- 관계부처 합동, 「제11차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 자료」, 2026.2.25.
- 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관광산업조사」, 2025.
- 문화체육관광부, 「2025년 외래관광객조사」, 2026.
- 문화체육관광부, 「2026년 방한 외국인 관광객 1,000만 돌파」, 보도자료, 2026.6.24.
- 안희자·이성빈, 「인바운드 관광활성화를 위한 지역특화 여행산업 육성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정책연구, 2025.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6년 하반기 국제관광시장 전망」, 2026.
- 日本観光庁, 「観光立国推進基本計画(第5次)」, 2026.3.27.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한국 경제: 지붕은 해가 떠 있을 때 고쳐야 한다



글. 김동영
KDI 전문연구원·중앙대학교 겸임교수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한국 경제의 기록을 다시 쓰고 있다. 사상 최대의 경상수지 흑자와 기업 실적, 주가 최고치 경신에 이어 호남권에 800조원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초대형 투자 계획까지 발표되었다. 그러나 지난 30년간 한국 반도체는 네 차례의 정점을 지나며 같은 패턴을 반복해 왔고, 사이클의 하강은 이미 산업을 넘어 국가 재정과 지역경제의 문제가 되었다. 불확실성 앞에서 필요한 것은 정확한 전망이 아니라, 전망이 틀려도 견디는 의사결정의 구조다. 노르웨이가 석유 호황의 수익을 준칙으로 관리해 다음 세대의 재원으로 만들었듯, 우리도 이번 호황의 잉여를 인력·전력망·연구 생태계라는 '구조의 두께'로 바꾸어야 한다. 호황은 지붕을 고칠 수 있는 맑은 날이며, 맑은 날은 길지 않다.

들어가며



좋은 숫자만
늘어놓으면 위험을
잊기 쉽다. 사이클의
정점에서 내려야
할 의사결정은, 늘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어렵다.



거듭 갱신된 기록은 놀랍다. 2026년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사상 최대인 2,400억달러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주를 이룬다. 지난해 실적의 거의 두 배에 가깝다. 이러한 실적을 견인한 주역은 단연 반도체다. SK하이닉스의 2026년 2분기 영업이익은 60조원을 넘었고,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도 같은 분기 89조원을 웃도는 이익을 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지금의 국면을 1990년대 호황에 견줄 만한 슈퍼사이클로 부르기 시작했다. 인공지능(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폭발하면서 D램 가격은 1년 사이 몇 배로 뛰었고, 글로벌 빅테크들은 2027년 물량까지 미리 확보하려는 ‘입도선매’ 경쟁에 나섰다. 월 단위로 체결되던 메모리 공급계약이 반기 이상의 장기계약으로 바뀐 것은 공급자 우위가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다. 여기에 지난 6월 29일, 정부와 기업은 낙관의 지도를 공간적으로 확장했다. 청와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서남권(호남)에 총 800조원을 투입해 메모리 팹 4기를 건설하고, 충청권에 81조원 규모의 첨단 패키징 거점을 조성하며, 5년 안에 D램 생산능력을 두 배로 늘리겠다는 계획이 발표된 것이다. 발표 일주일 만에 부지가 결정될 만큼 추진 속도도 이례적이다. 물론 이렇게 좋은 숫자만 늘어놓으면 위험을 놓치기 쉽다. 잊지 않아야 할 점은 모든 산업에는 사이클이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사이클의 정점에서 내려야 할 의사결정은 언제나 가장 어렵다.

과거의 교훈: 사이클의 정점은 재정으로 전이된다



반도체 사이클은 이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재정의 변동성 그
자체가 되었다.



지난 30년 동안 한국 반도체는 유사한 정점을 네 차례 경험했다. 1995년 첫 D램 호황, 2000년 닛켄 호황, 2017~2018년 메모리 호황, 그리고 2021년의 단기 반등이다. 매번 ‘이번에는 다르다’고 자신했고, 침체기가 오면 ‘예상보다 깊다’는 한탄이 반복되었다. 정점에서 확보한 현금흐름은 설비 증설과 배당, 자사주 매입에 흡수되었고, 침체기가 오자 그 설비는 다시 짐이 되었다.

문제는 사이클의 하강이 산업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2018년의 정점을 지난 2019년 반도체 수출은 전년보다 4분의 1 넘게 줄었고, 그해 우리 경제의 수출과 성장률은 함께 주저앉았다. 더 뼈아픈 것은 재정이다. 2023년에는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급감으로 법인세가 예산을 크게 밑돌면서 약 56조원의 국세수입 결손¹⁾이 발생했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수가 영원히 계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지출의 눈높이를 높

1) 기획재정부의 「2023회계연도 국세수입 실적」에 따르면 2023년 국세수입은 344.1조원으로 예산(400.5조원) 대비 56.4조원 부족하였으며, 이 중 법인세 결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여 놓으면, 사이클이 꺾이는 순간 재정은 세입 감소와 경기대응 지출 증가라는 이중의 압박을 받는다. 반도체 사이클은 이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재정의 변동성 그 자체가 되었다.

네덜란드 병과 노르웨이의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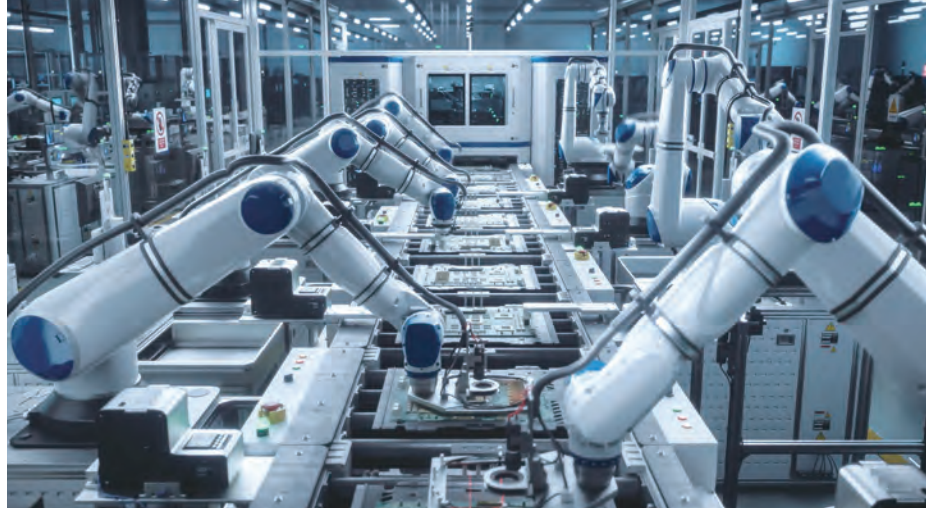
“
노르웨이는 석유라는
변동성 큰 세원을
‘그 해의 경기’가 아니라
‘다음 세대의 자원’으로
전환했다.”

이 패턴은 자원 의존 경제에서 자주 관찰되는 현상과 닮아 있다. 경제학에서 ‘네덜란드병(Dutch Disease)’이라 부르는 이 현상은, 한 산업의 호황이 환율과 임금 등 요소 가격을 끌어 올려 다른 산업의 경쟁력을 잠식하고, 노동과 자본을 호황 산업으로 빨아들이는 과정이다. 1959년 대형 천연가스전을 발견한 네덜란드가 이후 제조업 경쟁력 약화를 겪으면서 붙은 이름이다. 그 결과 호황이 꺾일 때 다른 산업까지 함께 무너지는 ‘이중 추락’이 일어난다.

같은 조건에서 다른 길을 간 나라가 노르웨이다. 노르웨이는 1990년대 북해 유전 호황의 수익을 국부펀드로 가두어서 본토 경제와 분리하고, 매년 기금의 장기 기대수익률 범위 안에서만 재정에 투입하는 준칙²⁾을 세웠다. 석유라는 변동성 큰 세원을 ‘그 해의 경기’가 아니라 ‘다음 세대의 자원’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 기금은 오늘날 세계 최대의 국부펀드로 성장했다. 반면 한국의 반도체 호황은 지난 30년간 그 시점의 거시지표를 떠받치는 데 늘 소진되었다.



2) 노르웨이 정부연금기금(GPFG: Government Pension Fund Global)은 1990년 설립 이후 석유·가스 수입을 기금에 적립하고, 매년 기금의 장기 기대 실질수익률(현재 연 3% 수준) 범위 내에서만 재정에 이전하는 재정준칙(handlingsregelen)을 운용하고 있다. 2025년 기준 기금 규모는 약 2조 달러로 세계 최대 국부펀드다.



산업 차원에서도 유사한 역사가 있다. 2000년대 중반 세계 발주량을 휩쓸었던 한국 조선업은 호황기에 설비와 인력을 공격적으로 늘렸지만, 2010년대 수주절벽이 닥치자 대규모 구조조정과 공적자금 투입이라는 값비싼 청구서를 받았다. 호황이 위험한 이유는 사이클이 끝나서가 아니라, 끝날 것을 알면서도 그동안의 여유분을 구조 전환에 쓰지 못했기 때문이다.

호남 800조원 투자: 성패는 팍이 아니라 팍 밖에서 갈린다

“

불확실성 앞에서
필요한 것은 정확한
전망이 아니라,
전망이 틀려도 건디는
의사결정의 구조다.

”

이번 서남권 투자 발표는 그 자체로 획기적이다. 전력과 용수가 한계에 다다른 수도권 대신 재생에너지와 용지가 풍부한 서남해안에 제2의 생산기지를 조성하고, 충청의 패키징, 영남의 소재·부품·장비를 잇는 전국 단위의 분업 구조를 설계했다는 점에서 반도체 투자와 국가균형 발전을 결합한 최초의 시도라 할 수 있다. 다만, 투자의 크기만큼 짚어야 할 부분도 존재한다.

첫 번째는 투자 규모의 검증이다. 미리 분명히 해 둘 것은 이 투자가 공급 과잉으로 귀결되리라는 예측이 아니다. 과거 PC의 등장으로 인한 반도체 수요 폭발을 예측하지 못했듯, AI 수요가 지금의 전망마저 뛰어넘어 폭발한다면, 남보다 먼저 확보해 둔 생산 능력은 그대로 ‘신의 한 수’가 된다. 사이클의 존재는 확실하지만 변곡점의 시점은 누구도 알지 못하며, 알 수 없는 것을 맞히는 데 정책 역량을 소모할 이유도 없다. 문제는 예측이 아니라 검증이다. 다행히 메모리 반도체는 검증 가능한 산업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세 회사가 세계 D램 공급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과점 구조여서, 경쟁사의 투자 계획과 증설 규모는 공시와 발표를 통해 상당 부분 관측된다. 여기에 미국·일

본·대만에서 가동을 앞둔 신규 팹까지 더하면, 향후 세계 공급 곡선의 윤곽은 이미 상당 부분 그려져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고민해야 할 점은 시나리오다. ‘5년 내 D램 생산능력 2배’는 경쟁사들의 증설 계획을 합산한 세계 공급 곡선 위에서 검토된 숫자인가, 투자에서 양산까지 수년의 시차를 지나 공장이 완공되는 시점에 수요가 전망을 밀도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오더라도, 지금의 기록적인 영업이익이 만들어 준 재무 여력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규모인가에 대한 고민이다. 수요 하방 시나리오는 공상으로 치부할 만한 것은 아니다. 메모리 가격 급등이 스마트폰·PC 등 전방 수요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전망은 많은 곳에서 언급된다. 이러한 질문은 노르웨이의 원리वाद도 유사하다. 노르웨이는 유가를 맞춰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유가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도 무너지지 않는 준칙을 설계해서 성공했다. 불확실성 앞에서 필요한 것은 정확한 전망이 아니라, 전망이 틀려도 건디는 의사결정 구조다. 800조원이라는 숫자의 크기보다 그 숫자가 어떤 시나리오 검증을 거쳐 산출되었는지 함께 설명될 때 800조원 투자의 신뢰는 높아진다.

두 번째는 지역경제의 구조다. 군산의 자동차, 거제의 조선, 구미의 모바일이 보여주듯, 단일 기업·단일 산업에 의존한 지역경제는 그 산업의 사이클에 지역의 운명을 통째로 연동시킨다. 2018년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문을 닫자 협력업체와 상권, 부동산, 지역 고용이 연쇄적으로 무너졌고, 정부는 뒤늦게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이라는 사후 처방에 나서야 했다. 호남 클러스터가 ‘팹 4기’로 끝난다면 지역은 세계 메모리 시장의 수신자가 될 뿐이다. 소부장 협력사와 연구기관, 그리고 교육-고용-정주로 이어지는 생태계가 함께 뿌리내려야 사이클의 하강 국면에서도 그 지역이 진폭을 흡수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인프라와 인력이다. 팹 4기는 원자력발전소 여러 기에 해당하는 전력과 막대한 공업용수 그리고 수만명의 엔지니어를 요구한다. 세계 최고의 파운드리를 보유한 대만이 만성적인 인력난과 전력 제약에 시달리고, 미국 애리조나의 신설 팹이 숙련인력 문제로 가동이 지연되었던 사례는, 반도체 경쟁력의 병목이 팹 건설이 아니라 그 팹을 떠받치는 기반에 있음을 보여준다.

호황의 돈을 다음 사이클의 밑천으로 바꾸는 재정

그래서 정책의 초점은 분명해진다. 호황기의 영업이익과 세수야말로 구조 개혁의 가장 저렴한 재원이다. 침체기에는 같은 개혁을 하려 해도 비용이 훨씬 비싸지고, 의사결정의 정치적 부담은 훨씬 무거워진다.

재정운용의 관점에서 세 가지가 필요하다. 우선 반도체발 초과 세수를 경기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으로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 지금처럼 법인세수의 상당 부분을 소수 반도체 기업의 실적이 좌우하는 구조에서는 세수 추계 단계에서부터 반도체 사이클에 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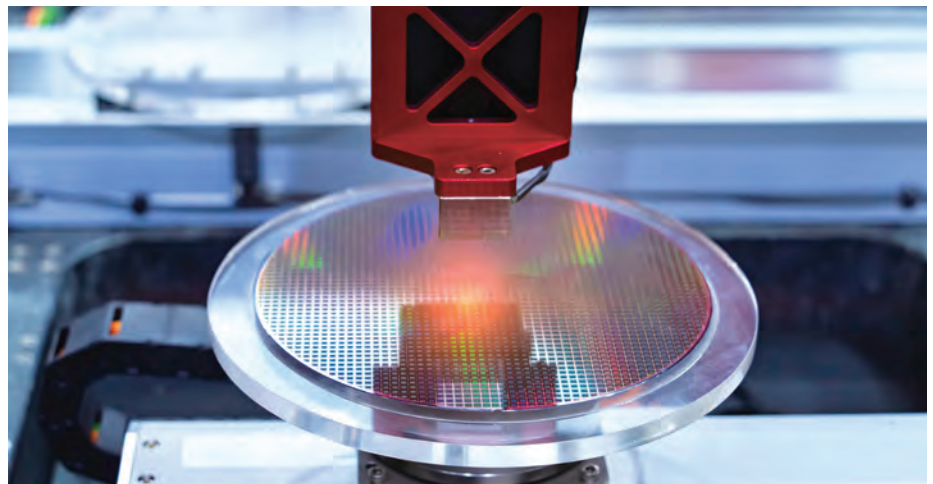
호황기의 영업이익과
세수야말로 구조
개혁의 가장 저렴한
재원이다. 재정의
역할은 펍 자체가
아니라 그 주변에
있다.

”

한 세입의 민감도를 명시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호황기의 법인세 증가분을 항구적 지출의 근거로 삼기보다 재정의 완충 여력을 복원하고 다음 침체기의 자동안정화 재원으로 비축하는 노르웨이식 발상이 필요하다. 2023년의 대규모 세수 결손은 이런 장치 없이 호황기의 세수 전망을 그대로 연장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줄 예고편이었다. 다음으로 800조원의 민간 투자에 맞는 재정의 역할은 펍 자체가 아니라 그 주변에 있다. 전력망과 용수, 반도체 특성화 교육과 연구 생태계, 정주 여건이라는 ‘회수 기간이 긴 투자’에 재정을 집중할 때, 민간의 투자는 비로소 지역과 국가의 자산이 된다. 기업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다. 분기 최대 실적이 연구개발과 인력양성, 비메모리·소부장 생태계로 흘러가고 있는가, 아니면 단기 주가 부양을 위한 자사주 매입과 배당으로만 환원되고 있는가.

지붕은 해가 떠 있을 때 고쳐야 한다

호황이 가장 좋은 때라는 것은 회계상의 사실일 뿐이다. 일찍이 케네디 대통령이 말했듯, 지붕은 해가 떠 있을 때 고쳐야 한다.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면 같은 수리가 몇 배 어려워지고, 그때는 이미 집 안이 젖고 있다. 그리고 맑은 날은 생각보다 길지 않다. 메모리 가격 조정의 신호는 이미 시장 일각에서 감지되고 있고, 미·중 칩 경쟁의 변수와 세계 각국의 신규 생산능력 가동이 2027년 이후의 수급을 흔들 수 있다. 슈퍼사이클의 끝은 늘 갑자기 온다. 그러나 그 끝을 어떻게 맞이할지는 지금의 결정이 정한다. 맑은 날 지붕을 고쳐 둔 기업과 국가만이, 사이클이 꺾인 뒤에도 무너지지 않는다. 가장 좋은 때, 가장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한국 경제에, 그리고 한국 재정에 던지는 진짜 질문이다. 🌐





WORK & REPORT

예산정책자문위원 기고: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권순만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48

NABOSTATS의 주요 통계 소개:
지방자치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는 지방재정통계
노현정 정책총괄담당관실 정책분석관

52

NABO 발간보고서 소개
56

예산정책연구 논문 소개
81

NABO 소식
85

NABO 직원 이야기
김성훈 사회행정사업평가과 자료분석연구원

86

예산정책자문위원 기고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글. 권순만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고령화를 경험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노인 장기요양보험이 2008년에 도입되었고, 이는 노인들의 장기요양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고 가족의 부양 부담을 줄여주는 데 일조하고 있다. 하지만 급격한 인구고령화와 후기 고령층 증가에 따라 장기요양보험의 비용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가속화되어 장기적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 장기요양보험의 적용 대상자는 (건강보험에 가입된) 전 국민이지만 주로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즉 65세 이상의 경우 모든 장기요양을 대상으로 하지만, 65세 미만 인구의 경우 노인성 질병으로 인한 장기요양만이 요양보험 급여의 대상이 된다. 현재 65세 미만 인구는 보험료를 납부하지만 이들이 실제 요양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은 매우 낮으므로, 장기요양보험은 세대 간 이전의 정도가 매우 큰 현실에서, 요양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제반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들이 절실하다.

장기요양보험 재정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은 2025년 현재 약 17.43조원으로, 주로 장기요양보험료(약 65%)와 국가 예산으로 이루어진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25). 장기요양 보험료율이 소득이 아닌 건강보험료율의 특정 비율로 정해지는 것은, 건강보험료율이 매년 인상되는 현실을 볼 때,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설사 동결되더라도, 실제로 건강보험료율 인상만큼은 인상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영리한 방법으로 볼 수 있다. 2009년 건강보험료율의 5.08%로 시작된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6.55%로 동결되었다가 2025년 12.95%까지 증가하였는데, 소득 대비로는 동 기간 0.24%에서 0.9182%로 증가한 것이다. 정부지원금의 경우, 정부가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한다. 하지만 ‘예상 수입액’을 기준으로 사전에 지원액을 결정하다 보니 실제 정부지원의 규모가 요양보험료 수입의 20%에 못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체 장기요양비용 중 공공재원(보험료와 예산 지원)의 비중, 이른바 보장성은 우리나라(74%)가 독일(71.5%)과 비슷하지만 일본(91.1%)에 비해서는 낮다(OECD Health Statistics 2025). 즉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존재하지만 본인부담금의 비율이 높아서 노인들과 가족의 경제적 부담은 여전히 제법 높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는 인구고령화의 현재 수준은 낮은 반면 고령화의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장래에 재정 고갈의 문제를 빠르게 경험할 것이고 따라서 재정안정화를 위한 정책 대안들이 더 시급한 실정이다.

지속가능한 장기요양보험 재정을 위한 대안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원확보가 필요하다. 장기요양 급여와 서비스 제공 체계를 변화하는 것(예:재가 급여 확대, 시설 급여 축소, 예방서비스 확대, 커뮤니티 케어 강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연계 등)은 간접적으로 보험 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으나 본고에서는 재정정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주요 대안들을 논의하고자 한다.

보험료와 본인부담금 차별화 인상

장기요양보험에서 보험료는 가장 직접적인 재원 확보 수단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보험료를 인상하고 있고, 또 보험료를 부담하는 대부분의 가입자가 젊은 근로계층이어서 보험료 수준을 지금보다 더 빨리 인상하는 결정은 정치적인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다만 독일의 경우 자녀 수에 따라 보험료율을 경감하고 있는데, 무자녀 가입자로부터 추가적인 보험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하지만 이 역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25년 독일의 요양보험 보험료는 무자녀일 경우 4.2%, 여기서 1자녀의 경우 0.6%p 할인하여 3.6%인데, 여기에서 2자녀의 경우 0.25%p 할인, 3자녀의 경우 0.5%p 할인, 4자녀의 경우

0.75%p 할인, 5자녀의 경우 1.0%p 할인을 적용한다(Bundesministerium für Gesundheit, 2026).

재원확보를 위한 또 다른 대안은 이용자의 본인부담을 인상하는 것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의 법정 본인부담률이 낮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전반적인 본인부담률을 인상하는 것이 요양보험의 보장성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많은 나라들에서 의료서비스와 장기요양서비스에 있어서 다른 기준으로 환자·이용자 본인부담을 책정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즉 장기요양서비스의 혜택 대상이 되는가(eligibility)는 신체 및 인지기능 상태를 평가하여(소득에 상관없이) 결정되지만, 대상자가 실제 서비스를 이용할 때에는 지불능력에 따라 본인부담을 달리하는 것이다. 이는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의료서비스와는 달리, 신체기능과 삶의 질, 생활보조 등의 성격을 가지는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책임을 더 강조하는 관점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나이가 젊은 연령층에 있어서는 과도한 의료비를 충당하기 위해 소유 중인 주택을 매각하는 것이 어렵지만, 노인층의 경우 역모기지 등을 통해 자산을 매각하고 요양 비용을 충당하는 것이 용인되는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장기요양제도 중 공공지출의 비중이 가장 높은) 호주에서는 인지 및 신체기능에 의해(정부 조세/예산 기반) 공적 장기요양제도의 수혜가 결정되면, 재가서비스에서는 소득(연금, 투자 소득 등 모든 소득)에 기반해 본인부담금이 차별화되고, 시설서비스에서는 소득과 자산 평가에 기반해 본인부담이 차별화된다. 네덜란드에서는 전체 장기요양보험 재원 중 7% 정도가 이용자 본인부담금인데, 그 크기는 이용자 개인의 자산과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Alders, 2024). 본인부담금을 이용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차별화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의 최고상한액을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추가 자원 확보

은퇴 후 고령 인구는 근로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반면 소비세 및 재산세의 경우 은퇴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유지되므로, 장기요양보험의 재원을 (임금 소득 기반) 보험료에만 의존하는 것은 지속가능성이 낮고 또 젊은 세대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소비세 등 추가적인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안정적인 장기요양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바람직할 것이다.

일본은 소비세의 세수를 매년 연금, 의료 및 노인장기요양의 사회보장급부와 저출산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한다는 점을 명문화하고, 7년간 (2012년 5%, 2014년 8%, 2019년 10%) 단계적으로 인상하였다(조승래, 2019). 2012년 8월 민주당, 자민당, 공민당 3당 합의 하에 「소비세 증세법」이 제정되고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증세분을 모두 사회보장 안정화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키로 하였는데 이 중 일부가 개호보험(장기요양보험) 재원으로 활용된다. 비록 소비세가 (간접세로서) 역진적일 수 있지만, 소득세, 법인세 등과 비교할 때 모든 세대가 부담하고, 가계의 저축이나 기업 투자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경기 변동에 크게 민감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이다. 향후 우리나라에서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건강이나 노인요양을 위한 재원으로 (목적세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독일이 2015년에 도입한 장기요양 준비기금(Pflege-

-vorsorgefonds)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직과 고령화에 따라 예상되는 지출을 사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장치로서, 보험료의 0.1%를 준비기금으로 마련해 2035년부터 활용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권순만 외, 2021). 2018년까지는 소득의 2.55%이던 장기요양보험 부과율이 2019년 3.05%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상승한 보험료 증가분 0.5%p 중 0.1%p를 장기요양 준비기금으로 누적한 것이다(European Commission, 2018). 이 제도에서는 장기요양 지출의 당사자가 되는 고령층 또는 특정 세대에만 기금 조성 부담 의무를 부여하는데, 2035년부터 인구변화나 높은 지출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특정 세대의 예상되는 장기요양 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적 기금 또는 65세 이상 고령층의 장기요양 지출을 대비하기 위한 기금을 마련하는 것을 논의해 볼 수 있다. 다만 보험료를 내는 모든 사람이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연령 이상이 납부하는 것으로서, 누가 얼마나 납부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최근 반도체 산업 등으로부터의 추가 세수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위한 특별기금으로 적립하여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사용한다면 미래 세대의 지나친 부담을 줄여주는 데 기여할 것이다.

정부 예산 지원 확대

노인들의 요양을 주로 급여하는 장기요양보험은 장기적으로 볼 때 보험료 수입에만 의존할 경우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필연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비록 급여의 주 수혜자는 노인이지만 전 국민이 요양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이 다행히도 큰 정치적 저항없이 도입되었다. 모든 국민이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는 데 반해 (자격/수혜 기준이 상이해서) 65세 미만 인구는 실제적으로 거의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혜택을 받기 어려우므로, 자원 구조의 측면에서 보면 장기요양

보험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모든 사람이 노인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즉각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보다 오히려 연금과 유사한 면이 많다. 하지만 연금의 경우 은퇴 후 확정적으로 급여를 받는 데 반해, 장기요양보험은 65세가 되더라도 본인의 인지·신체 기능 평가를 통해 혜택이 결정된다. 따라서 장기요양보험은 세대 간 재정이전(재분배)의 정도가 매우 큰 제도이다. 향후 인구고령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요양보험 지출이 더욱 빠르게 증가할 때, 보험료의 인상을 65세 미만 인구가 어느 정도까지 감내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하다. 나아가 최근 논의되는 것처럼 AI에 의해 젊은층의 고용도 감소한다면 보험료에 기반한 장기요양보험(그리고 다른 사회보험들)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은 낮아지고, 그렇다면 요양보험 재원에서 정부예산(지원금)의 비중을 높이는 것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일본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에서 보험료와 정부 예산(지원금)의 비중은 동일하다. 일본 요양보험은 우리나라와 달리 모든 국민이 아니라 40세 이상 인구만이 요양보험료를 납부한다(65세 이상 인구에 비해 40~64세 인구는 제한적인 급여를 받음, 예, 노인성 질환자). 즉 40세 미만 인구는 요양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정치적 저항은 줄일 수 있지만 대신 보험료 수입이 크지 않으므로 정부가 많은 예산 투여를 하는 것이다. 실제로 장기요양보험이 비록 보험이라는 명칭이지만 주 수혜 대상자인 노인들의 보험료 지불능력이 제한적이므로, 순수하게 보험료에만 재정을 의존하는 나라는 드물다. 일본 외에 네덜란드의 경우에도 장기요양보험 재원에서 정부예산의 비중(43%)은 보험료 비중(50%)에 비해 약간 낮을 뿐이다. 예외적으로 독일의 장기요양보험 재정은 정부예산 지원 없이 보험료 100%로 운영되는데, 대신 독일은 노인 대상 장기요양보험이라기보다는 모든 연령의 장애와 요양을 급여하는 장애보험의 성격이 강하다. 즉 (한국과 일본과는 달

리) 요양보험의 수혜 기준이 연령에 따라 다르지 않고 또 전반적인 급여의 수준이 낮다(낮은 보장성).

맺으면서

장기요양보험 재원의 확보뿐 아니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험료와 본인부담률의 소득 기준 차별화, 특별준비기금 도입, 소비세 등을 목적세로 활용, 정부예산의 증가 등이 필요하다. 세대 간의 이전 효과가 매우 큰 장기요양보험의 특성을 고려할 때 보험료에만 의존할 경우,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심각하게 저하될 것이다.

나아가 요양서비스는 노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 차원의 제공체계에 기반해야 하고, 지역의 제반 사회복지서비스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하지만 전국 단일보험자 체계인 현재의 장기요양보험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극히 미비하고 지역 차원의 복지서비스와 제대로 연계되지 않아서, Ageing in Place가 구현되기 어려운 현실이다. 따라서 보험료는 전국 단위로 부과하고 징수하되, 보험료가 각 (지역의 니드에 기반하여) 지방정부에 배부되어 이들이 지역 사회 노인들에게 요양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을 가지는 재정거버넌스 개혁도 고민해 보아야 한다. 즉 장기요양보험 재원조달은 지금처럼 전국 단일체제로 하되, 요양서비스의 구매는 지방정부가 (지역사회의 복지서비스와 같이 고려하여) 주도하는 체계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 🌱

참고자료

- 권순민 외, 「지속가능한 장기요양보험 제도개선방안 연구」, 보건복지부-서울대학교, 2021.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4 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2025.
- 조승래, 「저성장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일본의 세제개혁」, 국회입법조사처, 2019.
- Alders, P., Long-term care in the Netherlands, PPT presented in the WHO seminar in Longterm Care Insurance, China, 15 Nov 2024.
- Bundesministerium für Gesundheit, Financing of social long-term care insurance, 13 March 2026.
- European Commission, The 2018 Ageing Report: Economic and budgetary projections for the 28 EU Member States (2016–2070), 2018.
-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25,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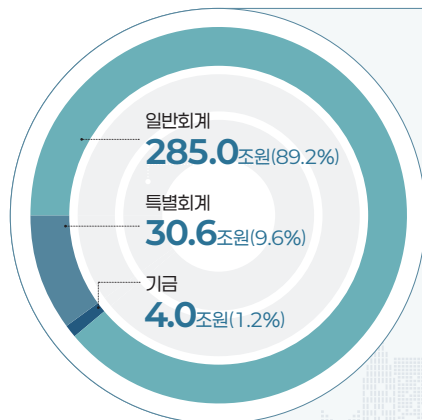
지방자치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는 지방재정통계



NABOSTA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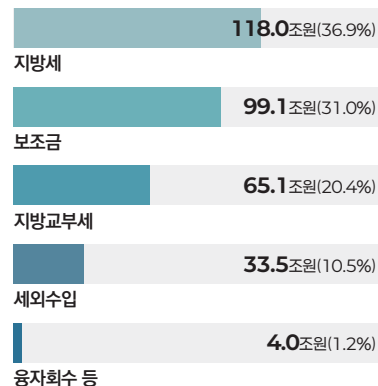
글. 노현정 정책총괄담당관실 정책분석관

회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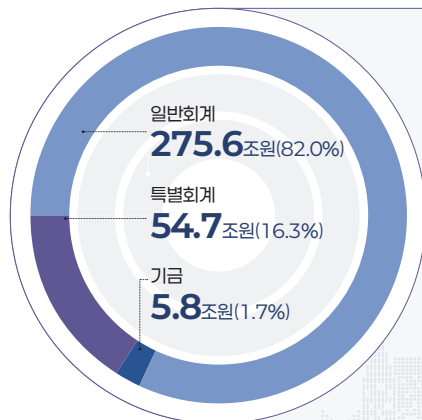


2026년
통합재정수입
총 319.6조원

세입항목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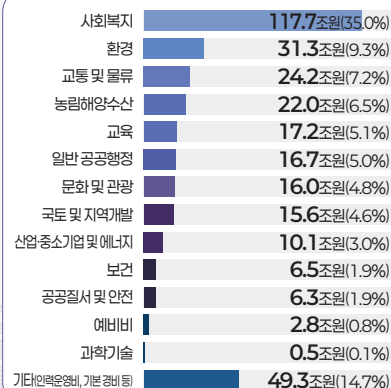


회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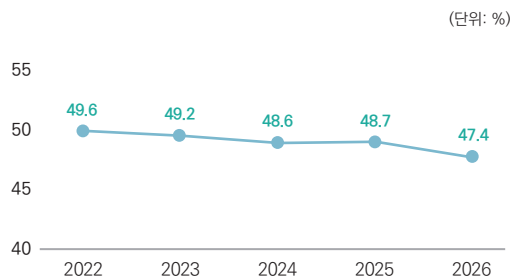
2026년
통합재정지출
총 336.1조원

세출분야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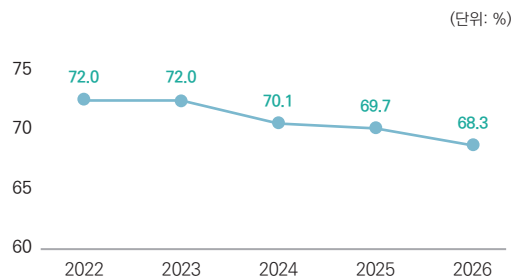


자료 행정안전부,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 개요」

| 통합재정자립도



| 통합재정자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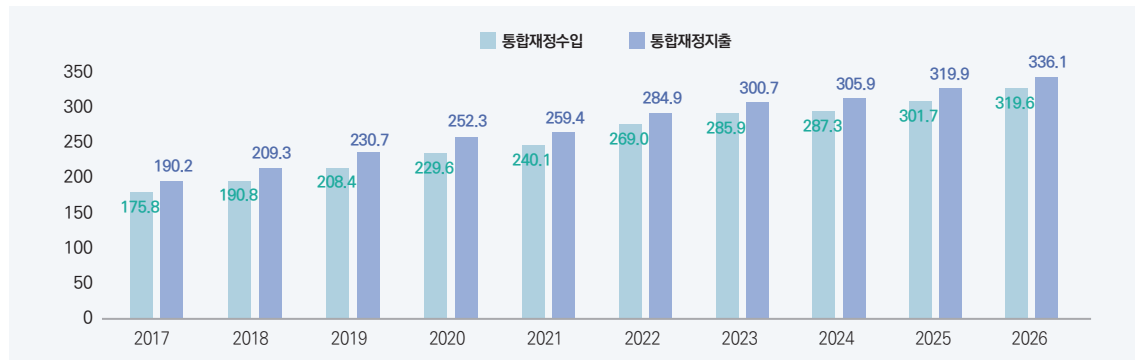
자료 NABOSTATS-재정·경제통계-지방재정 / 행정안전부,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 개요」

1995년 6월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되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30여년이 지났다. 그동안 지방정부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고, 이와 함께 안정적인 역할 수행을 위한 기반인 지방자치단체 예산 규모 또한 1995년 52.4조원에서 2025년 326.0조원으로 약 6.2배 증가하였다. 2026년 예산은 341.9조원으로 2025년 당초예산 대비 15.9조원(4.9%) 증가한 규모이다.

국회예산정책처 재정경제통계시스템(이하 NABOSTATS)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재정¹⁾ 규모를 살펴보면, 지방재정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재정지출은 2017년 190.2조원에서 2026년 336.1조원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6.5%의 성장 추이를 보이는데, 이는 같은 기간 경제성장률(2017~2025년 실질GDP 연평균 증가율 2.2%)을 4.3%p 상회하는 수준이다.

그림 1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규모(당초예산 기준)

(단위: 조원)



자료 NABOSTATS-재정·경제통계-지방재정 / 행정안전부,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 개요」

그러나 이러한 지방재정 규모의 양적 확대가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²⁾ 강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통합재정자립도 및 통합재정자주도는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어 지방재정의 중앙정부 의존도는 오히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통합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재정수입 중 자체수입(경상수입, 자본수입, 융자회수)의 비중을 나타내는 것으로 지방재정운용의 자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반면, 통합재정자주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재정수입 중 자체수입과 이전수입(보조금 제외) 등 실질적인 자주재원의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로,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을 포함하여 재정력을 산출한다는 점에서 통합재정자립도와 차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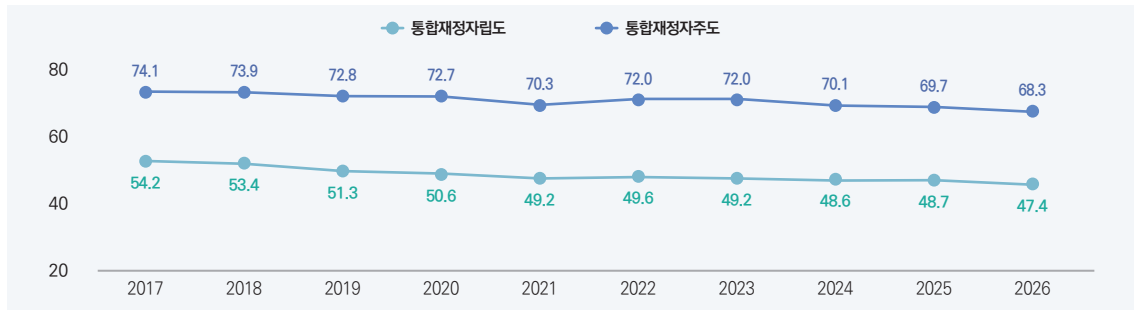
NABOSTATS을 통해 최근 10년간 두 재정력 지표의 추이를 살펴보면, 통합재정자립도는 2017년 54.2%에서 2026년 47.4%로, 통합재정자주도 역시 같은 기간 74.1%에서 68.3%로 하락하였다.

1) 지방통합재정은 IMF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및 기금과 지방공기업의 공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전체 재정활동을 의미하며 2013년도부터 발표되고 있다.

2) 재정력은 일반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재정을 조달하고 이에 따라 행정서비스 및 공공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재정수준 혹은 자유재량에 의해 용처를 결정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림 2 최근 10년간 통합재정자립도 및 통합재정자주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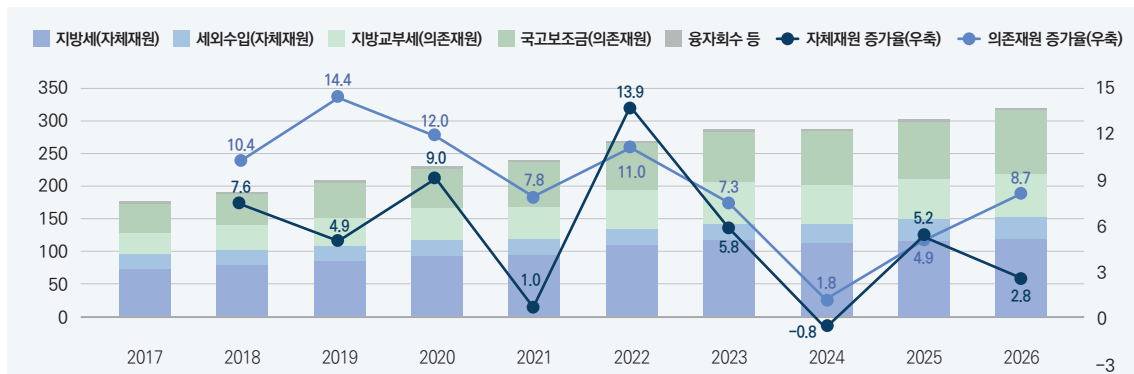
자료 NABOSTATS-재정·경제통계-지방재정 / 행정안전부,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 개요」

이는 지방소비세율 인상, 지방세 신세원 발굴 등 지방세 확충을 위한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져 자체재원의 규모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 이전재원이 더 빠르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최근 10년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수입 현황을 보면, 2017년 대비 2026년 지방세 규모는 66.0% 증가(71.1조원 → 118.0조원)한 반면, 지방교부세 규모는 93.2%(33.7조원 → 65.1조원), 국고보조금 규모는 124.7%(44.1조원 → 99.1조원) 증가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지방재정 규모 확대와 별개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구조 측면에서는 중앙정부 의존성이 여전히 높음을 보여준다.

그림 3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수입 세입항목별 규모

(단위: 조원, %)



주 본예산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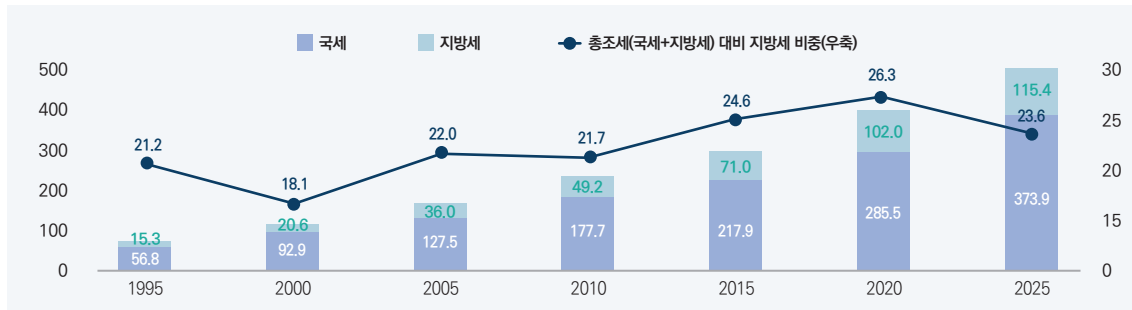
자료 NABOSTATS-재정·경제통계-지방재정 / 행정안전부, 각 연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 개요」

한편, 현 정부는 ‘지방재정 확충으로 자치재정권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고,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국세 및 지방세 비율을 7:3 수준으로 상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995년 이후 총조세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대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향후 정부의 제도개선에 따라 주요 자체재원인 지방세 비중이 30%로 확대된다면 지방재정 자율성과 자주권 강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4 국세 및 지방세 비중 추이

(단위: 조원, %)



주 2024년까지는 결산, 2025년은 지방세는 최종예산, 국세는 결산 기준임

자료 NABOSTATS-재정·경제통계-조세통계-기초통계 / 행정안전부, 각 연도 「지방세통계연감」

NABOSTATS은 통합재정 수입·지출, 통합재정자립도 및 통합재정자주도, 지방세 수입구조 및 징수액, 중앙정부 이전재원 현황, 지방채 현황 등 지방재정의 규모와 구조, 재정력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통계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현황과 변화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자치재정권 강화와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연구를 지원하는 기초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다. 🌐

nabO STATS

[재정경제통계시스템]

NABOSTATS(재정경제통계시스템)은 국회예산정책처가 의정활동 및 학술연구에 필요한 재정·경제 통계, 국회의 예·결산심사 연혁 등을 One-Stop으로 제공하는 통계정보시스템입니다.


www.nabostats.go.kr

NABO 발간보고서 소개^(5.1.~7.31.)

NABO 분석보고서

보고서명	발간부서	발간일
공공기관 상생협력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예산분석실 공공기관평가과	5월 8일
공공기관 해외사무소 운영 현황 및 개선과제	예산분석실 공공기관평가과	5월 12일
공공기관의 정부 위탁사업 수행 및 재위탁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과제	예산분석실 공공기관평가과	5월 19일
포용적 금융 등 금융개혁 방안	예산분석실 경제산업사업평가과	5월 21일
지방공기업 재무 현황 분석	예산분석실 공공기관평가과	5월 26일
2025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5월 29일
2026 대한민국 공공기관	예산분석실 공공기관평가과	6월 10일
노인 지원 사업의 재정전망과 기초연금 시나리오 분석	추계세제분석실 사회비용추계과	6월 22일
재생에너지 지원사업 평가	예산분석실 사회행정사업평가과	6월 29일
금융취약계층 지원 채무조정제도 운영 평가	예산분석실 경제산업사업평가과	6월 30일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현황 평가	예산분석실 사회행정사업평가과	7월 1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평가	예산분석실 경제산업사업평가과	7월 2일
콘텐츠산업 육성사업 평가	예산분석실 사회행정사업평가과	7월 6일
2026 대한민국 사회보험	추계세제분석실 사회비용추계과	7월 6일
혁신제품 조달 사업 평가	예산분석실 경제산업사업평가과	7월 7일
지역의료 지원사업 현황과 개선과제	예산분석실 사회행정사업평가과	7월 8일
2035 NDC 주요 부문 감축경로 점검	경제분석국 산업자원분석과	7월 10일
2025회계연도 결산 분석시리즈 I -Ⅷ	예산분석실	7월 10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 사업·정책 평가	예산분석실 경제산업사업평가과	7월 13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사업 평가	예산분석실 사회행정사업평가과	7월 14일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평가	예산분석실 경제산업사업평가과	7월 16일
2026 대한민국 경제	경제분석국 경제분석총괄과	7월 16일
2026 세계경제	경제분석국 경제분석총괄과	7월 16일
해외 주요국의 주택 보유세제 비교 분석	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2과	7월 27일



NABO 정기간행물

보고서명	발간부서	발간일
NABO 경제동향&이슈(제141호)	경제분석국 거시경제분석과	5월 20일
NABO 인구·고용동향&이슈(제6호)	경제분석국 인구전략분석과	5월 22일
NABO 산업동향&이슈(제82호)	경제분석국 산업자원분석과	6월 25일
NABO 대외경제동향&이슈(제6호)	경제분석국 경제분석총괄과	6월 26일
NABO 경제동향&이슈(제142호)	경제분석국 거시경제분석과	7월 23일
예산정책연구 제15권 제2호	기획관리관 기획예산담당관실	6월 19일

NABO Focus

보고서명	발간부서	발간일
[제158호] 주요국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비교 및 시사점	추계세제분석실 사회비용추계과	5월 19일
[제159호] 주요국의 조세지출 관리제도 현황 및 시사점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5월 21일
[제160호] 상병수당 도입의 정책적 쟁점과 제도 설계 방향	예산분석실 사회행정사업평가과	5월 28일
[제161호] 북유럽 국가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도입 사례 및 시사점	기획관리관 정책총괄담당관실	6월 2일
[제162호] 의료개혁 1·2차 실행방안을 반영한 건강보험 재정 재추계	추계세제분석실 사회비용추계과	6월 9일
[제163호] 건강보험 재정, 보험료만으로 지속 가능한가, -해외 건강보험의 '다른 선택'	추계세제분석실 사회비용추계과	6월 11일
[제164호]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금융부실채권 관리 현황 및 시사점	예산분석실 경제산업사업평가과	6월 16일
[제165호] 기금운용실적 개선에 따른 국민연금 재정 수정전망	추계세제분석실 사회비용추계과	6월 18일
[제166호] 반도체 수출 호조와 올해 우리 경제 성장	경제분석국 거시경제분석과	6월 23일
[제167호] 개인소득세의 누진성과 소득재분배 효과: OECD 국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1과	6월 25일
[제168호] 햇빛소득마을,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과제는?	예산분석실 사회행정사업평가과	6월 30일
[제169호] 납품대금 연동제 추진현황과 시사점	예산분석실 경제산업사업평가과	7월 2일
[제170호] 저출생 극복을 위한 아이돌봄 지원 사업 개선방안	예산분석실 사회예산분석과	7월 10일
[제171호] 지역 자율형 연구개발사업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기획관리관 정책총괄담당관실	7월 16일
[제172호] ESG공시, 누가 왜 하는가: 자발적 공시의 결정요인 분석	경제분석국 산업자원분석과	7월 23일

※ 보고서는 NABO 홈페이지(www.nabo.go.kr)와 열린국회정보포털(open.assembly.go.kr) [보고서 · 발간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상생협력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예산분석실 공공기관평가과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경쟁력 격차가 확대되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면서, 정부는 단순한 개별 기업지원을 넘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상생협력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 수단인 동반성장협력대출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사업의 운영실태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운영상의 문제점과 한계를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먼저 동반성장협력대출과 관련하여 첫째, 공공기관이 지원업체 선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협력업체 지원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공기관 간 지원업체 정보를 공유하는 등 중복지원 방지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협약서에 대출기간과 대출한도를 명확히 규정하고, 사전·사후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대출공급 실적을 제고하기 위해 대출한도 및 예탁금 규모를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등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 다섯째, 대출 실행 시점과 상환 시점을 반영한 평균잔액 기준의 이자 정산 방식을 도입하고 협약 체결 시 산정 방식에 대한 사전 검증을 의무화하는 등 이자 정산 방식을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협약은행인 기업은행은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미흡하므로 사업 전반에 대한 운영방식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사업과 관련하여 첫째, 성과공유제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은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성과공유제확산추진본부는 등록·확인 및 심사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원의 중복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신규 참여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 상생협력기금사업 지원 대상의 다변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민간자율기획사업은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강화할 수 있는 분야로 지원을 다변화하고, 기관의 전문성을 반영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기획·발굴할 필요가 있다. 넷째, 상생협력기금 사업의 특성과 성과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내일채움공제사업과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등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정책의 기업부담분을 기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지원 수준과 대상선정 기준 등을 개선하여 정책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 해외사무소 운영 현황 및 개선과제

예산분석실 공공기관평가과



공공기관 해외사무소는 1962년 KOTRA 해외무역관 설치 이래 무역진흥에서 자원개발, 금융, ODA, 문화·콘텐츠, 에너지·인프라로 기능이 다양화되어, 2025년 말 기준 84개 기관(부설기관 3개 포함) 715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법령상 정의 부재, 설치근거의 법적 명확성 미흡, 동일 도시 내 유사기능 병존, 성과관리의 형식화 등 통합적 관리체계 정비가 필요하다. 이에 본 보고서는 설치근거, 기능분포, 인력·예산, 운영·통제, 성과관리를 중심으로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하였다.

첫째, 개념 정의와 집계 기준을 정립하고 공시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해외법인을 제외한 79개 기관 607개소의 연간 운영비는 1조 754억원, 인력은 5,305명으로 최근 5년간 각각 36.9%, 20.9% 증가하였다. 2026년 4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개정으로 주재원이 관리 범위에 포함되었으나 주재원의 법령상 정의가 부재하다. 명칭·소재지·설치연도·운영형태·설치근거 등을 ALIO에 공시하고, 인건비의 약 1.5배에 달하는 주재수당·주거비·자녀학비 등 부가비용의 구체적 적용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설치근거의 법제화를 단계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68.4%는 법령 차원의 근거를 갖추었으나 25개 기관(31.6%)은 정관 등에만 의존하며, 3개 기관 10개소는 설립근거법과 정관 모두에 근거 조항이 없다. 주요 사업을 해외사무소에서 수행하는 기관은 설립법 개정을 통한 명시적 근거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유사기능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무역·수출·시장진출 기능이 41.0%(249개소)를 차지하고 15개 거점도시에 35.3%가 집중되어 있으며, 하노이·자카르타·베이징 등에서 분산적 병렬 구조가 확인되었다. 전문성을 유지하되 공간·네트워크를 공유하고, 정보 공유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넷째, 내부통제를 실질화할 필요가 있다. 설치·운영 규정 구비 기관은 92.4%이나 정기 내부감사 실시는 40.5%에 그치고, 위험관리 규정(64.6%)·정보보안지침(48.1%) 구비율도 낮다. 79개 기관 중 34.2%에서 외부 지적이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별도 감사대상 지정과 지정학적 리스크 지역의 철수·축소 계획 의무화가 요구된다.

다섯째, 성과관리 내실화와 준치 판단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87%가 성과지표 체계를 갖추었다고 응답했으나 형식적 운영 사례가 다수이며, 달성률 산출 지표의 62.9%가 100% 이상을 달성하는 등 변별력이 저하되었다. 역진적 목표설정과 정성지표 편중도 확인되었고, 결과의 예산·인력 반영률은 6.3%에 불과하다. 실질 성과 중심의 지표 재설계와 환류체계 제도화가 필요하다.

공공기관의 정부 위탁사업 수행 및 재위탁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과제

예산분석실 공공기관평가과



정부 위탁사업은 본래 정부가 직접 수행하여야 하는 고유 업무에 해당하나, 외부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예산 및 인력상 한계를 극복하여 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기관 등 외부 기관이 정부 대신 수행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이는 복잡해지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정부의 서비스 제공 기능을 유연하게 확장해 온 현대 행정국가의 필연적인 진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감안하면 정부 위탁사업은 해당 사업에 대한 '정부의 최종 책임성'과 '공공기관의 운영 효율성'이라는 두 가지 핵심 가치를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중첩적인 영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그 중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정부 위탁사업을 전반적으로 살펴해보고, 특히 제도적 핵심인 위탁수수료에 초점을 맞춰 △위탁 및 수수료 관련 계약 형태 △기관별 위탁수수료 수취 규모 및 요율 현황 △제3의 기관에 재위탁 시 위탁수수료를 현황 등 세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정부 위탁사업의 계약 형태에 대해서는, 위탁사업비 및 위탁수수료 등 핵심 사항이 계약서에 명확히 반영되도록 하는 등 계약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위탁수수료 산정과 관련하여서는, 정부 차원에서 위탁수수료를 산정 시 고려해야 할 기준과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고, 사업 유형과 기관의 업무 부담을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정교한 산정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재위탁 구조 측면에서는, 재위탁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원수탁기관과 재수탁기관 간 수수료 배분 기준을 합리화하고, 공공기관이 실제로 부담하는 업무량과 책임 수준에 부합하는 위탁수수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용적 금융 등 금융개혁 방안

예산분석실 경제산업사업평가과



「포용적 금융 등 금융개혁 방안」 보고서는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회복 지연으로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이 악화되는 상황에 '포용적 금융' 실현을 위한 입법 및 예·결산 심사의 정책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간되었다. 동 보고서는 국회가 선정한 2026년도 3대 공동연구과제 중 하나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주관기관을 맡아 국회 소속기관들과 공동으로 집필하였다.

보고서는 총 4권으로 구성하였으며, 제1권 「총론」에서는 포용적 금융 정책의 필요성과 국회의 역할을 제시하고, 전체 보고서의 구성, 각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종합하였다.

제2권 「포용적 금융 실현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공급 및 채무조정제도」(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저신용·취약차주에 대한 융자 및 보증 공급을 강화하고, 최근 채무상환

부담이 높아진 취약계층·청년층 등에 내실있는 채무조정과 장기연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금융회사의 선제적인 채무조정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3권 「은행·보험 부문의 포용적 금융서비스 접근성 강화 방안」(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을 보완하기 위해 은행대리업 도입과 포용적 보험의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제도 설계와 운영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제4권 「주요국의 포용적 금융정책」(국회도서관)에서 해외 주요국(미국·영국·프랑스·호주·일본·중국)은 자국의 경제적·사회적 환경에 따라 다양한 포용적 금융정책을 추진하며 공통적으로 포용적 금융 책임성·감독·교육 체계를 병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지방공기업 재무 현황 분석

예산분석실 공공기관평가과



최근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고속·광역철도망 구축 및 전력·신재생에너지 인프라 확충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 확대 등으로 지방공기업의 자산 규모가 증가하는 가운데, 일부 사업에서는 구조적인 적자가 지속되고 부채 부담이 확대되는 등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관리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418개 지방공기업의 주요 유형별 재무 현황과 재무구조를 분석하였다. 또한, 부동산 개발 및 공공임대 등 부동산 부문 사업을 수행하는 중앙 및 지방 공기업의 재무 특성을 총자산순이익률, 부채비율 및 이자보상배율 등 주요 재무지표를 비교·분석하여 기관의 수익성과 재무건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공기업은 사업 유형별로 사업 목적, 수익 구조, 자원 조달 방식 등이 상이하여 재무구조에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업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재무관리와 차별화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상·하수도 및 공영개발, 도시철도, 도시개발 사업은 각각 사업 자체적인 특성에 따라 사업 손익구조 및 재정보전 형태 등에 상당 부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방공기업 간 재무건전성을 비교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차이점을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부동산 부문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분석 시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크게 받는 분야로서 최근 경기 둔화, 건설 원가 상승, 고금리 기조 지속 등으로 관련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추가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도시개발공사는 부동산 개발 부문의 수익성 둔화와 이자보상배율 하락에 대응하여, 교차보전 구조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 사업구조조정·재정지원 방식 개선 및 수익원 다변화 등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재정소요점검은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률(이하 가결 법률)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향후 5년간의 재정변화를 추계하여 입법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2025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은 2025년 국회에서 가결된 재정수반법률 207건 중 구체적인 시행계획 미비 등으로 추계가 곤란한 법률을 제외하고 추계가 가능한 118건(322개 재정수반요인)에 따른 재정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25년 가결 법률에 따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3조 1,637억원의 수입 증가와 연평균 1조 7,366억원의 지출 증가가 예상된다. 수입 변화에 있어서는 국민연금 보험료율·법인세율·교육세율 인상 등 요율·세율 인상을 통한 수입 기반 확충, 결혼·출산·자녀양육,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에 대한 조세지원 강화 등의 특징이 나타났다. 지출 변화에 있어서는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기능 강화, 지역 필수의료 확충 및 희귀·난치성질환 치료기반 강화, 국가공간정보·에너지 및 인공지능 산업 기반 강화 등의 특징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재정소요점검 결과는 재정환경 변화를 반영한 입법의 재정영향 분석을 통해 국가 재정건전성 관리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으나, 구체적인 시행 계획의 미비, 추계기초자료의 부재 등으로 인해 현시점에서 추계가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 추계한 것임을 감안하여 점검 결과의 해석에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실제 예산편성과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2026 대한민국 공공기관

예산분석실 공공기관평가과



「대한민국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에 대한 국회의 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국회예산정책처가 2018년부터 매년 발간하고 있는 공공기관 안내서이다. 「2026 대한민국 공공기관」은 올해 발표된 전체 342개 공공기관의 최신 운영 현황과 함께,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관리 정책 및 주요 관련 제도 등을 일목요연하게 종합·수록하였다.

‘제1부 공공기관의 이해’는 공공기관의 의의를 소개하고, 우리나라 공공기관 관리체계의 변천사 및 현행 공공기관 관리정책의 주요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제2부 공공기관 현황’은 공공기관 지정 및 수입·지출, 인력, 인건비·복리후생비, ESG 등 주요 현황을 정리하였으며, 그 외에도 공공기관의 재무 현황, 경영평가 현황, 지방이전 현황 등 공공기관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현황 자료를 종합하여 수록하였다. ‘제3부 주요 특성별 공공기관 분류’는 공공기관을 주요 특성에 따라 정부출자 공공기관, 수지차 보전기관, 손실보전 공공기관, 금융공공기관, 그 밖의 유형 등으로 나눠 각 기관의 유형별 현황을 정리하였다.

노인 지원 사업의 재정전망과 기초연금 시나리오 분석

추계세제분석실 사회비용추계과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5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4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단순한 노인 인구의 증가를 넘어 기대수명의 연장으로 노년기의 절대적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반면, 이를 뒷받침할 생산연령인구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노인 지원 정책에 대한 수요와 재정 부담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노인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공식적 정의가 부재하여 정책의 규모와 내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중앙정부뿐 아니라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업까지 포괄하여 노인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유형화하고, 재정 규모와 지원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향후 10년간의 재정소요를 전망함으로써 고령화에 대응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전체 노인 지원 재정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장을 구성하여 주요 제도 개편 시나리오별 재정전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노인 지원 재정은 2016년 15.45조원에서 2025년 41.52조원으로 증가하여 지난 10년간 연평균 11.6%의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소득보장 분야가 전체 재정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가운데, 돌봄 및 경제활동 분야의 재정이 전체 평균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가 확인되었다. 이는 노인 지원 정책이 현금급여 중심에서 서비스 제공과 사회참여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노인 지원 재정은 2035년 7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특히 기초연금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 결과, 제도 설계 방향에 따라 재정 규모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상자를 소득하위 80%까지 확대하는 방안은 향후 10년간 47.1조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 반면, 수급연령을 68세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은 53.0조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예상되었다.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이 보고서는 돌봄·경제활동 분야 수요 증가에 대응한 재원 배분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기초연금의 향후 제도 설계를 위해 급여 수준·대상자 범위·수급 연령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고령화로 인한 재정 압박이 심화되지 않도록 재원 조달을 위한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제시하였다.

재생에너지 지원사업 평가

예산분석실 사회행정사업평가과



재생에너지 확대는 에너지 안보, 탄소중립,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중요한 정책과제로, 정부는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해 보급 의무제도(RPS)를 개편하고, 햇빛소득마을 추진, 공기열 히트펌프 설치 지원,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 지원 등 관련 사업과 예산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보고서는 정부 정책 및 사업 추진 현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첫째, 시기별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등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은 관련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미래 산업으로서의 역할을 고려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 국내 계획 간 목표의 불일치는 우리 정부에 대한 정책 신뢰성과 이행 의지에 대한 평가가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계획 간 목표와 정책 방향의 정합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의 대표적 제도인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개편할 예정인 바, 적용 대상, 기존 발전사업자의 수익 변동 가능성, 정책 간 상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도 설계를 정교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신규 도입된 햇빛소득마을, 공기열 히트펌프 지원 사업 등은 수익성, 계통부족 문제, 지원조건의 합리성 등 다양한 한계 요인을 고려하여 사업설계를 정밀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재생에너지 설치를 확대하더라도 송배전망이 부족하면, 접속제한, 출력제어 등으로 보급 효과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실제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사업도 계통 연계 지연 및 계통 수용능력 부족 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송배전망 확충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전력계통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나, 통합발전소(VPP)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수익 구조 제시와 관련 제도 완비 등 제도적·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

금융취약계층 지원 채무조정제도 운영 평가

예산분석실 경제산업사업평가과



고금리 지속과 내수경기 회복 지연으로 서민·취약계층의 채무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정부는 효과적인 채무조정제도 운영으로 연체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정부가 운영 중인 상시적·한시적 채무조정제도를 평가하고 채무자의 효과적인 재기 지원을 위한 정책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의 취약계층 채무감면 수준과 채무 상환기간 단축 성과가 미흡하므로, 획일적인 현행 채무감면 방식을 개선하고, 채무조정 이환 실효(재연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비금융 채권과의 통합지원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둘째, 채무자의 장기연체를 예방하여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금융회사와 공공기관의 자체 채무조정제도 활성화, 적시성 있는 부실채권 조정·정리가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금융회사가 신용회복위원회 중심의 사후적인 채무조정에서 벗어나 채무자 연체 관리부터 자체 채무조정까지 선제적인 채무관리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셋째, 새출발기금과 새도약기금의 채무조정 실적 제고로 채무자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되 채무자의 연체 원인과 채무상환 능력에 대한 정교한 심사체계를 마련하여 일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넷째, 채무조정 수요 증가에 대응해 신용회복위원회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기관 운영 방식 개선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중장기 재무건전성 제고 등 채무조정제도 운영 기관의 관리·감독이 강화될 필요가 있고,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지원 시에 복합지원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부처 간 업무·인력 연계, 상담인력 교육 강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현황 평가

예산분석실 사회행정사업평가과



우리나라는 2010년대 이후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인구 감소와 청년층 유출이 지속되면서 지역의 노동력과 경제 활력이 약화되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정부는 2022년부터 연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조성·운용하며 인구감소지역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본 보고서의 분석 결과,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핵심 재정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으나 제도 설계와 운영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인구구조와 산업·정주 여건의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사업 추진만으로는 생활권 단위의 인구 이동과 지역 발전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2025년 말 기준 약 9,500억원의 미집행액이 발생하였으며, 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 민간투자 유도에 기여하고 있으나 공공성이 높은 사업에 대한 투자 유인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행 성과평가체계 역시 산출지표 중심으로 운영되어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충분히 측정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

따라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 유형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광역권 단위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소멸의 개념과 정책목표를 명확히 정립하고, 정주인구 및 지역경제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 중심의 성과평가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기금 출연 규모와 시기를 실제 사업 수요에 맞게 조정하여 재원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평가

예산분석실 경제산업사업평가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지특회계)의 규모가 2005년 도입 이후 지속 증가해 오면서 세입·세출구조의 변화, 지방의 자율성과 중앙의 책임성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평가 결과, 지특회계 독자세원인 주세와 법정부담금의 세입 비중 축소, 전입금 재원의 변동성으로 인해 안정적 독자세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독자세원 부족에 따라 전입금이 증가하고 있으나 임의전출금 위주 운영, 세수결손 대응을 위한 미지급 사례 등 재원의 변동성이 증가하고 있다.

다음으로, 불명확한 법정 세출사업 범위로 인해 사업이관 과정에서 신중한 검토가 부족한 측면이 있고, 포괄보조사업의 통폐합 조정 및 계정편성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지역자율계정 포괄보조사업 유형의 증가에 따라 사업유형을 통폐합 조정하여 사업범주의 포괄성을 확보하고, 초광역특별계정 신설 등 복잡해진 계정 편성체계의 개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자율계정 시·도별 지출한도 배분모형 산식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차등지원 제도 등 정책보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시·도 지출한도 배분모형이 실효성에 대한 검증 없이 20년째 동일한 산정공식을 유지하고 있으며, 배분모형의 산정결과와 실제 배분내역 간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다.

끝으로,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하도록 포괄보조사업 운영방식을 개선하되, 성과평가체계는 중앙정부 주도로 내실화함으로써 재정운용의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중앙정부의 예산안편성지침과 포괄보조사업 가이드라인을 최소화하는 한편, 중앙정부 주도로 평가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콘텐츠산업 육성사업 평가

예산분석실 사회행정사업평가과



최근 K-콘텐츠의 세계적인 확산에도 콘텐츠 제작비 상승, 투자환경 변화, 전문인력 부족, AI 기술 확산 등 콘텐츠산업 환경이 크게 변화하면서 동 산업의 육성정책과 지원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콘텐츠 산업 육성사업과 관련된 기본계획, 재정투입, 주요 성과 등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인재양성 부문은 산업현장 수요와 교육과정의 연계 강화, 창의성·기획력 등 콘텐츠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정성·정량 성과평가 체계 마련, 정부와 대학·기업·산업계 간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실무중심 교육과 현장실습 확대 등이 필요하다. 또한 콘텐츠 분야 인재양성 사업의 재구조화 시 사업별 정책 목적과 지원 대상, 교육방식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사업의 전문성과 고유 기능이 유지되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금융지원 부문에서는 K-콘텐츠펀드 출자 규모의 확대에도 문화·영화계정의 낮은 수익성과 투자환경 변화로 민간 출자 유인에 한계가 있으므로 세제 지원, 우선 손실 충당 등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펀드 결성과 투자 집행 지연으로 정부 출자금의 적체되지 않도록 출자 규모와 집행 속도를 관리하고, 모태펀드가 초기기업과 저예산 프로젝트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투자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셋째, 연구개발(R&D) 부문에서는 연구 성과의 질적 수준과 사업화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특허·논문·기술 활용 등 연구 성과의 산업현장 활용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첨단기술과 전문인력양성 분야는 단기 과제 중심의 지원을 넘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연구개발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영화발전기금 부문에서는 영화 소비 환경의 변화에 맞춰 영화발전기금의 재원 구조를 재설계하고,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하여 OTT 사업자 부담금을 법정 재원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고유 목적과 재원 운용 원칙을 고려하여 반복적인 기금 전출·이관 관행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2026 대한민국 사회보험

추계세제분석실 사회비용추계과



사회보험은 노령, 질병, 실업, 산업재해 등의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여 국민을 보호하는 중요한 사회보장 수단이다. 우리나라는 사회적 위험으로 인한 소득중단이나 과도한 의료비 부담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8대 사회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 8대 사회보험의 구조와 운영 현황을 정리한 해설서인 「대한민국 사회보험」을 2024년 이후 매년 발간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사회보험의 운영 원리와 우리나라 사회보험 제도의 구조 및 현황을 체계적으로 조망하고 최신 통계수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제1부 사회보험의 이해에서는 사회보험의 개념과 운영 원리, 사회보험의 체계 및 특성, 제도의 변천을 정리하였다. 제2부와 제3부에서는 4대 공적연금과 그 외 4대 사회보험으로 구분하여 각 제도별 운영체계와 가입(적용) 범위, 급여의 종류, 재정구조 등을 제시하고, 가입자 및 수급자 수, 재정현황 등의 관련 통계를 수록하였다.

혁신제품 조달 사업 평가

예산분석실 경제산업사업평가과



정부는 혁신을 통한 기업 성장 및 공공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2019년부터 혁신제품 조달 사업을 추진하여 2025년까지 누적 2,774개의 혁신제품을 지정하는 등 양적 규모가 증가하였고, 2030년까지 누적 5,000개까지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혁신제품 조달 사업이 양적 규모 확대에 걸맞게 당초 설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추진단계별 성과, 부처별 추진체계, 성과관리체계 측면에서 각각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추진단계별 성과 분석 결과, ① 추천·지정 단계에서는 총 2,774개의 혁신제품을 지정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신규 발굴 둔화와 지정기간 만료로 인해 지정 상태가 유효한 혁신제품이 감소하고 있어 신규 제품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② 구매·사용 단계에서는 조달청이 '19년~'24년 시범구매한 제품 907개 중 629개(69.3%)만이 후속구매로 이어졌고 총 2,774개 혁신제품 중 공공구매 실적이 없는 제품이 892개(32.2%)에 달하고 있으므로, 후속구매율을 제고하는 등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 ③ 확산 단계에서는 일부 혁신제품에서 공공성과 혁신성이 실증을 통해 입증되지 못해 구매가 확산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지정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④ 사후관리·환류 단계에서는 시범사용 결과보고서 제출 지연, 지정유지 요건 점검체계 부재, 구매 후 관리 소홀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부처별 추진체계 분석 결과, 각 부처별로 지침이 상이하여 기존 우수조달물

품을 혁신제품으로 중복지정하는 등 제도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부처별 지침을 일관성 있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성과관리체계 분석 결과, 혁신제품 조달 사업의 성과지표인 ‘혁신제품 매출액’은 지정건수 및 구매예산 확대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사업의 성과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결과지표(outcome)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료 지원사업 현황과 개선과제

예산분석실 사회행정사업평가과



우리나라는 수도권 중심 발전 경향의 지속으로 인구·경제·산업의 수도권 집중뿐 아니라, 수도권-지역 간 건강 수준 및 의료접근성 격차도 유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해 국정과제와 더불어 다수의 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왔으며, 지역의료 관련 주요 재정사업 예산도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지역 의료인력 및 인프라 부족·낙후 등과 같은 지역의료 공백 문제도 여전히 지적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지역의료 관련 주요 법령·제도 구축 현황, 주요 재정사업 현황, 문제점 및 성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주요 계획 및 성과, 지역 의료기관 및 인력지원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첫째, 지역의료 관련 주요 계획 측면에서는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2027년 3월 시행)에 따라 수립 예정인 ‘필수의료종합계획’의 법적 적합성 확보를 위한 연계 법정계획의 조속한 수립이 필요하다. 법정계획이자 ‘필수의료종합계획’의 연계계획인 ‘보건의료발전계획’과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은 근거 법률 제정 이래로 수립·시행된 바 없는 실정이다.

둘째, 지역의료기관 측면에서는 공공의료기관의 조속한 개원, 민간병원 참여 확대 방안 검토 등 지역 의료접근성 강화 대책을 면밀히 수립·추진할 필요가 있다. 관련하여, 정부는 70개 중진료권을 설정하고 지역 책임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15개 중진료권에 대해서는 지역 책임의료기관이 지정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의료·분만취약지 지원지역 확대, 원격협진 강화, 지역완결적 암 치료 환경 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의료인력 측면에서는 국립대병원 관련 재정사업 예산은 확대되고 있으나 적자 지속 및 비수도권 전공의 충원을 저조 경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국립대병원 기능 개선을 위한 세부 집행체계의 정교한 설계·관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중보건의 신규 편입이 급감하여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있으나 부처 간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제도 개선 방안을 면밀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2035 NDC 주요 부문 감축경로 점검

경제분석국 산업자원분석과



정부는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53~61% 감축하는 2035 NDC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최종 목표량만 제시되었을 뿐, 2035년까지의 연도별 감축경로와 부문별 구체적 감축 방안은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중장기 감축경로를 점검하고 이를 법제화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력·산업·수송 부문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배출 현황과 감축 과제를 살펴보고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2035 NDC 감축경로를 점검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한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2035 NDC의 상향된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력·산업·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 중요하다. 전력 부문은 2024년까지 2018년 대비 가장 큰 감축률을 달성하였음에도 2035 NDC에서도 가장 큰 규모의 추가 감축이 요구되고 있다. 산업 부문은 에너지를 다소비하며, 탄소기반 원료·연료 의존도가 높아 생산구조 탈탄소 전환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수송 부문은 내연기관차 수요의 지속과 온실가스 배출 구조의 분산성 등으로 인하여 감축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① 현재 추세(2025년 기준) 연장 경로, ② 2035 NDC 목표 달성 감축경로, ③ 추가 감축 수단 적용 경로 등 세 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시나리오 ①의 분석 결과, 추가적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 노력 없이는 2035 NDC 달성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시나리오 ②의 분석 결과, 2035 NDC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강도 높은 감축 수단 적용 수준이 전제되어야 함을 볼 수 있었다. 시나리오 ③의 분석 결과, 2035 NDC가 달성되더라도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감축 수단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2035 NDC가 2050년 탄소중립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단기 목표 달성을 넘어, 감축경로의 연속성과 이행 실효성의 확보를 위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시나리오 분석 결과, 현재 감축 수단의 배출량 저감에는 한계가 존재하므로 2035 NDC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추가 감축 노력이 필수적이다. 더불어 2050년까지 궁극적인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는 시장 상황과 기술 수준을 고려하여 다양한 기술 조합과 정책 경로를 고려하여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와 제도적 기반 구축 등 실질적 정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025회계연도 결산 분석시리즈

예산분석실



2025년은 2024년 말 이후 이어진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시작되어, 회계연도 중 새 정부가 출범하는 등 재정운용 여건의 변화가 있었고, 연초 발생한 영남지역 대형 산 불과 미국의 관세정책 등 예기치 못한 재난과 통상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재정의 역할도 요구된 한 해였다.

당초 2025년도 본예산은 총수입 651.6조원, 총지출 673.3조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이러한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6월 대통령 선거 전후로 각각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총수입과 총지출은 각각 642.4조원, 703.3조원으로 조정되었다.

정부가 제출한 결산 결과 국세수입은 373.9조원으로 추경(372.1조원) 대비 1.8조원 증가하였으나 본예산(382.4조원) 대비로는 8.5조원 감소하였으며, 총수입은 추경 대비 5.0조원 감소한 637.4조원, 총지출은 추경 대비 19.1조원 감소한 684.1조원으로 집계되었다. 관리재정수지는 104.2조원 적자로 추경(111.6조원 적자) 대비 7.4조원 개선되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 결산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5회계연도 정부의 재정운용을 분석한 「2025회계연도 결산 분석시리즈」를 발간하였다. 이번 시리즈는 총 8종, 22권으로, 「결산 재정총량 분석」, 「결산 분야별 재원 배분 분석」, 「결산총괄 분석」, 「결산 위원회별 분석」, 「성인지 결산서 분석」,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분석」, 「결산 국가재무제표 분석」, 「2024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으로 구성되며, 특히 주요 재정현안에 대한 총괄 분석을 한층 강화하여 기존 3권에서 4권으로 확대 발간하였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 사업·정책 평가

예산분석실 경제산업사업평가과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은 공급망 안정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정책 분야로, 정부는 재정사업과 상생협력기금 등을 통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상생협력 지원사업과 주요 제도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정책 추진체계와 성과관리의 주요 쟁점을 분석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평가 결과, 상생결제, 납품대금 연동제, 성과공유제 등 주요 상생협력 제도는 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운영상 한계가 나타났다. 상생결제는 거래가 1차 협력사에 집중되어 공급망 전반으로의 확산 효과가 제한적이었으며, 납품대금 연동제는 제도 인지도와 이해도가 낮아 현장 확산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성과공유제는 장기간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책성과를 객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기반

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사업과 상생협력기금의 운영체계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부의 상생협력 재정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상생협력재단 운영 지원 등을 통해 상생협력기금 사업도 함께 지원하고 있으나 관리하는 체계는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상생협력기금은 민간 자율 출연과 제조업 중심으로 운영되어 일부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운영방식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상생협력 정책은 기본계획의 총괄·조정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종합 실태조사와 사업 성과관리가 미흡하여 정책 효과성이 제한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상생협력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제도 운영과 재원 운용, 성과관리가 연계되는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사업 평가

예산분석실 사회행정사업평가과



2020년 이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사업 관련 법과 제도가 정비되고 재정이 확대되고 있지만 사건 발생 시 피해의 심각성 등을 감안할 때 사업의 중요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사업 관련 현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재정의 측면에서 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한 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첫째, 아동학대 예방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가정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 등의 관련 사업 예산이 사후 회복·사례관리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사후 대응보다 예방 단계에 재정 투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빈곤·실업·양육 스트레스 등 구조적 위험요인의 선제적인 완화를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 등으로 고위험군 및 위기가정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제적 권고사항인 가정보호 우선 원칙의 확대를 위하여 시설보호에 대한 편중을 개선하고 원가정 회복 및 대체대응체계 확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피해아동 보호와 현장 대응체계에 대한 강화가 요구된다. 고위험아동의 조기 발견 및 즉각보호 강화를 위하여 필요시 위기가구 아동의 강제 분리과 친권 제한발동에 관한 요건·절차의 구체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계기관 종사자의 인건비가 타 사회복지시설 대비 낮은 수준이고 업무강도가 높아 숙련 인력이 이탈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시설·사업 투자에서 현장 전문인력 확충 및 처우 개선으로 재정 투입의 방향성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아동학대 대응 거버넌스와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현재 다수 부처

및 기관이 아동학대 대응을 분담하고 있어 중앙·지방·관계기관의 기능 중복으로 인하여 아동의 반복 진술과 같은 2차 피해, 비효율적인 재정운용, 책임소재 불명확에 따른 아동보호 사각지대의 발생 우려가 있다. 따라서 중앙·지방·관계기관을 통합하는 아동학대 대응 거버넌스의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아동보호 서비스 제공의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하여 국가 책임의 강화가 요구된다. 지역별 특히 기초자치단체 간 재정 여건과 보호 인프라 차이를 보완하기 위해 표준재정수요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취약 지방자치단체에 국비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평가

예산분석실 경제산업사업평가과



우리나라 농산물 유통체계는 농산물 가격 형성과 거래 공정성 확보 등 일정한 공적 기능을 수행해 왔으나, 유통구조의 복잡성, 유통주체 간 경쟁 부족 등 구조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포장·물류 기능 확대 등에 따라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농산물 유통비용률은 약 50% 수준에 이르고 있다.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 가격 안정 및 유통개선 추진을 위해 설치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약 3조원 중 6,000억원 규모의 예산이 직접적으로 유통구조 개선사업에 투입되고 있는 만큼, 산지·도매·소매 단계별 유통구조 개선사업 성과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보고서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의 추진실태를 분석하고, 단계별 유통구조 개선사업의 추진 현황 및 주요 쟁점을 점검하였다.

산지 단계에서는 계약재배 비중은 2025년 16.5%, 생산자단체를 통한 계통출하 비중은 2024년 40% 수준으로 산지 수급조절 기능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계약재배와 계통출하 확대를 통한 산지의 조직화와 거래교섭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도매 단계에서는 공영도매시장의 거래방식이 여전히 경매 중심(약 70%)으로 운영되고 있어 거래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온라인도매시장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 특이거래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소매 단계에서는 산지·도매·소매 가격 흐름을 비교할 수 있는 정보 제공 체계를 개선하고, 농산물 가격 등락의 비대칭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농산물 유통의 핵심 주체인 농협의 유통구조를 단계별로 보면 산지 56%, 도매 34%, 소매 15%로 갈수록 참여 비중이 감소하고 있어 기능상 한계를 점검하고,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통비용의 구조적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전 유통과정의 효율화를 추진하고, 데이터 기반 물류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2026 대한민국 경제

경제분석국 경제분석총괄과



2026년 우리나라 경제는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세 등에 힘입어, 대내외 불확실성 심화와 내수 부진 속 성장세가 둔화되었던 전년의 부진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다. 다만, 중동 전쟁 등으로 인한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며, 인구구조 변화, 저성장 고착화, 기후위기 대응 등 우리 경제가 당면한 주요 과제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도 요구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이처럼 대한민국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객관적인 경제정보를 제공하며, 시의성 있는 정책의제 발굴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2026 대한민국 경제」는 총 3부 11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Ⅰ부에서는 국민경제의 구조와 구성요소를 설명하고, 경제의 순환과 성장을 생산·분배·지출 측면에서 다루었다. 제Ⅱ부에서는 경제성장률, 물가, 고용 등 주요 경제지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우리 경제의 현황을 다각도로 조명하였다. 제Ⅲ부에서는 생산, 분배, 금융·통화 등 분야별 주요 정책을 소개하고 그 현황과 과제를 정리하였다. 특히, 인공지능, 에너지·환경, 정책금융 등 최신 경제 흐름과 현안을 분야별 정책 설명에 반영함으로써, 최근의 경제·정책 환경 변화를 충실히 담아내고 보고서의 시의성을 높이하고자 하였다.

2026 세계경제

경제분석국 경제분석총괄과



세계경제는 중동발 에너지 충격과 지정학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와 금융여건 개선에 힘입어 양호한 성장세를 유지하였다. 다만, 에너지 가격 변동성과 글로벌 무역갈등, 공급망 재편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주요국은 이에 대응하여 성장동력 확충, 산업경쟁력 강화 및 경제안보 확보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이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경제와 주요국의 경제 및 정책 현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보고서이다. 본 보고서는 크게 세계경제 동향과 주요국 경제 분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Ⅰ부에서는 세계경제의 성장·교역·물가 동향과 국제금융시장 및 국제원자재시장의 주요 변화를 살펴보았다. 제Ⅱ부와 제Ⅲ부에서는 주요 선진국(미국·유럽·일본)과 주요 신흥국(중국·브라질·러시아·인도·베트남)의 거시경제 동향과 경제정책을 정리하고, 우리나라와 주요국 간 교역·투자 관계의 변화도 함께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세계경제와 주요국 경제의 최근 동향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우리 경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해외 주요국의 주택 보유세제 비교 분석

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2과



부동산은 생애주기인 취득, 보유, 처분에 걸쳐 과세되는 자산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취득단계에서는 취득세, 보유단계에서는 재산세(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국세), 처분단계에서는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이 중 주택의 보유단계에서의 과세에 주목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한 해외 주요국(미국, 영국 등 9개국의 10개 도시)의 주택 보유세제를 과세체계 단계별(과세가액, 과세표준 및 세율, 공제 감면, 다주택자 및 빈집 등에 대한 중과)로 구분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와 해외 주요국의 주택 보유세제는 재정여건과 정책 목표 등에 따라 과세체계 단계 전반에 걸쳐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운용되고 있었다. 과세체계 단계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주택 보유세의 과세가액 평가는 기준에 따라 매매가격 등 자본가치를 기준으로 과세가액을 평가하는 국가(한국, 미국 등), 임대가치 기준으로 평가하는 국가(프랑스, 싱가포르 등)로 구분된다. 또한, 과세가액 재평가 주기 역시 주기적(한국, 일본 등) 재평가, 취득시점(미국 LA, 중국 상하이 등), 재평가 없이 물가 등만 보정(프랑스, 영국 등)하는 등 국가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주택 보유세의 과세표준은 대체로 과세가액에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되는 반면, 세율은 구조 및 운용방식 면에서 다양하게 나타났다. 해외 주요국의 주택 보유세율 구조는 대체로 비례세율이나, 한국, 싱가포르 등은 누진세율 형태이다. 세율의 운용방식은 법률로 고정하는 방식(한국, 프랑스, 독일 등)과 필요예산에 따라 매년 연동하는 방식(미국 뉴욕, 캐나다, 영국 등)으로 구분되었다.

주택 보유세의 공제 및 감면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고령자·장애인·저소득층 등 취약 계층에 대해 적용되었으며, 이와 별도로 한국은 1주택자, 미국·싱가포르 등은 실거주 주택에 대해 낮은 세율 또는 공제 혜택을 부여하였다.

중과의 경우 정책목표에 따라 한국은 다주택자, 싱가포르는 비거주주택, 영국·프랑스·독일 등은 2차 주거지에 대해 보유세를 중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캐나다·영국·프랑스·일본 등은 빈집에 대해 보유세를 중과하고 있었다. 🌐

NABO 경제동향 & 이슈 (제141호)

경제분석국 거시경제분석과



경제동향

최근 우리 경제는 서비스업의 회복세와 수출 호조에 힘입어 개선되고 있으나, 중동 전쟁의 여파로 물가상승률이 높아지는 등 불안 요인도 혼재하고 있다.

2026년 3월 전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0.3%, 제조업 생산은 전월 대비 0.3%, 서비스업은 1.4% 각각 증가하였다.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 대비 0.5p 증가하였다. 소매판매액은 전월 대비 1.8% 증가하였다. 건설기성액은 전월 대비 7.3% 감소, 설비투자는 1.5% 증가하였다. 2월 중앙정부 재정지출은 총지출 누계 기준 전년 대비 12.9조원 증가하였다. 4월 무역수지는 237.7억달러 흑자이며, 수출은 전년 대비 48.0% 증가하였다. 4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2.6% 증가하였다. 4월 국고채 3년물 금리와 기준금리 간 스프레드는 66bp를 기록하였다. 4월 KOSPI지수는 6,599를 기록하였다. 2월 가계대출은 증가세가 지속되었으며, 3월 주택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15% 상승, 주택매매거래량은 전월 대비 24.6% 증가하였다. 3월 기업대출은 전년 대비 58.1조원 증가, 주식·회사채 발행액은 20.0조원으로 전월 대비 증가하였다. 4월 원/달러 환율은 1,476.15원으로 전월 대비 하락하였다. 4월 외환보유액은 전월 대비 증가한 4,279억달러를 기록하였다.

경제이슈 분석: 최근 반도체와 반도체 이외 제조업의 경기양극화 현황과 시사점

최근 우리 경제는 반도체 제조업은 대외 수요가 급증하며 생산이 늘고 있는 반면, 이외 업종은 고환율, 금리 상승, 수요 부진 등의 요인으로 부진한 모습이다. 이에 본 고에서는 반도체와 반도체 이외 제조업의 경기 양극화 현황과 추이를 살펴보고, 제조업의 반도체 의존도 심화가 전체 경기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은 2023년 이후 AI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며 반도체 부문이 제조업 성장 전반을 견인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제조업 경기는 현재 상승 국면에 위치한 것으로 분석되나, 업종 간 경기 격차는 최근 들어 더욱 확대되는 모습이다. 제조업 경기의 호조가 반도체 단일 부문의 사이클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만큼, 향후 반도체 수요가 둔화될 경우 제조업 전체 경기에 대한 하방 압력이 빠르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제조업의 경기 양극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한다. 반도체 이외 제조업중에서 핵심 전략산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으며, AI 산업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한편, 반도체 경기에 따라 재정수입의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수립 또한 요구된다.

NABO 인구·고용 동향 & 이슈 (제6호)

경제분석국 인구전략분석과



인구·고용동향과 지속가능성장

최근 출생아 수는 모든 시도에서 반등세를 보이거나, 자연감소가 지속되고, 수도권 일부 및 충청권을 제외한 다수 지역에서는 인구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2026년 4월 주민등록인구는 5,110만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8만명 감소했고, 유소년, 생산연령, 고령인구 비중은 각각 10.1%, 68.2%, 21.7%였다. 2월 출생아 수는 20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으나 혼인건수는 23개월만에 감소하였다.

고용은 보건·복지,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중심으로 증가세를 유지하지만 증가폭은 낮고 청년층 고용 부진도 지속되고 있다. 2026년 4월 취업자 수 증가폭은 16개월만에 가장 낮았는데, 보건·사회복지업의 고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제조업, 도소매업 등에서 감소하여 전년동월 대비 7.4만명(0.4%) 증가하는 데 그쳤다. 실업률은 전년동월과 같은 2.9%였으며, 2월 임금은 특별급여가 140.7% 증가하면서 전년동월 대비 17.8% 상승하였다.

지속가능발전목표 13·14·15를 점검한 결과, 기후변화 대응 부문에서는 국내 평균 기온 및 해수면 온도 상승이 세계 평균기온 상승 폭을 상회하고, 온실가스 배출규모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생태계 보존 부문에서는 오징어 등 일부 어족자원의 불안정성과 자원 감소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육상생태계 보호 부문에서는 중요생물다양성지역 내 보호지역 지정 비율이 육상·산악 영역에서 OECD 평균을 하회하여 생태계 보전기반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슈 분석: 최근 북한경제의 반등과 중장기 성장 가능성 검토

북한경제는 대중 교역 회복, 북러 협력 확대, 국가 재정지출에 힘입어 2년 연속 3%대 성장하며 단기 반등하였다. 그러나 성장이 군수·건설 중심의 중화학공업에 편중돼 주민 체감경기와 괴리가 크고, 환율과 생필품 가격 급등 등 거시경제 불안도 지속되고 있다. 인구 측면에서는 저출산·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전환기에 진입하였다. 총인구는 2030년대 초·중반 정점 이후 감소할 전망이다.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이미 2021년을 정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하였다.

성장요인 분해 결과, 북한의 인구 보너스는 2020년 전후 소멸했고 앞으로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성장을 제약하는 인구 오너스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력 동원에 의존한 기존 성장방식은 한계에 직면한 만큼, 감소하는 노동 투입을 상쇄할 자본 축적과 기술혁신, 생산성 향상과 인적자본 확충이 필요하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대외협력과 투자·기술 유입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NABO 산업동향 & 이슈 (제82호)

경제분석국 산업자원분석과



산업동향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호조와 서비스업 생산 확대로 완만한 개선세를 보인 반면, 건설경기 부진 지속과 중동전쟁 이후 에너지 가격 상승 등 하방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2026년 4월 전산업 생산은 전년동월 대비 2.4% 증가하였는데, 건설업 생산은 전년동월 대비 5.5%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이 3.5%, 제조업이 1.6% 증가한 데 기 인한다. 13대 산업의 수출은 AI 서버 투자 확대에 따른 메모리·SSD 수요 급증 등으 로 호조를 보이면서 2026년 5월 725.9억달러로 전년동월 대비 64.7% 증가하였다. 2026년 5월 유가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수 송 제한 등으로 배럴당 100.4달러(전년동월 대비 60.1%)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6년 5월 비철금속가격지수는 중동전쟁에 따른 공급 리스크 증가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39.3%, 곡물가격지수도 대두와 소맥을 중심으로 11.5% 상승하였 다. 2026년 4월 배출권(KAU24) 거래량은 872.8만톤으로 전월 대비 23.7%, 증가 는 톤당 17,050원으로 9.3% 상승하였다.

산업이슈 분석: 사업용 차량의 전기차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 - 택시를 중심으로

수송부문의 탄소중립 촉진을 위해 무공해차 보조금 지급 등 다양한 정책이 시행 중 이나 온실가스배출 감소 실적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도로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수단으로 비사업용 차량에 비해 주행거리가 길고 탄소배출 집약도와 전비 가 높은 사업용 차량, 특히 전기 택시의 보급에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전기 택시 의 신규 보급은 2021년과 2022년 친환경차에 대한 부제 예외와 택시 전용 추가 보 조금 정책과 맞물려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2023년 하반기 이후 전기차 캐즘 현 상, 택시 부제의 해제 및 자율화 등으로 경제적 편익이 감소하면서 전기 택시의 신 규 보급 대수가 감소하였다. 이에 본 현안에서는 택시 차종별 총소유비용(TCO)을 추정함으로써 전기차 전환 촉진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5년 동안 40 만km 주행을 가정할 때 하이브리드 택시의 총소유비용은 9,910만원, LPG 택시 8,690만원, 전기 택시 8,230만원의 순으로 추정되었다. 낮은 차량가격과 유가보조 금으로 인해 LPG 택시의 초기 구매비용이 전기 택시 보다 약 948만원 낮지만, 전 기 택시의 높은 세제혜택 및 구매보조금과 저렴한 충전요금이 이를 상쇄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향후 LPG 가격이 안정적이라는 가정 하에 전기차 충전요금이 현실화 될 경우 그 격차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기 택시 전환 촉진을 위한 전반적인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

NABO 대외경제 동향 & 이슈 (제6호)

경제분석국 경제분석총괄과



대외경제동향

세계경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국가별 경기 회복 속도는 차별화되는 모습이다. 미국은 비교적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는 반면, 유로 지역은 회복세가 다소 약화되고 있으며, 일본은 완만한 성장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주요 신흥국 역시 대체로 양호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러시아는 전쟁 장기화와 대러 제재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최근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은 다소 완화되었으나, 향후 갈등이 재확대될 경우 에너지 가격 상승과 공급망 차질 등을 통해 세계경제의 하방위험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장기국채 금리가 인플레이션 우려와 국채 공급 확대 등의 영향으로 상승한 반면, 유로존 국채금리는 경기둔화 우려와 통화정책 완화 기대 등으로 하락하였다. 주가는 글로벌 AI 및 반도체 관련 기업의 강세에 힘입어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상승하였으며, 환율은 미국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 약화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 지속 등의 영향으로 달러화가 강세를 나타냈다.

대외경제 이슈: 생성형 AI와 생산성 - 한국 및 OECD 주요국 비교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은 산업 전반의 생산성 향상과 중장기 성장잠재력 확충을 이끌 핵심 기술로 부상하고 있다. OECD 주요국의 AI 노출도를 살펴본 결과, 금융·보험업, 정보통신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공공행정 및 국방 부문에서 AI 노출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AI 노출도가 높은 산업의 GDP 비중이 클수록 AI 도입에 따른 생산성 증가 효과도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은 제조업 비중이 높은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금융·보험업과 정보통신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높은 AI 노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향후 10년간 AI로 인한 생산성 증가는 4.4%p로 미국(4.5%p)·영국(4.5%p)과 유사한 수준으로 추정된다.

저출산·고령화로 노동과 자본의 투입만으로는 지속가능한 성장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AI는 우리 경제의 중장기 성장잠재력을 제고할 수 있는 핵심 수단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저생산성 서비스업의 AI 인프라 확충과 제조업의 피지컬 AI 투자 확대 등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AI 투자 및 확산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NABO 경제동향 & 이슈 (제142호)

경제분석국 거시경제분석과



경제동향

2026년 5월 우리 경제는 서비스업의 회복세와 수출 호조가 이어지고 있으나, 제조업 생산이 감소하고 물가상승률이 높아지는 등 중동전쟁의 여파가 지속되고 있다.

2026년 5월 전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0.3% 감소하였고, 그중 제조업 생산은 3.1% 감소, 서비스업은 1.3% 각각 증가하였다.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 대비 0.3p 감소하였다. 소매판매액은 내구재 중심으로 전월 대비 0.1% 증가하였다. 건설기성액은 전월 대비 3.8% 증가, 설비투자는 0.1% 감소하였다. 4월 중앙정부 재정지출은 총지출 누계 기준 전년 대비 24.0조원(9.9%) 증가하였다. 6월 무역수지는 361.5억달러 흑자이며, 수출은 전년 대비 70.9% 증가하였다. 6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3.2% 증가하였다. 6월 국고채 3년물 금리는 3.79%를 기록하였다. 6월 KOSPI지수는 8,476.5를 기록하였다. 4월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4.0조원 늘어난 1,338.6조원을 기록하였으며, 5월 주택매매가격지수와 주택매매거래량은 각각 전월 대비 0.21% 상승, 10.1% 감소하였다. 4월 기업대출은 전년 대비 68.4조원 증가, 주식·회사채 발행액은 20.1조원으로 전월 대비 증가하였다. 6월 원/달러 환율은 1,541.5원으로 전월 대비 상승하였다. 4월 외환보유액은 전월 대비 소폭 증가한 4,273.6억달러를 기록하였다.

경제이슈 분석: 최근 반도체 수출 호조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통상정책 변화,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수출 호조가 내수 활력으로 이어질지 점검하고자 이번 수출 호조세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경제성장 및 내수 파급 경로를 중심으로 점검했다.

분석 결과, 최근 수출 호조는 대규모 설비투자 계획과 사상 최대 성과급 지급이 맞물리며 내수 파급이 기대되나, IT 업종 집중·고소득층 편중·낮은 자산효과 등으로 경제 전반으로의 실질적 파급에는 시차와 한계가 존재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출 호조의 파급효과를 경제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정책 제언은 다음과 같다. R&D 지원, 산학 협력 강화 및 대·중소기업 간 협력을 통해 기업 간 파급 경로를 확대해 나가야겠다. 또한 세제 혜택, 인프라 공급 등 투자 장려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수출 호조의 성과가 IT·비IT 업종 간, 계층 간 자산 보유 여부에 따라 편중되는 양상인 만큼,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

제15권 제2호

예산정책연구 논문 소개

발간일 2026년 6월 19일



예산정책연구는 재정·경제, 조세 및 공공정책 등과 관련된 이론 및 정책논문을 발굴하고자 NABO에서 발행하는 학술지로, 2018년 10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다. 연 4회(3월, 6월, 9월, 12월) 발간하며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nabo.jams.or.kr)을 통해 논문을 상시 공모하고 있다.

※ 본문은 '예산정책연구' 제15권 제2호에 수록된 논문초록으로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한국 결산제도의 해외사례 비교를 통한 개선방안 연구: 결산의 환류를 중심으로

저자

전수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섭단체 전문위원

본 연구는 한국 결산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고, 포스트 신공공관리론(Post-NPM) 관점에서 결산의 환류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초저출산·고령화, 재정위험의 확대, 디지털전환 등 최근 재정환경 변화는 결산의 전략적 환류 기능을 한층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결산제도의 변천을 점증주의/신공공관리론(NPM)/공공지출관리론(PEM)-포스트신공공관리론(Post-NPM) 세 단계로 구분하고, 영국·미국·프랑스의 결산체계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결산제도는 제도적 장치는 상당히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평가의 신뢰성 부족, 중장기 재정위험 관리 미흡, 결산심사 기준의 불명확성, 결산-예산 간 연계 부재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실질적 환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해외사례를 비교한 결과 통합적 결산-예산 연계체계를 통해 공통적으로 환류기능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즉 영국의 공공부문 통합결산서(WGA)-지출검토(SR)-연차예산(Annual Budget) 체계, 미국 정부업무수행성과법

(GPRAMA)의 정부 전체 성과목표(CAP Goals), 프랑스 재정법에 관한 조직법(LOLF)의 편성 시 약속(PAP)-결산 시 성과(RAP)연계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한국 결산제도의 개선방안으로 ① 결산-중기재정계획-예산편성의 자동연계, ② 정부 전체 재정위험 정보를 포함한 한국형 WGA 도입, ③ 정부 전체성과목표 기반의 전략적 결산운용, ④ 디지털 기반 데이터 결산체계 구축, ⑤ 국회의 결산심사 기능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2026년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결산·성과·예산 기능이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면서 결산의 환류를 위한 제도적 연계장치 마련이 더욱 중요해졌음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결산을 단순한 사후 회계확정 절차가 아니라 Post-NPM의 관점에서 결산·성과·예산 간 전주기 재정관리체계의 구체적 설계 방향을 제시해 전략적 재정운용으로의 기능을 재정립했다는 점에서 정책적·학술적 의의를 갖는다.

코로나19 대응 정부 지원정책이 기업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기술수준별 경로 분석

제1저자

이만표

한양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공동저자

정미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선임연구원

교신저자

이희정

한양대학교 산업융합학부 교수

정부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혁신 및 산업혁신 이론을 근간으로 기업의 혁신성과 창출을 위해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한 다양한 기업지원 정책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는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기업 지원 정책이 기업의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에서 제공하는 「한국기술 혁신조사」의 2,303개 기업 데이터를 표본으로 실증 분석하였다. 정부지원 정책을 조세지원, 직접자금지원, 금융지원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저기술·중기술·고기술·첨단기술 등 네 가지 기술 수준별 직·간접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SEM)과 다중집단 분석(Multi-Group Analysis)을 수행하였고, 혁신성과에 대한 간접경로에는 혁신활동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였다.

연구 결과, 정부지원정책은 혁신성과에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냈으며, 혁신활동을 매개로 혁신성과에 유의한 간접효과를 나타냈다. 조세 지원은 중기술 및 첨단기술 산업에서 부분 매개효과가 유의하게 확인되었고, 직접자금 지원은 대부분의 기술수준에서 혁신활동을 통한 간접효과가 두드러졌다. 또한 금융 지원은 저기술과 고기술 산업에서 직접효과, 중기술 및 첨단기술 산업에서는 간접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외부 충격에 대응한 정부지원정책이 혁신성과에 직·간접적으로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실증하였다. 아울러 정책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술수준을 고려한 차별화된 정책 설계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산업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재의 산업환경에서는 기업의 이질성과 융복합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다.

따라서 기술수준만으로 기업 혁신과 성과를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하며, 기술수준과 혁신활동 패턴을 함께 고려한 집단을 추정하고, 통합적인 정책 설계가 요구된다는 결론을 제시한다.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의 운영실태와 평가 체계에 대한 고찰

제1저자

정근주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

공동저자

임길환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

본 연구는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재정성과평가체계의 문제점을 통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최근 5년간 성과보고서 및 핵심재정사업 운영 현황을 중심으로, 성과지표의 수적·질적 변화, 결과지표와 산출지표의 비중, 성과평가의 환류 메커니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과지표의 달성률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지표 수의 급격한 축소와 반복적 저성과 기관의 존재는 성과관리의 내실화로 보기 어렵다. 둘째, 산출 중심의 양적 평가에서 결과 중심의 질적 평가로 전환되는 추세가 확인되지만, 여전히 단기적 달성률 중심의 형식적 관리가 지속되고 있다. 셋째,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의 경우, 미국의 연방정부 성과관리체계인 PMA(President's Management Agenda)를 모델로 도입되었으나, 제도적 기반의 미흡, 성과정보 공개의 제한, 성과 환류체계의 미비로 인해 실질적 성과관리가 제약받고 있다.

이러한 운영실태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성과관리체계가 단순한 지표 관리에서 벗어나 정책성과의 질적 향상과 제도적 학습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함을 제언한다. 특히 성과지표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고, 평가 결과가 예산결정과 정책설계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환류구조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부처별 분절된 현행 평가체계를 통합하고, 성과정보의 질적 관리와 범정부적 거버넌스를 강화함으로써,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재정운용의 합리성과 지속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연체 및 졸업 결정요인 분석: KAMCO 자산매입 후 임대(S&LB)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저자 유경원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본 연구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의 자산매입 후 임대(S&LB) 프로그램 참여 기업 전수(73개사)를 대상으로 연체 및 졸업 결정요인을 체계적으로 식별한 최초의 실증연구이다. 자산의 소유권 이전을 수반하는 S&LB 프로그램은 전통적 정책금융과 성과 및 리스크 구조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간 연체 및 졸업 결정요인에 대한 학술적 분석이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론적으로 본 연구는 연체의 과정을 연체 진입과 연체 지속의 2단계 의사결정으로 모형화하여 규명하였다. 분석 결과, 연체 진입은 주로 유동비율과 수익성 등 재무적 지불 능력에 기인한 비자발적 현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체 발생 이후의 지속 여부는 임대료 부담률과 자산 유형에 유의하게 영향받는 전략적 의사결정의 성격을 가짐을 확인하였다. 특히 대체가 용이한 범용 자산을 매각한 기업일수록 임대료 조건에 반응하여 전략적으로 연체를 지속할 유인이 컸다. 분석을 통해 확인된 임대료 조건과 연체 간의 연계성이 실제 정책 현장에서 인과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는 향후 추가적인 실증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지방정부 세부사업 단위 예산집행률에 관한 탐색적 연구

저자

김대중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투자분석센터
연구위원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의 도입 및 개선에 따라 지방정부 세부사업 단위의 방대한 정보가 제공됨에도 불구하고 학술연구 및 정책실무에서는 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6~2025년간 지방정부의 일반회계 세부사업 368만건에 대해 기술통계분석, 데이터 시각화, 부트스트랩 신뢰구간을 활용한 차이 검정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분석기간 지방정부 전체 집행률은 유의미하게 변동하였으며,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은 감소하였다. 둘째, 분야별 집행률에는 차이가 존재하였으며, 특히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등이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 셋째, 특·광역시와 도 지역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지방정부 간 집행률의 차이가 존재하였다. 넷째, 분야 및 지방정부 간 집행률도 차이가 나타났다. 다섯째, 집행률 분석 결과를 활용한 재정사업평가 방식의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연구성과는 기존 선행연구가 제시하지 못했던 지방정부 세부사업의 다양한 맥락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성과관리 제도의 개선에도 활용될 수 있다. 

NABO NEWS

더 많은 소식은 www.nabo.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 방문단 면담



NABO는 지난 5월 15일(금) 국제통화기금(IMF) 방문단과 면담을 실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회예산정책처 이상은 산업예산분석과장과 IMF 코린 들레샤(Corinne Delechat) 한국 미션단장 등이 참석하여, 2026년도에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분석 내용 및 경제적 효과, 재정 부양책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 정부의 혁신 및 R&D 전략에 대한 분석 및 평가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역내 거시경제 조사기구(AMRO) 재정정책 평가단 면담



NABO는 지난 7월 20일(월)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재정정책 평가단과 면담을 실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회예산정책처 백경엽 세제분석과장과 AMRO 루크 홍(Luke Hong) 재정감독팀장 등이 참석하여, 한국의 재정 수입 확충을 위한 주요 도전과제를 비롯해 조세격차, 중장기 세입 전략, 최근 조세 개혁 및 향후 잠재적 조세개혁 방안, 세외수입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데이터에서 정책까지, 사업평가의 여정



글. 김성훈
사회행정사업평가과
자료분석연구원

Q 간단한 자기소개와 국회예산정책처에는 어떤 동기로 들어오게 됐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국회예산정책처 사회행정사업평가과 자료분석연구원(RA)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성훈입니다. 저는 경영학과를 졸업하였으며, 회계와 재무를 중심으로 공부하였습니다. 전공과목을 수강하던 중 「2024 대한민국 재정」을 접하면서 재정운용이 회계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다는 점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회계에서는 자원이 투입된 이후 재무제표를 통해 성과를 사후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의사결정에 반영하듯, 재정사업 또한 예산이 집행된 이후 결산과 사업평가를 통해 성과를 점검하고 다음 연도 예산에 환류된다는 점에서 두 분야가 유사하다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관심을 바탕으로 국회의 예산 심의와 재정 분석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에서 실무를 경험하고자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 자료분석연구원으로 지원하였습니다.

Q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부서에 대한 소개와 함께,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 예·결산 심사와 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 및 경제 분야를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기관으로, 2실(예산분석실, 추계세제분석실) 1국(경제분석국) 1관(기획관리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예산분석실은 예·결산을 분석하고 국가 주요사업을 평가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회행정사업평가과는 예산분석실 평가과 소속으로, 과거의 성과를 바탕으로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의 정책 방향을 전망하는 ‘정책 관측소’와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를 비롯한 교육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사회·행정 분야 11개 위원회 소관의 국가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분석·평가 및 성과관리 평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각 부처 사업이 목표를 달성하고 예산이 효과적으로 집행되어 사업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지 등 재정운용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이를 위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결산 및 실제 집행 내역을 바탕으로 과거 대비 집행을 변화와 사업 성과 추이를 살펴봅니다. 또한 국제 정세 변화 등 외부 환경 요인이 재정 집행과 사업 성과에 미친 영향을 함께 검토하고, 해외의 관련 예산 동향과 우수 사례를 조사·연구하여 사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합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반기마다 국가 주요사업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주된 업무는 분석관님께서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시면 관련 데이터를 수집·정리하고 분석하여 제공하는 것입니다. 2026년 상반기 보고서에서는 지방소멸 대응, K-콘텐츠, 재생에너지, 지역의료, 아동학대 등을 주제로 다루고 있으며, 국립대병원 재무제표 분석, 부처별 에너지 사업 예·결산 자료와 목표 달성도 확인, 전문가 간담회 참석, 해외 OTT 관련 법률 조사, 통계자료 제작 등 보고서 작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고서 발간 전에는 오타자와 사실관계를 검토합니다. 이 밖에도 참고문헌 정리, 전문가 간담회 준비 등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행정 지원 업무도 함께 담당하고 있습니다.

㉠ 국회예산정책처에 근무하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이나 인상 깊었던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국회예산정책처에 근무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은 국내 콘텐츠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했던 일입니다. 그 경험을 통해 통계자료와 문헌뿐 아니라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당시 저는 과장님, 분석관님과 함께 간담회에 참석하여 콘텐츠 분야 전문가의 발언과 주요 논의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과장님의 질의에 대해 전문가께서 정책의 성과와 한계, 개선 방안과 향후 정책 방향을 다

양한 관점에서 설명하는 과정을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국내 작가의 IP(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 및 해외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설명하신 부분과 현재 정부의 K-콘텐츠 지원 방식의 한계를 설명하신 부분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이러한 논의가 이후 사업평가의 근거로 활용되어 정책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사업평가는 객관적인 데이터뿐만 아니라 현장의 경험, 전문가의 식견을 종합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을 직접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정책분석 업무의 전 과정을 가까이에서 경험하며 업무에 대한 이해를 한층 넓힐 수 있었습니다.

㉡ 마지막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 근무하며 느낀 점과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2024 대한민국 재정」을 읽으며 시작된 관심은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분석연구원으로 이어졌고, 그동안 정책분석의 전반적인 과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아동학대 예방 사업을 중심으로 「아동복지법」 관련 조문을 정리하고, 예·결산 및 사업평가 자료를 수집·분석하면서 법의 제정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예산의 규모와 집행률이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체감하였습니다.

RA로 근무하면서 국가 주요사업의 사업평가 자료를 직접 다룰 수 있었고, 이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과장님과 분석관님들, 실무관님께서 아낌없이 지도해주시고 더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국회예산정책처 RA 제도가 더욱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정책분석과 재정 분야 실무를 경험하며 성장할 기회를 얻으면 좋겠습니다. 🌟



〈케이팝 데몬 헌터스〉 팝업 스토어
© Natalia_photosoul / Shutterstock.com

FISCAL STORY

만화로 보는 알기 쉬운 경제 용어 사전:

지방교부세

90

풀어쓰는 최신 트렌드 경제:

현실 세계로 나온 AI, '피지컬 AI' 시대가 온다

양재찬 더스쿠프 편집인·언론학(경제저널리즘) 박사

92

세계 경제를 바꾼 역사적 사건:

러다이트 운동의 재조명

임성택 매일경제 경제경영연구소 연구원

96

대중문화 속 재정·경제 이야기:

끝난 드라마가 계속 돈을 버는 이유

K-오리지널 IP의 생애 주기와 플랫폼 경제

김치호 한양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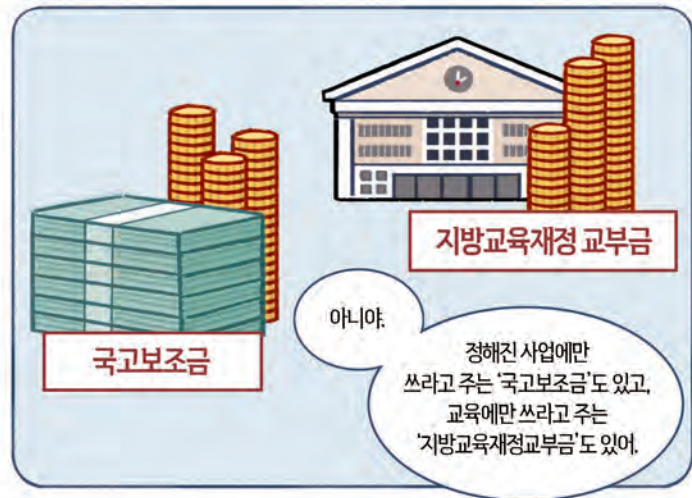
만화로 보는 알기 쉬운 경제 용어 사전

지방교부세



그림 한상아





현실 세계로 나온 AI, '피지컬 AI' 시대가 온다

글. 양재찬

더스쿠프 편집인·언론학(경제저널리즘) 박사

인간과 같은 움직임을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인 보스턴다이나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 starlings_images / Shutterstock.com

현대자동차그룹 로봇 계열사 보스턴다이나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7월 5일 2026 북중미 월드컵 16강전 하프타임에 경기장에 등장했다. 아틀라스는 관중에게 손을 흔들고 손흥민, 해리 케인, 엘링 홀란드 등 세계적 선수의 골 세리머니를 따라 해 이목을 끈 뒤 심판에게 공인구를 건넸다.

아틀라스는 올해 1월 세계 최대 정보기술(IT)·가전 박람회 CES 2026에서 실물 디자인이 공개됐다. 이후 영상을 통해 360도 공중제비를 돌고 착지하는 모습, 23kg짜리 냉장고를 들어 옮기는 모습, 상대 수비수를 속이고 골을 넣는 '고스트 라보나 킥' 장면 등을 선보였지만, 대중 앞에서 현장 시연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틀라스는 축구 영재 로봇이 아니다. 아틀라스의 등장부터 퇴장까지 일련의 동작에는 다양한 로보틱스

기술이 녹아 있다. 인간의 움직임을 로봇 신체 구조에 맞게 변환하는 리타겟팅 기술, 수많은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활용한 강화 학습, 전신의 각 관절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반응하는 제어 기술이 함께 어우러졌다.

북중미 월드컵에 깜짝 등장한 현대차 로봇 '아틀라스'

아틀라스의 월드컵 퍼포먼스는 미끄러운 잔디 등 변수가 적잖은 경기장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복합 동작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이로써 산업현장 활용을 전제로 개발한 아틀라스가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영역에서 쓰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현대차그룹은 아틀라스를 오는 2028년 미국 공장에 적용하는 등 제조 현장에 단계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로보틱스 분야에도 ‘챗GPT 시대’가 왔다.” 미국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는 올해 초 CES 2026에서 피지컬(Physical) AI 시대 개막을 알렸다. 그동안 AI 경쟁의 주 무대가 거대 언어모델(LLM) 기반 ‘생각하는 AI’ 서비스였다면, 이제는 현실 세계를 이해·추론하며 ‘행동하는 AI’ 시대라는 의미다.

챗GPT 등 생성형 AI는 글과 이미지, 음성을 생성하는 데 강점이 있다. 이와 달리 피지컬 AI는 카메라와 센서로 주변을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며, 실제 물체를 움직이고, 스스로 학습하면서 작업을 수행하는 AI를 일컫는다. 제조업·물류·서비스업·가정용 로봇 분야의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젠슨 황 CEO는 6월 5일 한국을 방문해 4박 5일 머물며 SK·LG·현대차·두산·네이버 등 기업 총수들과 삼겹살·치킨 회동을 하고 프로야구 시구도 했다. 글로벌 시가총액 1위 기업 수장인 그가 만나 사업 협력을 논의한 기업들의 주력 분야는 글로벌 AI 투자 붐 속 위상이 급상승한 고대역폭메모리(HBM) 반도체를 비롯해 로봇, 피지컬 AI 등 주요국 기업들이 공들이는 미래 산업이다.

LG전자는 엔비디아와 손잡고 가정용 로봇 ‘클로이드’를 개발하고 있다. LG전자가 올해 초 공개한 로봇 클로이드는 엔비디아의 고성능 칩셋 ‘젯슨 토르’를 탑재한 두뇌로 사람의 말과 시각적 정보를 이해하고 움직인다. 사람처럼 작동하는 양팔과 손가락 관절에 휠 기반의 자율주행 성능을 갖췄다. 가사(家事) 관련 데이터를 수만 시간 학습하고 상황을 복합적으로 인식해 집안일을 할 수 있도록 고도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두산로보틱스는 엔비디아의 AI·로보틱스 인프라를 활용해 산업 현장용 로봇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 지능형 로봇 솔루션을 선보이고, 2028년 산업용 휴머노이드를 출시할 계획이다.

세계 산업 지형 바꾸는 피지컬 AI

네이버는 로보틱스 분야에서 독자적 경쟁력을 축적해 온 대표적 플랫폼 기업이다. 젠슨 황이 방문한 네이버 경기 성남 제2사옥 ‘1784’는 로봇·클라우드·5G·디지털 트윈 기술을 결합한 로봇친화형 건물이다. 네이버가 개발한 서비스 로봇이 사옥 내부를 이동하며 배달과 안내 등 업무를 수행하는 테스트베드 역할을 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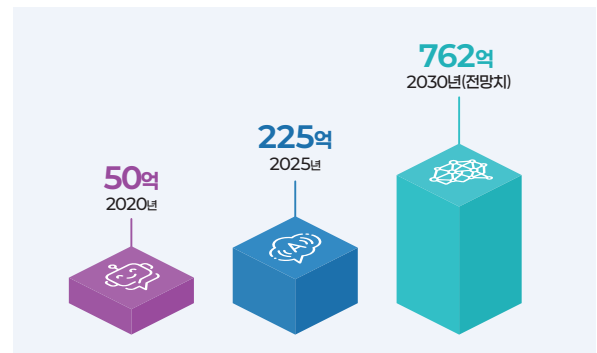
젠슨 황이 만난 엔씨·크래프톤 등 게임회사들도 피지컬 AI 사업에 뛰어들었다. 엔씨는 지난해 AI 연구 개발 조직을 자회사 NC AI로 분사하고 생성형 AI ‘바르코(VARCO)’, 멀티모달 파운데이션 모델 ‘배키(VAETKI)’ 등을 선보였다. 이어 이를 기반으로 국방용 로봇 체계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한편 자율 용접 로봇 모델을 개발해 한화오션에 납품하기로 했다.

크래프톤도 올해 초 미국에 ‘루도 로보틱스’를 세우고 휴머노이드 로봇 AI 분야에 진출했다. 이와 별개로 크래프톤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피지컬 AI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방산 등 영역에서 기술 공동개발 및 사업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세계적인 피지컬 AI 개발 열기는 산업 지형을 바꾸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스태티스타는 글로벌 피지컬 AI 시장 규모가 2020년 50억달러(약 7조 6,000억원)에서 지난해 225억달러(약 34조 1,000억원)로 5년 새 4.5

그림 글로벌 피지컬 AI 시장 규모

(단위: 달러)



자료 스태티스타

배 성장한 데 이어 2030년에는 762억달러(약 115조 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피지컬 AI는 AI가 화면 속 데이터 처리에 머물지 않고, 센서로 현실 세계를 인식한 뒤 판단해 이동·조작·제어 등의 물리적 행동을 수행하는 기술이다. 휴머노이드 로봇, 자율주행차, 드론, 물류·제조 로봇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내 피지컬 AI 생태계는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역할을 분담해 형성하고 있다. 대기업은 자율주행, 스마트 팩토리, 로봇 플랫폼, 완성 로봇 등 대규모 산업 적용에 강점이 있다. 스타트업은 의료·헬스케어, 재활, 보행 보조, 서비스 로봇처럼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제품군에서 활발하다.

정부는 6월 29일 피지컬 AI를 반도체, AI 데이터센터와 함께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축으로 제시했다.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충청권 AI 인프라, 영남권 피지컬 AI와 로봇·모빌리티 거점을 잇는 전국 단위 첨단산업 재편 구상이다.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첫째 축은 반도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광주 군공항 부지에 800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팹(생산시설) 4기를 건설하기로 했다.

표 피지컬 AI 유형

유형	기술 수준 및 형태
휴머노이드형	기반 모델, 컴퓨터 비전, 엣지 컴퓨팅, 자율 제어 기술이 통합된 형태로 인간의 외형과 유사한 구조로 걷고, 보고, 듣고, 말하며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에이전트
자율주행차형	도로 환경에 특화된 감지·판단 시스템과 AI 기반 경로 해석, 고속 비전 처리, 정밀 제어 기술이 융합돼 주행 시나리오를 자율적으로 수행
드론형	공중 이동에 최적화된 경량 AI와 실시간 공간 인식 능력을 바탕으로 장애물 회피·위치 추적·자율 비행 기능 수행
AGV & AMR형	- AGV: 자기유도선, 마그네틱, QR코드 등 사전 정의된 경로를 따라 자재를 운반하는 정형 환경 특화형 자동화 차량 - AMR: SLAM(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 컴퓨터 비전, LiDAR 기반 자율 경로 생성 및 장애물 회피 기능 갖춘

자료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메가 프로젝트의 둘째 축은 피지컬 AI다. 정부는 AI 로봇 글로벌 3강 도약을 목표로 '3M 전략'을 추진한다. 3M은 제조업 AI 전환(M.AX), 전문역량 확보(Master), 대량생산(Mass Production)체계 구축을 일컫는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로봇을 잘 쓰는 나라'였다면 앞으로는 '로봇을 잘 만드는 나라'로 대전환시키겠다는 전략이다.

'로봇 잘 쓰는 나라'에서 '로봇 잘 만드는 나라'로

먼저, 주력 제조업과 로봇산업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제조업 AI 전환(M.AX)을 가속화한다. 관련 분야 1,500여개 기관이 참여하는 M.AX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업종별 특화 AI 로봇을 개발해 매해 1,000대 이상을 제조 현장에 보급할 계획이다.

AI와 부품 등 핵심 요소기술 경쟁력(Master) 확보에도 적극 나선다. 10대 업종별 데이터팩토리를 구축해 AI 로봇 학습에 필요한 학습 데이터를 확보하고,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의 해외 의존도를 낮춘다.

로봇 움직임의 핵심 기술은 모터와 감속기, 센서 등을 결합한 일체형 액추에이터다. 이는 로봇 원가의 절반을 차지한다. 정부는 국산화율이 낮은 액추에이터, 로봇손, 센서 등 3대 취약 부품의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를 통해 AI 로봇 전문 기업 30개, 전문인력 1만명을 양성한다.

중국 등 경쟁국의 휴머노이드 양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중심 양산 체계(Mass Production)도 구축한다. 현대차그룹 투자를 마중물로 새만금에 로봇 파운드리와 부품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대경(대구·경북)권 소재 자동차·가전 부품기업의 로봇 부품기업 전환을 위한 기술 개발과 실증을 지원한다. 특히 교육·국방·재난대응 등 분야에서 정부가 로봇을 선제 구매해 초기 시장을 창출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현재 1% 수준인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생산 점유율을 2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현장에서 활용하는 산업용 로봇



사람 개입 없이 200시간 이상 연속 작동한 미국 '피규어(Figure) AI'의 택배 분류 로봇

은 3만 600대로 중국·일본·미국에 이어 세계 4위다. 특히 로봇 밀도는 노동자 1만명당 1,220대(2024년 기준)로 세계 1위다. 하지만 국내 로봇업계의 부품 국산화율은 40%대로 부품의 절반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제조업 강국인 우리나라 산업구조와 특성상 로봇 수요는 계속 증가하는데 부품 국산화를 이루지 못하면 과실은 다른 나라 기업 몫이 되고 만다.

로봇 청소기 '로보락'으로 대표되는 가정용 로봇시장은 중국 브랜드가 압도적이다. 단순 가전을 넘어 공간 데이터 플랫폼으로서 외국 기업이 가정 내 점유율을 높이는 것은 경계할 일이다. 소비시장 잠식에 그치지 않고, 우리네 기본적인 일상 데이터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금처럼 우리나라 산업이 외국산 로봇 활용에 의존하면 고용 감소는 필연적이다. 로봇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키워내면 로봇 개발과 생산, 부품 공급과 서비스에 이르는 많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기술 투자 못지않게 현장과 동떨어진 법과 제도를 개선해 지속 가능한 피지컬 AI 생태계를 구축하는 일

도 중요하다. AI 기본법이 올해 1월 시행됐지만, 일반 AI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피지컬 AI의 물리적 위해나 제조사 보안 책임 등을 규율하는 체계로는 미흡하다. 피지컬 AI 설계 의무를 담은 특별법 제정과 보안 관련 민·관·군 상설협의체 구성도 요구된다.

챗GPT가 뇌라면, 피지컬 AI는 몸을 가진 AI다. 앞으로 상당기간 산업혁명의 중심에 피지컬 AI가 자리할 태세다. 피지컬 AI는 단순히 로봇산업만 성장시키지 않는다. 인터넷이 정보 혁명을, 스마트폰이 모바일 혁명을 가져왔듯 피지컬 AI는 '현실 세계의 자동화 혁명'을 이끌며 거대한 산업 생태계를 형성할 것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기반과 정밀가공 기술을 갖춘 한국의 피지컬 AI 산업 잠재력은 크다. 배터리 기술과 반도체·자동차 산업에서 축적한 양산 노하우, 높은 정보기술(IT) 역량은 강력한 경쟁 우위 여건이다. 생성형 AI 경쟁에선 다소 늦게 출발했어도 세계적으로 초기 단계인 피지컬 AI는 아직 늦지 않았다. '팀코리아' 정신으로 민관연(民官研)이 지혜를 모으면 얼마든지 앞서갈 수 있다. 🇰🇷

러다이트 운동의 재조명



글. 임성택
매일경제 경제경영연구소 연구원

경제사의 흐름 속에서 특정 운동은 당대의 상황을 넘어 이후 시대의 변화와 가치 형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남긴다. 러다이트 운동 역시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경제 구조와 사회 인식의 변화를 함께 비추는 중요한 사례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시대에 소환된 과거의 분노가 오늘날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아보자.

러다이트 운동의 역사적 배경

2026년 초 개최되었던 CES(소비가전전시회)에서 가장 화제가 된 것은 휴머노이드 로봇과 피지컬 AI였다. 신기술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개중에는 ‘미래에 인류가 일자리를 로봇들에게 빼앗길 것’이라는 근심 어린 비관론도 제기되고 있다.

혹자는 이러한 논쟁에서 기시감을 느낄 것이다. 마치 산업혁명 시대에 인류에게 경제적 번영을 가져다 준 기계의 등장, 그리고 기계의 도입에 대해 극렬히 저항하던 러다이트들이 귀환한 것 같지 않은가? 기술 발전은 우리에게 독일까, 약일까?

러다이트 운동(Luddite)은 1811~1816년 사이에 영국에서 벌어진 기계 파괴 행위를 말한다. 네드 러드(Ned Ludd)라는 인물이 주도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나, 그가 실존 인물이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가 없다. 전설에 따르면 견습 직조공 네드 러드가 실수로(혹은 훗김에) 직조기(천을 만드는 기계)를 망가뜨린 일이 있었는데, 수십 년 뒤 폭도들이 공장의 기계를 파괴하면서 그 이름을 자신들의 주모자로 돌리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영국은 산업혁명이 한참 진행되던 중이었다. 특히 섬유산업에서 방직기(목화 솜이나 양털에서 섬

유를 뽑아내 실로 만드는 기계)와 방직기(실을 가로·세로로 교차하여 천을 만드는 기계)의 발명으로 매우 적은 인력으로도 옷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자본가들이 공장을 세우고 기계를 들여와 섬유 제품을 만들면서, 기존에 옷을 만들어 왔던 편물공(양말, 속옷 제조업자), 면직공(면 재질의 천을 만들던 사람), 천 마감공 등이 일자리를 잃을 처지에 놓였다.

생산방식의 변화와 기계파괴 운동의 결말

산업혁명 이전의 제조업은 공장제 수공업 내지 가내 수공업 방식이었다. 생산에 필요한 자본재는 간단한 도구나 베를 정도였으며 생산자가 직접 소유했다. 이들은 상품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전문적인 기술을 보유한 숙련공으로, 중세 길드(Guild) 체제의 유산이었다. 이들은 제품을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기법이나 도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지만, 자신들의 일감을 감소시키는 사안에 대해서는 몹시 적대적으로 행동했다. 기계의 등장은 적은 노동력으로도 대량의 제품 생산을 가능케 해, 기술자들의 경쟁력을 상실케 하는 요인이었다. 일감을 빼앗길 위기에 처하자 이들은 기계 사용을 금지해 달라는 탄원을 올렸으나, 정부는 이들의 편이 아니었다.

온건한 향의가 수포로 돌아가자, 이들은 조직적으로 무력행사에 나섰다. 노팅엄셔 지방에서는 메리야스 편직기가, 요크셔 지방에서는 기모기(직물의 표면을 굵어 원단 표면을 부드럽고 폭신하게 만드는 기계)가 타깃이 되어 폭도들에 의해 파괴되었다. 100여 건의 사건에서 1만파운드(현재 가치로 약 15억원 수준) 가량의 기계 1,000여 대가 파괴되었다. 이들의 불만은 주로 기계로 인한 일자리 대체에서 기원했지만, 당시의 어려운 경제 상황(영국은 나폴레옹 전쟁과 대륙 무역 봉쇄로 인해



© 클립아트코리아, 19세기 공장 근로자들

심각한 불황을 겪고 있었다)에서 기인하기도 했다.

영국 정부는 신속하게 진압에 나섰다. 지역 민병대 뿐만 아니라 군대까지 동원하여 이들을 강경하게 진압하였으며, 주동자는 사형에 처하거나 호주·뉴질랜드로 강제 추방했다. 투표권과 정치에 대한 권한이 부족했던 숙련공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은 자본가들을 이길 수 없었다. 격렬한 폭력 시위는 민중의 힘을 보여주지 못했고 ‘마지막 발악’에 그치고 말았다. 폭동은 점차 진정되었고, 기능공들은 농업 등 다른 분야에서 일자리를 찾아야 했으며 그중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공장으로 모여들었다.

산업혁명의 어두운 이면

산업혁명 초기의 공장들은 동력을 수력에 의존해, 계곡이나 하천 인근에 건설되었다. 방직기나 방적기들은 수차의 동력에 연결되도록 개량되었으며, 공장 근로자가 담당하는 일은 몹시 단순해졌다. 공장 소유자들은 임금이 높고 통제가 어려웠던 성인 남성 대신 여성이나 어린이들을 주로 고용했다.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면서 낮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은 몹시 열악한 생활환경에 놓였지만, 그러한 일자리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농촌에서는 인클로저 운동(Enclosure, 농촌의 공유지나 경계가 모호했던 사유지에 양을 사육하기 위해 울타리를 치고 농민의 이용을 막는 농촌 사회 변화)으로 인해 농민으로서 살 수 있는 곳이 줄어들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노동 공급이 초과상태가 된 제조업에서는 임금 상승이 억제되었으며 부가 자본가들에게 집중되고 노동자들의 처참한 생활 수준은 지속되었다. 프리드리히 엥겔스는 당시 노동자들의 빈곤을 연구하며 「영국 노동계급의 상태」라는 저술을 남겼는데,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정체된 1790년부터 1840년대까지를 ‘엥겔스의 휴지(Engels’ Pause)’라고 부른다. 노동자들의 임금수준 상승에는 아동 노동자를 보호하는(즉, 어린이 고용에 따른 비용을 인상시키는) 공장법의 강화와 1830년대에 본격적으로 공장에 도입되기 시작한 증기기관의 영향이 컸다. 증기 동력 기계는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였고, 해당 기기를 다루는 전문 숙련공이 필요해지게 되면서 성인 남성 고용을 증가시키고 실질임금을 인상시키도록 작용하였다. 또한 증기기관차와 철도의 보급은 공산품의 시장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였으며, 기업가들이 규모의 경제를 얻기 위해 공장 투자를 늘리고 고용을 확대하였기 때문에 노동의 초과 공급 문제가 해소된 점도 있었다.



© 클립아트코리아, 19세기 공장 근로자들

러다이트 운동은 산업혁명으로 인해 일자리 상실을 두려워한 수공업 생산자들이 기술 발전을 역행한 생존 투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긴 시간을 두고 살펴보면 더 복잡한 역학구조를 볼 수 있다. 사실 방직기 및 방적기나 증기기관은 영국에서 처음 발명되면서 산업혁명이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 기모기는 1500년대에 이미 존재했으며, 증기기관의 핵심 원리는 까마득한 과거인 1세기에 그리스 철학자 헤론이 이미 선보였었다. 기술이 이미 발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산업혁명으로 이어지지 않았던 것은 일자리 상실을 우려한 제조업 종사자들의 극심한 반대와 그들을 편들어주었던 정치권력자들 때문이었다. 스타킹을 자동으로 만들 수 있었던 메리야스 편직기는 윌리엄 리(William Lee)가 발명했는데, 1589년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1세는 메리야스 제조공들의 실직을 염려해 그에게 특허를 내주는 것을 거부했다. 필요 인력을 1/5로 줄여주는 기모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도 1551년 제정되었다. 1705년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발명가였던 데니스 파팽(Denis Papin)은 증기선을 발명했고 이는 로버트 풀턴보다 100년 앞선 기술이었지만, 강을 따라 영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뱃사공 길드의 공격을 받아 파괴되었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AI 신기술, 환영할 것인가 파괴할 것인가

•

기술의 발명이 아니라면, 산업혁명을 이끈 근본적 요인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정치 권력의 구조변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영국은 유럽의 다른 국가들과 달리 군주의 권한이 일찍부터 제한받았다. 1215년 작성된 대헌장은 왕이 세금을 걷을 권한을 제한했으며, 1688년 명예혁명은 의회의 동의 없는 세금과 전쟁을 금하고 국민들의 자유와 권한을 증진했다. 이러한 기조는 영국에서

새로운 기술 발명에 대한 재산권 보호가 강해졌음을 뜻한다. 신대륙 발견과 상업혁명은 무역을 통한 자본축적을 가능하게 했는데, 영국은 섬유제품의 수출로 막대한 무역수지를 얻는 경제구조를 갖게 되었다.

한편 민족국가의 등장은 국가 간의 경쟁을 심화시켰는데, 이는 정치권력자들에게 대내적 반란(민중 봉기 등)보다 대외 요인(외국과의 전쟁)이 자신의 위치를 위협하는 직접적 요인으로 부각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에서 기술의 진보는 무역을 통한 이득과 조세수입 증대, 국력 강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집정자들 입장에서 길드나 기능공들을 편들어주는 것보다 신흥 자본가들을 지원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 즉, 노동 대체적 기술 진보에 대한 민중의 히스테릭한 반응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았지만, 정부의 견해 차이가 인류 역사의 변환점으로 작용하게 된 것이다.

우리는 러다이트 운동에서 어떤 것을 배울 수 있을까? 장기적으로 볼 때 기술의 진보는 제품 가격의 하락으로 구성원 전체에게 이롭게 작용한다는 점은 명백하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고 익숙하지 않은 타 업종으로 이직하거나, 구직에 실패해 노동시장에서 퇴장해 버리는 사람들의 고통도 분명히 존재한다. 특정 집단의 일자리가 명백히 위협받는 형태의 기술 진보는 상당한 저항에 직면할 수 있는데, 자율주행의 경우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LLM과 생성형 AI의 경우, 업무의 도구로 활용할 때 일자리를 대체하기 보다는 개인의 업무 효율성을 향상하는 노동 보완적 기술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국제적 교역과 경쟁 속에서 생존해야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기술 발전에 제동을 거는 것은 현명하지 못할 것이다. 국가 측면에서는 대규모 노동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분야에서의 이직을 위한 직업 재훈련이, 개인 측면에서는 인공지능을 자신의 생산성 향상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 획득이 시급한 상황이다. 🌐

끝난 드라마가 계속 돈을 버는 이유 K-오리지널 IP의 생애 주기와 플랫폼 경제



〈케이팝 데몬 헌터스〉 팝업 스토어
© Natalia_photosoul / Shutterstock.com

글. 김치호
한양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호주 시드니 〈오징어게임〉 팝업 행사에 모인 관람객들
© Taras Vyshnya / Shutterstock.com

드라마는 끝났는데 돈은 끝나지 않는다. 요즘 대중문화 산업을 가장 잘 설명하는 문장이다. 예전에는 드라마가 방영되고, 시청률이 나오고, 마지막 회가 끝나면 흥행도 대체로 마무리되었다. 물론 재방송이나 해외 판매가 있었지만, 작품의 수명은 방송 기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지금은 다르다. 한 편의 콘텐츠는 공개가 끝난 뒤에도 계속 살아 움직인다. <오징어 게임>은 시즌제와 게임, 굿즈, 체험형 공간으로 확장되었고, <흑백요리사>는 출연 셰프의 식당 예약, 브랜드 협업, 외식 소비로 이어졌다. <폭삭 속았수다>처럼 지역의 정서와 풍경을 담은 작품은 촬영지와 관광 수요를 함께 움직인다. 콘텐츠가 끝난 뒤에도 광고, 라이선스, 굿즈, 관광, 리메이크, 시즌 2가 이어지며 새로운 수익을 만든다.

그렇다면 왜 어떤 콘텐츠는 공개가 끝난 뒤에도 계속 돈을 벌까? 답은 IP, 즉 지식재산권에 있다. 이제 콘텐츠의 경쟁력은 “얼마나 많이 시청되었는가?”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더 중요한 질문은 “얼마나 오래,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이다. 콘텐츠는 더 이상 한 번 소비되고 사라지는 상품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축적되는 자산이 되고 있다.

웹툰 한 편이 글로벌 콘텐츠가 되는 구조

최근 사례로는 2026년 6월 5일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참교육>을 들 수 있다. <참교육>은 공개 3일 만에 640만회의 시청 수를 기록하며 넷플릭스 글로벌 TOP 10 비영어권 쇼 1위에 올랐다. 한국을 포함한 10개국에서 1위를 차지했고, 48개 국가에서 국가별 TOP 10에 진입했다. 중요한 점은 이 작품의 출발점이 웹툰이라는 사실이다.

웹툰은 이제 드라마나 영화의 단순한 원작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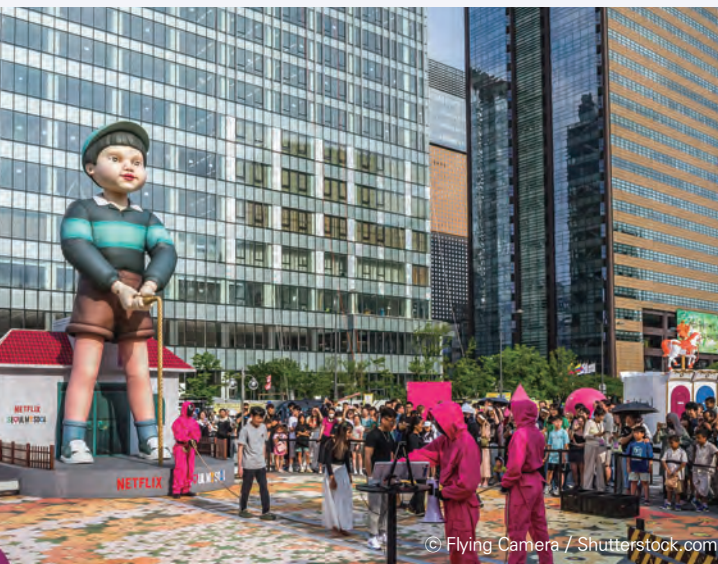
플랫폼 안에서 이미 독자 반응을 통해 검증된 데이터 기반 IP이다. 조회 수, 댓글, 별점, 공유량은 모두 시장 반응이다. 어느 장면에서 독자들이 열광했는지, 어떤 캐릭터가 팬덤을 만들었는지, 어떤 갈등 구조가 오래 소비되는지를 플랫폼은 이미 알고 있다. 과거의 제작사가 감각과 경험으로 흥행을 예측했다면, 지금의 콘텐츠 산업은 독자 데이터와 팬덤을 바탕으로 위험을 줄인다.

소지섭 주연으로 영상화되어 더욱 널리 알려진 네이버 웹툰 <김부장>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이 작품은 전직 특수요원 김부장이 딸을 찾기 위해 사건에 휘말리며 벌어지는 액션 서사를 중심으로 한다. 학원물인 <참교육>, 액션물인 <김부장>처럼 웹툰 IP는 장르의 폭도 넓다. 로맨스, 판타지, 스릴러, 학원물, 액션물, 일상극이 모두 영상화 후보가 된다. 웹툰 플랫폼은 말하자면 거대한 IP 실험실이다.

콘텐츠의 생애 주기는 끝나지 않는다

제조업 상품은 대체로 생산, 판매, 소비, 종료의 흐름을 따른다. 그러나 콘텐츠 IP의 흐름은 훨씬 길다. 기획과 제작을 거쳐 공개되고, 이후 팬덤이 형성된다. 팬덤은 숏폼 클럽을 만들고, 밈을 퍼뜨리며, 커뮤니티를 만든다. 이어 굿즈, 라이선싱, 게임, 공연, 전시, 관광, 해외 리메이크, 시즌제 제작으로 확장된다. 최근에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번역, 더빙, 예고편 제작, 팬 콘텐츠 재가공까지 더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콘텐츠는 한 번 팔고 끝나는 소비재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수익을 만들어내는 자산이 된다. 웹툰이 드라마가 되고, 드라마가 숏폼으로 확산되며, 캐릭터가 굿즈가 되고, 세계관이 게임이나 전시로 이어진다. 소비자는 작품을 보는 데서 멈추지 않는다. 관련 상품을 사고, 촬영지를 방문하고, 출연자나 캐릭터



서울 광화문 광장 <오징어 게임 3> 행사에 모여든 사람들

의 팬덤에 참여한다. 콘텐츠의 수명은 마지막 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하는 순간 다시 시작된다.

특히 앞서 말한 숏폼 콘텐츠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숏폼은 짧아서 강하다. 빠르게 퍼지고, 쉽게 공유되며, 참여를 유도한다. 그러나 숏폼이 오래 살아 남으려면 그 뒤에 단단한 원천 콘텐츠가 있어야 한다. 1분짜리 영상은 입구가 될 수 있지만, 그 입구 너머에 세계관과 캐릭터, 서사가 있어야 팬덤이 머문다. 결국 숏폼은 확산 장치이고, IP는 본체이다.

플랫폼은 콘텐츠의 수명을 연장한다

플랫폼 경제에서 중요한 것은 플랫폼마다 역할이 다르다는 점이다. 넷플릭스 같은 OTT는 콘텐츠를 전 세계에 동시에 공개한다. 유튜브와 틱톡, 인스타그램 릴스는 짧은 클립과 밈을 통해 작품을 다시 확산시킨다. SNS는 팬덤의 반응을 모으고, 커뮤니티는 소비자를 참여자로 바꾼다. 커머스 플랫폼은 굿즈와 협업 상품을

을 판매하고, 지도와 예약 플랫폼은 촬영지 방문과 관광 소비로 이어진다.

즉 플랫폼은 단순히 콘텐츠를 보여주는 창구가 아니다. IP의 생애를 연장하는 장치다. 하나의 작품이 OTT에서 공개된 뒤 유튜브에서 다시 소비되고, SNS에서 밈이 되고, 굿즈로 팔리고, 관광지로 연결되는 과정 전체가 플랫폼 경제이다. 콘텐츠 산업의 수익은 이제 한 플랫폼 안에서 완결되지 않는다. 여러 플랫폼을 거치며 계속 분화되고 증식한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이러한 흐름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다. K-팝, 애니메이션, 한국 전통 이미지가 결합되면서 작품 속 소재는 온라인 화제에 그치지 않고 실제 문화 소비로 이어졌다. 특히 국립중앙박물관 사례가 주목된다. 국립중앙박물관은 관람객 650만명을 넘기며 세계 3위권 박물관으로 부상했다.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K-콘텐츠와 결합하면서 박물관은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팬덤 관광의 목적지가 되었다. 박물관 굿즈, 전통문양 상품, 전시 관람, 주변 상권 소비가 연결되면 문화 콘텐츠는 실제 지역 경제 효과를 만든다.

재정정책은 무엇을 봐야 할까

이제 재정정책의 질문도 달라져야 한다. “콘텐츠 제작을 얼마나 지원할 것인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더 중요한 것은 “만들어진 IP가 얼마나 오래 살아남고, 그 수익이 어디에 축적되도록 할 것인가?”이다.

첫째, 원천 IP를 지키는 금융 인프라가 필요하다. 창작자와 중소 제작사는 초기 제작비가 부족하면 권리를 너무 빨리 넘길 수 있다. 제작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대신 장기 수익을 포기하는 구조가 반복되면, 흥행은 커져도 국내 창작 생태계에 남는 자산은 작아진다.

콘텐츠 펀드, 완성보증, 저리 융자, 투자 매칭 같은 제도는 단순한 제작 지원을 넘어 IP 권리를 오래 보유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둘째, 저작권과 라이선싱 구조의 투명성이 중요하다. 웹툰 작가, 웹소설 작가, 각색 작가, 제작사, 플랫폼, 유통사가 수익을 어떻게 나누는지 명확해야 한다. 2차 저작물, 해외 리메이크, 굿즈, 게임화 수익이 발생했을 때 원천 창작자와 제작사가 적절히 보상받아야 다음 IP가 나온다. 산업이 커지는 것과 창작 기반이 튼튼해지는 것은 같은 일이 아니다. 재정이 투입된다면 그 효과가 창작자와 국내 생태계에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셋째, 데이터와 글로벌 유통 역량을 함께 키워야 한다. 플랫폼 경제에서 데이터는 다음 작품을 기획하는 핵심 자산이다. 어느 국가에서 어떤 장르가 통했는지, 어떤 장면에서 시청자가 반응했는지, 어떤 캐릭터가 팬덤을 만들었는지는 다음 투자의 기준이 된다. 데이터가 특정 글로벌 플랫폼에만 축적되면 국내 제작사는 창작 역량은 갖고도 기획과 유통의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

넷째, 콘텐츠 팬덤을 지역경제와 연결하는 공공 인프라가 필요하다. 국립중앙박물관 사례처럼 공공 문화 기관은 K-콘텐츠 확산의 중요한 착지점이 될 수 있다. 박물관, 미술관, 지역 축제, 촬영지, 전통시장, 굿즈 상권이 연결되면 콘텐츠의 인기는 관광과 소비로 이어진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단순 홍보비가 아니다. 다국어 안내, 교통 접근성, 예약 시스템, 야간 개장, 지역 상품 개발 같은 세밀한 예산 설계이다.

좋은 작품을 넘어 오래 사는 IP로

K-콘텐츠의 경쟁력은 이제 좋은 작품 한 편을 만드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하나의 IP가 얼마나 다양한 플랫폼에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며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지가 중요해졌다. <참교육>이 보여준 것은 웹툰 IP가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단기간에 세계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다. <김부장>은 웹툰 장르의 폭과 영상화 자원의 다양성을 보여준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와 국립중앙박물관 사례는 콘텐츠가 온라인 흥행을 넘어 공공 문화자산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플랫폼 경제 시대의 문화정책은 콘텐츠 제작 지원을 넘어 IP의 생애를 연장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방향으로 진화해야 한다. 좋은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권리가 지켜지고, 데이터와 수익이 축적되며, 그 효과가 지역과 공공 문화자산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콘텐츠의 수명은 작품이 끝나는 순간 끝나지 않는다. 새로운 플랫폼에서 다시 소비되고, 다른 형식으로 재가공되며, 팬덤의 참여 속에서 계속 연장된다. 끝난 드라마가 계속 돈을 버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앞으로 K-콘텐츠의 진짜 경쟁력은 얼마나 많이 시청했는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살아남아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가에 달려 있다. 🌐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주인공들을 소재로 한 드론쇼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

www.nabo.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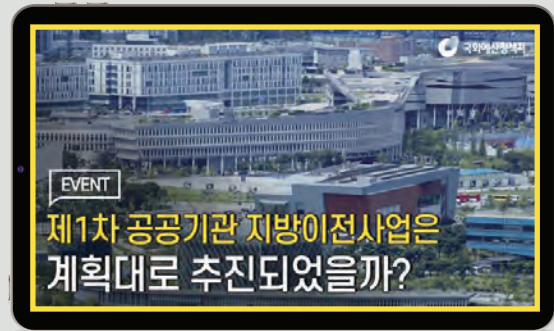


국회예산정책처 유튜브

www.youtube.com/@nabokorea



[읽어주는 NABO 보고서]
[대한민국 조세] 김사원의 즐거운
소비생활, 부가가치세 이야기 ▶



[읽어주는 NABO 보고서]
제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었을까? ▶



국회에산정책처 학술지
예산정책연구

논 / 문 / 공 / 모

논문 공모

상시모집

투고 자격

석사과정 이상

발간일

03.20 | 06.20 | 09.20 | 12.20

* 게재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 지급

국회에산정책처는 국회의 예산·결산 심의를 지원하고,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적인 연구·분석을 수행하는 재정전문기관입니다.

예산정책연구는 재정·경제, 조세 및 공공정책 등과 관련된
이론 및 정책논문을 발굴·게재하며, 2018년 10월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평가에서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예산정책연구에 게재할 우수한 논문을 공모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응모를 기대합니다.

제출방법

nabo.jams.or.kr [온라인 논문 투고 및 심사 시스템]

문의처

예산정책연구 편집위원회 (02-6788-4619)

홈페이지

www.nabo.go.kr/journal



NABO와 함께 즐기는 독자 참여 이벤트

NABO 재정퀴즈

1. 지방소비세는 중앙과 지방 간 수직적 재정격차를 완화하고 지방재정의 자주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0년에 도입된 지방세 세목입니다. 이는 별도의 고지서 없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이양하는 거시적 재정조정기능을 수행하는데요. 실질적인 지방분권 지원을 위해 도입 당시 5%였던 부가가치세 대비 안분 비율이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부가가치세 세수 총액 중 지방소비세로 전환되는 법정 비율은 얼마일까요?



※ 힌트: 국회예산정책처 유튜브 - [대한민국 조세] 감사원의 즐거운 소비생활, 부가가치세 이야기

- ① 11.0% ② 15.0% ③ 21.0% ④ 25.3%

2. 정부는 수도권 집중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자립형 혁신도시 건설을 목표로 2005년 6월에 제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당초 계획에 따르면 이전 대상 기관의 지방이전은 2012년까지 완료될 예정이었으나, 이후 계획 변경 및 이전재원 부족 등으로 인해 이전 완료가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제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인 105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완료된 시기는 언제일까요?



※ 힌트: 국회예산정책처 유튜브 - [읽어주는 NABO 보고서] 제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었을까?

- ① 2013년 ② 2015년 ③ 2017년 ④ 2019년

3. 우리나라는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인구 감소와 청년층 유출이 지속되면서 지역의 노동력과 경제 활력이 약화되는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특정 기금을 조성하여 연간 1조원 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 이러한 정책 목적을 위해 정부가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무엇인가요?



※ 힌트: 국회예산정책처 유튜브 - [읽어주는 NABO 보고서] 지방소멸 위기, 지역을 살릴 수 있을까?

- ① 지역균형발전기금 ② 지방소멸대응기금 ③ 지방교부세기금 ④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매달 NABO 홈페이지(www.nabo.go.kr)에서 NABO 재정퀴즈가 진행됩니다.
이번 호는 2026년 6월부터 8월까지의 재정퀴즈 문제입니다.

2026년 예산준추의 독자 퀴즈는 '재정퀴즈'와 '초성퀴즈'로 진행됩니다.
재정에 관한 퀴즈와 초성퀴즈를 풀어 이벤트에 참여해 보세요.
'재정퀴즈'와 '초성퀴즈' 모두 맞춘 정답자를 추첨하여 선물을 드립니다.

예산준추 초성퀴즈

2026년부터 <예산준추>에 독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초성퀴즈' 코너가 새로 마련되었습니다.
매호 흥미로운 재정·경제 이야기를 퀴즈로 만나보세요.
지면 속 단서를 찾으면 정답이 보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역마다 세금이 걷히는 규모가 달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도 차이가 생깁니다.
이에 중앙정부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재원을 배분하여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줄이고 공공서비스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무엇일까요?

초성 Hint

ㅈ

ㅅ

ㄱ

ㅅ

ㅅ

Q 참여방법

- 이메일 접수 tobo2701@naver.com
- 문의 NABO 기획예산담당관실 02-6788-4619
- 독자퀴즈 응모 기간 2026년 8월 14일(금)부터 9월 18일(금)까지

※ 선물 수령(문화상품권 3만원권)을 위해 휴대폰 번호를 꼭 적어주세요.



www.nabo.go.kr

NABO



건전한 재정 희망찬 미래